

교과서연구

제 59호

2010. 3

- 발행처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발행인 / 전찬구
- 편집기획위원장 / 김만곤
- 편집기획위원
김병규, 이화성, 김정호,
윤광원, 홍후조, 권영민

• 『교과서연구』는 한국도서잡지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본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06-9
번지 한국교과서연구재단빌딩
- 홈페이지: www.ktrf.re.kr
- 전화: (02) 2651-1950
- 팩스: (02) 2651-1954
- E-mail: editor@ktrf.re.kr

- * 표지 글씨 : 신두영
- * 편집 디자인 : (주)미래엔컬처그룹
국정교과서팀

● 권 두 언

- 2 _____ 교육 내용 행정의 성공 요건 / 이규석

● 특별 기획: 2010 교과서 선진화 방향의 구현

- 4 _____ 2010 교과서 선진화 방안 개요 / 이화성
11 _____ e-교과서 보급 활성화를 위한 소고 / 손병길
17 _____ 인정 도서 확대 방안과 과제 / 조난심
23 _____ 교과서 검정 심사의 한 방식으로서 채택 심사의 정착을 위한 정책 과제
/ 이인제
30 _____ 교과서 가격 자율화와 교과서 개발 정책의 방향 / 홍후조
36 _____ 교과서 채택 방법 개선 방안 / 진재관
42 _____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의 과제와 전망 / 김만곤

● 논 단

- 48 _____ 학교 평가를 활용한 학교 경쟁력 제고 방안 / 구자역
53 _____ 변혁의 시대, 교장의 역할 / 김영운
57 _____ 교육 변화의 주연, 선생님 / 문종국

● 정책 해설

- 61 _____ 2009 개정 교육과정, 어떻게 달라지나 / 권영민
66 _____ 창의적 체험 활동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시론 / 이광우
70 _____ 2009 교육과정의 특징 「환경과 녹색 성장」 / 이영식

● 연 재

- 74 _____ 러시아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제도 / 윤석주

● 교과서 편집자의 변

- 78 _____ 교과서적인 사람 / 양홍권

●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

- 82 _____ 음악 교과서 감상곡 둘러보기 / 김대원

● 탐 방

- 87 _____ 오늘의 교과서 출판인 - 송영석 해냄에듀 CEO

● 자 료

- 91 _____ 2010년도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92 _____ 국 검 인정 도서 구분 고시

- 100 _____ •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101 _____ • 「교과서연구」 원고 모집 안내
102 _____ • 「교과서정보관」 이용 안내

교육 내용 행정의 성공 요건




이규석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

교육은 미래를 대비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가장 중요한 국가적 사업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의 기본 설계도인 교육과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교육과정은 현재의 학생들이 앞으로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대, 기대되는 인간으로 육성시키는 데 필요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이 반영된 교육의 청사진이다. 그러므로 한 국가의 교육과정은 그 나라의 교육 방향을 규정하며, 더 나아가 그 나라의 장래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교육과정은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제안한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을 현장에 적용 가능하도록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업무를 장기간 담당한 경험이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을 지켜보는 소회는 남달랐다.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는 생각에서 그 요건이 되는 것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교육과정과 교과서 등 교육 내용에 대한 정책은 다른 정책과 달리 교육적이어야 한다. 정책의 개발과 정책의 집행, 그리고 추진된 정책의 평가도 역시 교육적이어야 한다. 이 점이 일반 행정이나 경제 또는 정치와 다른 점이다. 교육적이라는 의미는 정책의 형성, 집행, 그리고 평가에 있어 교육적 특성, 예컨대 효과의 장기성, 성과의 비가시성 및 평가의 곤란성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일반 행정에서는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 개발을 하고, 경제 분야에서는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를 반영하여 내일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기도 하며, 심지어 정치는 여론을 좇아 정무적 판단이라는 미명 아래 조령모개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 내용에 대한 정책은 조급하게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 되고, 우선 눈에 띄는 성과가 없고 평가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간과되어서도 안 된다. 최근 변화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효과는 동 교육과정을 적용받은 학생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쯤 우리 사회의 발전상으로 자연히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함보다는 오래 인내하며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꾸준히 정책을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정책의 형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정책이 집행되고 평가되는 매 순간마다 숙성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교육 내용에 대한 정책들이다.

둘째, 교육과정과 교과서 등 교육 내용에 대한 정책은 국민의 정신을 다루는 것으로서 탄탄한 인적·물적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난해 7월 필자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직에 보임을 받았을 당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담당하는 직원이 10여 명 내외인 것을 발견하고 적지 않게 놀랐다. 1980년대 초, 필자가 과학과 편수관으로 근무할 당시에 60여 명의 직원이 있어 각 교과별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실태를 상시 분석하고, 밤을 세워 가며 토론하여 각 교과 교육과정 정책 방향을 설정했던 기억 속의 조직과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 교과 교육과정 정책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다. 정책은 정책을 개발하는 활동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활동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정책을 개발하는 역할은 연구 기관이 담당할 수 있으나, 개발된 정책을 확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정부가 책무성을 가지고 수행해야 한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 조직을 만든다는 원칙만을 좇다 우선 가시적 성과를 쉽게 볼 수 없다는 조급함 때문에 건강한 국민의 정신을 길러야 한다는 정책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등 교육 내용 행정에 2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고 있는 점은 눈여겨 볼 점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교육 개혁의 중심에는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있어 왔다. 이 점은 교육과정의 개정이 중요한 정치적·사회적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예컨대, 광복 후 교육 요목이 제정되고, 휴전이 되면서 제1차로 교육과정이 작성되었으며, 516 군사 정변 후 제2차 교육과정 개정이 있었고, 유신 헌법이 제정된 후 제3차 교육과정 개정이 있었다. 비교적 최근에는 문민 정부 수립 후 531 교육개혁안에 따른 제7차 교육과정 개정과 이명박 정부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개편이 있었다. 현실 불만에 기초한 민원성 요구가 지속되고, 교육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 하는 국가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는 한, 이와 같은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교육과정 및 교과서 등 교육 내용을 통한 교육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어도 정책이 ‘교육 백년대계’라는 관점에서 보다 더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점과 질 높은 교육 내용을 설계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0 교과서 선진화 방안 개요



이화성 (전 교육과학기술부 교과서기획과 교육연구관)

2010년 1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우리나라 교과서에 대해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교과서 사용자(교사, 학생, 학부모 등)와 공급자(출판사, 저자, 교육청 등)의 불만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2010 교과서 선진화 방안’은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2008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해 오던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을 완성하여 이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필자는 2008년 5월부터 교과서기획과¹⁾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0 교과서 선진화 방안’²⁾을 추진 배경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I. 교과서 선진화 방안 추진 배경

‘2010 교과서 선진화 방안’의 추진 배경은 크게 보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 제도로 달라져야 한다.’라는 당위성과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를 미래형으로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필요성이다.

1.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되는 교과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취지인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권 신장을 위해서는 현장 교원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율성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과서 정책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정 또는 검정 도서를 인정 도서로 전환하였다.

교과용 도서에 대한 규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어떤 교과목의 도서를 국정 또는 검정으로 개발할지 정하여 고시하게 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기본 이념 구현 또는 아동의 발달 수준상 통일성이 필요하거나, 수요가 적어 민간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 국정 도서로 구분하여 개발하여 왔으나, 2010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서는 산업 현장 및 기술 발전의 속도에 맞추어 교과서를 해마다 개발하거나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동안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하여 왔던 고등학교 전문 교과와 교과서를 인정 도서로 전환하게 되었다.

2. 교과서 제도 선진화 필요성

우리나라 교과서는 그동안 많은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하여 왔으나, 저작자 및 출판사의 교과서에 대한 전문성이 제고되고, 교사, 학부모, 학생의 교과서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오랫동안 유지하여 오던 교과서 발행 및 가격 제도에 대해서도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번 2010 교과서 선진화 방안은 새로운 발행 및 가격 제도에 따른 후속 조치와 이에 따른 교과서 개발, 심사, 채택 등에 대한 개선안을 담고 있다.

‘2010 교과서 선진화 방안’은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2008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해 오던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을 완성하여
이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검정 제도 개선

검정 제도 개선의 주요 목적은 심사의 투명성 제고, 합격 종수 적정화,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 제고 등이며,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교과서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교과서 개발, 심사, 채택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1. 검정 신청 자격의 변화

최근까지는 검정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20 종류 이상의 도서를 발행한 실적’이 있는 출판사에게 검정 신청을 허용하여 왔으나, 2008년 8월 수정 공고를 통하여 2009년 검정 심사부터 출판사의 검정 신청 자격을 출판사 전체의 실적에서 ‘검정 신청 대상 도서 관련 실적’으로 변경하였다. 기존 신청 자격은 전 교과를 모두 개발하는 출판사에게 유리하고, 일부 교과목의 교과서만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전문 출판사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서와 관련된 실적을 기준으로 변경하게 된 것이다. 또, 기존 출판 실적 이외에 편집 인력 기준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검정 합격 후에도 제도 및 지식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교과서를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해당 교과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2010년 1월 검정 실시 공고문을 통하여 공공 기관에 대한 검정 출원을 허용하였다. 최근 기존 교과서에 대한 수정 보완을 요구하고 교육용 자료를 개발하는 공공 기관이 많아졌다. 우수한 교육용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할 역량이 있는 공공 기관의 참여는 교과서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공 기관³⁾의 검정 신청을 허용하게 되었다. 다만, 도서의 질에는 내용뿐만 아니라 기획, 편집, 인쇄 등에 대한 전문성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출판사와 공동으로 검정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는 교과서 내용에 대한 공공 기관의 전문성과 교과서 발행에 대한 출판사의 전문성이 융합되어 교과서 질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저출산 현상에 따라 학생 수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검정 심사에 중학교 1학년 수학, 영어 각각 42종이 검정 신청⁴⁾하였다. 이전에는 합격 종수를 5종 이내, 8종 이내로 제한하였으나, 1995년 2월 28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 시 동 조항이 폐지되어 더 이상 합격 종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는 합격 종수 적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검정 신청 자격을 변경하였다. 즉, 동일 도서에 대해서는 발행사(저작자)가 1종만 신청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초·중학교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서는 2종까지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과다한 검정 출원으로 인한 출판사 간 과당 경쟁, 이로 인한 출판사 경영 악화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이다. 또, 저작자 또는 발행사의 복수 출원, 이로 인한 복수 합격은 ‘다양한 교과서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

려는 검정제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2. 심사의 투명성 제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신설된 ‘한국 근 현대사’ 교과서가 검정 도서로 개발되었다. 한국 근 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갈등이 진행되면서 2002년 국정감사에서 검정 위원 명단이 언론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검정 위원들은 명단 공개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퇴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검정 위원 명단 비공개 원칙이 고수되고 있던 검정 제도사(史)에서 ‘2010년 검정 심사부터 검정 위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한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심사 과정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명단은 합격 공고 이후에 공개하기로 하였다. 검정 위원 공개에 따라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의 책무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우수 자원이 검정 위원 위촉을 꺼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우수한 인력풀을 검정 위원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의 성명과 소속을 해당 검정 도서의 판권란⁵⁾에 게재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검정 위원 인력풀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며, 교과용 도서 심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국정 도서에 비하여 그동안 명단이 비공개됨으로써 검정 심사 참여 실적을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없었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2009년 검정 심사부터는 교과용도서(검정)심의회에서 합격 도서에 대해 수정 보완 권고한 내용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는 검정 기준에 의거 합격 도서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심사본 당시 수록된 내용과 심의회 수정 보완 권고에 의해 발행사(저작자)에서 수정 보완한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해당 도서 발행사(저작자)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검정교과서(<http://www.ktbook.com>)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www.kice.re.kr>)의 홈페이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과정 교과서 정보 서비스(<http://cutis.mest.go.kr>)를 통하여 도서별(발행사별)로 수정 보완 내용이 게재되어 있다. 앞으로는 현장 교원 및 학생들이 교과서의 종류에 관계없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국검정교과서 홈페이지(e-자료실 수정 보완 자료실)에 국정 및 인정 도서의 수정 보완 내용도 함께 게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3.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 제고

교과서 주문율이 교과서의 질에 비례할수록 교과서 발행사는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투자할 것이며, 만약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의 질과 관계없는 다른 조건에 의해 교과서가 선정된다면 발행사의 좋은 교과서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은 교과서의 질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불공정 행위의 기준과 이에 따른 처벌 기준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초·중등 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구역 안의 학교장에게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 도서를 선정함에 필요한 도서의 편찬 방법 및 내용 등 도서별 특징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과서 선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는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동 조항을 개정하여 시·도 교육감의 참고 자료 제공을 의무화하고, 교과서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초·중학교 단계에 대하여 해당 교육장이 교과서 채택을 위한 도서별 ‘권장 목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교과서 선정에 대한 자율권 보장을 위해서 교육장은 ‘권장 목록’ 이외의 도서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따라야 하는 행정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소속 학교에 안내할 필요가 있다.

Ⅲ. 인정 도서 확대

미래의 창의적인 ‘산지식’을 교과서에 적시에 반영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국정 및 검정 도서를 주축

미래의 창의적인 '산지식'을 교과서에 적시에 반영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국정 및 검정 도서를 주축으로 하는
 우리나라 교과서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며, 국 검정 도서 체제보다는
 인정 도서 체제가 현장 교원의 교과서 개발 참여가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선택 과목 국 검정 도서를 인정 도서로 전환하게 되었다.

으로 하는 우리나라 교과서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며, 국 검정 도서 체제보다는 인정 도서 체제가 현장 교원의 교과서 개발 참여가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선택 과목 국 검정 도서를 인정 도서로 전환하게 되었다.

1. 전문계고 교과서의 인정 전환

2007년 8월 7일자 구분 고시⁶⁾를 통하여 전문 교과 상업 정보 계열 중에서 1책(전산 회계), 과학 계열 중에서 1책(과제 연구)을 국정 도서에서 인정 도서로 전환하였다.

2009년 1월 21일자 구분 고시를 통하여 우리 부는 '교과서 개발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 교과 국정 도서의 일부를 인정 도서⁷⁾로 추가 전환하였다. 과학 및 예술 계열 전문 교과 국정 도서를 모두 인정 도서로 전환하였고, 외국어 계열의 경우에 교육과정상 필수 과목을 제외한 과목의 도서를 인정 도서로 전환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 교과서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0년 1월 11일자 구분 고시를 하면서 2010년 새로 개발 착수하여야 하는 전문계 고등학교 101종의 국정 도서를 인정 도서로 추가 전환하였다. 이는 고등학교 전문 교과(군)의 경우, 국가에서 개발하는 국정 도서에는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다양한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학생 수준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 및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추어 교과서를 해마다 개발하거나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인정 도서로 처음 개발하여야 하는 2010년⁸⁾에는 민간의 개발 수요가 적은 전문계 고등학교 교과서 개발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협의하여 도서별로 개발 주관 교육청을 지정하고 개발비를 정부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검정 도서이던 전문 교과 8종⁹⁾에 대해서도 인정 도서로 전환하게 되었다.

2. 보통 교과 고등학교 선택 과목의 인정 전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는 공통 교육과정이 되고, 고등학교는 선택 교육과정이 되었다. 교육과정 개정 취지에 맞추어 보통 교과인 고등학교 선택 교과(군)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 도서 전환이 논의되었다. 이미 교과서 개발이 완료된 수학, 영어 교과(군) 등¹⁰⁾과 국어, 사회 교과(군)을 제외한 교과(군)이 논의의 대상이었다. 교과서 선진화 T/F, 정책 토론회, 시·도 교육청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전에 검정 도서이던 과학 교과(군) 9책, 체육 교과(군) 3책, 예술 교과(군) 5책, 기술 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 12책을 인정 도서로 전환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교육과정에 제시된 대부분¹¹⁾의 교과목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발하거나 심사하여 학교 현장에 배부하여 왔고, 인정 도서는 국정, 검정 도서로 개발된 도서가 없는 소수 과목 또는 국정, 검정 도서는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이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보조적이거나 보완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치로 고등학교 과학, 체육, 음악, 미술 등과 같은 보통 교과 교과서를 국가에서 개발하거나 심사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실상 인정 도서가 교과서의 주류로 자리 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3. 인정 도서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

인정 도서는 개발, 심사 등의 과정이 국 검정 도서보다 유연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 교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생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수준의 교과서 출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제도가 유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질 관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정 도서 확대에 따른 질 관리를 위하여 인정 도서 과목별 감수 기관을 지정 운영할 방침이다. 시·도 교육청이 인정 도서 신청을 받으면 내용 심사와 심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내용 심사의 단계에서 외부 전문 기관의 감수를 받게 되면 인정 도서의 내용 오류를 줄일 수 있고, 교육청의 심사에 대한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검정 도서에서 인정 도서로 전환된 도서는 민간 출판사의 개발 수요가 있어 교육청에서는 개발보다 심사, 승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도서에 대하여 감수를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민간의 개발 수요가 적어 교육청이 주관하여 개발하게 되는 전문 교과 교과서의 경우에는 교육청이 개발 단계에서 심의회 등을 통하여 내용을 심사하게 되므로 감수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전문 기관 감수 여부는 교육청의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교육청에서는 전문 기관의 직접적 감수 이외에도 전문 기관 인력풀을 교육청 개발 도서의 집필 또는 내용 심사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 등 다양한 측면으로 인정 도서의 질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IV. 가격 자율화 후속 조치

1. 가격 폭등 우려에 대한 대비책

2010년 1월 새로 검정 실시 공고한 고등학교 선택 과목 21종은 2009년 8월 개정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과서 가격 자율화 및 외형 체제 자율화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가격 및 외형 체제 자율화에 따라 교과서 쪽수가 증가하고 교과서 가격이 일부 상승될 수 있다. 다만, 교과서 질 개선과 무관한 가격 폭등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발행사가 결정한 가격에 대해서 교과용도서(가격 결정 및 발행)심의회에서 가격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¹²⁾ 이는 교과서 가격 자율화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교과서 가격 결정에 대한 시장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본다.

또, 교과서 가격 자율화에 따라 검정 도서 채택 제도를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금까지 교과서 채택에 대하여 단순히 구입비를 정산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여 온 교육청(지역 교육청 포함)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청에서 소속 학교 등에 교과서 선정을 위한 ‘평가 자료’ 또는 ‘권장 목록’을 제시함으로써, 교과서의 질과 가격을 동시에 고려한 교과서 채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가정 학습용 e-교과서 보급

외형 체제가 자율화되면 교과서에 풍부한 내용을 게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교과서가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서책형 교과서를 집에 가져가지 않아도 가정에서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을 수록한 CD를 서책형 교과서와 함께 제공하기로 하였다. 우선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서 2011년 3월부터 적용하고, 향후 적용 결과에 따라 다른 교과목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듣기 자료가 개발되어 있는 영어의 경우, 교과서 해당 페이지를 보면서 듣기 자료를 재생하여 듣거나, 듣기 대본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면 학생들의 듣기 능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학의 경우, 수학 교과서를 공부하다가 문제를 풀기 위해 해당하는 수학 익힘책 페이지로 이동하게 구성할

교과서 개발 및 심사의 무게 중심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지금까지 일반 행정 중심으로 조직, 운영되어 오던 교육청 조직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또, 교육청에서는 예산 소요량을 산정하고, 교과서 구입 보관 관리에 대한
단위 학교의 책무성을 보다 강화하고, 교과서 물려주기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수 있다. 국어의 경우, 초등은 교과서 해당 페이지에서 ‘더 알아보기’를 위해 지도서의 내용을 일부 제시할 수도 있고, 중등에서는 생활 국어와 연계하여 구성함으로써 학생들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교과서에 수록할 수 있는 내용 범위는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고, 초등의 경우 지도서까지, 영어의 경우 듣기 자료(대본)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는 당초 심의(심사)된 교과용 도서 내용 이외의 것을 게재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별도 심의(심사)에 대한 부담(시간 및 재정) 및 발행사 간 과당 경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책형 교과서의 내용을 CD 등 저장 매체에 담아서 제공하기로 한 이유는 교과용 도서에 대해 특례(원저작자 동의 없이 게재하고 사후 보상)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저작권법 제25조¹³⁾는 저작물을 교과서에 게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이를 전승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V. 맺음말

향후 교과서 시장에서는 인정 도서가 점차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 제도의 주류로 진입한 인정 도서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인정 도서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현장 교원의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면 지금과 같이 관행적으로 발행사의 손길을 거쳐 거의 완성된 교과서로 인정 신청하도록 하기보다는 시·도교육청 지침 개선 등을 통해 원고본에 대해서도 인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정 승인한 도서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교육청이 발행사를 선정하여 발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국정 검정 도서 위주로 되어 있는 주문 공급 체제에 인정 도서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 개발 및 심사의 무게 중심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지금까지 일반 행정 중심으로 조직, 운영되어 오던 교육청 조직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또, 교육청에서는 교과서 구입을 위하여 학교급 및 학년별, 학생별, 학교별 예산 소요량을 산정하고, 교과서 구입 보관 관리에 대한 단위 학교의 책무성을 보다 강화하고, 교과서 물려주기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교과서 정책은 학교급, 교과별, 지역별, 학생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정교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모든 학교급, 모든 교과에 부합되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 적용 시기와 범위를 정할 때에도 점진적, 연차적으로 적용하여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010 교과서 선진화 방안이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과서 정책을 수립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시

도 교육청 관계자, 교과서 개발 및 심사에 참여하는 현장 교원, 교과 교육 전문가, 교과서 발행 공급에 참여하는 출판사 관계자, 교과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활용하는 현장 교원 및 학생(학부모)들의 교과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분들이 최근에 이루어진 교과서 정책 변화를 이해하는 데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9). 2010년 교과서 제도 선진화 방안(2009. 12. 28., 장관 결재).
- 교육과학기술부(2010). 초·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제2010-1호, 2010. 1. 11.).
- 교육과학기술부(2010).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 발표(2010. 1. 12일자 보도 자료)
- 이화성(2009). 인정 도서 확대 정책에 따른 해결 과제, 『교과서 연구』 제57호. pp. 10~18.

- 1) 2008년 5월 당시 직제는 '교과서선진화팀'이었음.
- 2) 2009년 12월 28일 장관 결재를 받고 이를 2010년 1월 12일자 보도 자료로 배부하였음.
- 3) '공공 기관'의 범위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 법인,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 기관'으로 정함.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 단체는 기본적으로 공공 기관의 범위에 들지 않음.
- 4) 검정 합격 발행사가 (사)한국검정교과서를 통해 공동으로 발행하고 교과서 판매에 따른 이익금을 도서별 주문 부수에 관계없이 발행사별로 균일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인해 출판사별 복수 출원 경향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5) 교과서 뒷면지 등에 저작자, 발행사 등을 표기하는 지면을 '판권란'이라고 함.
- 6)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과목별 도서를 어떤 종류(국정, 검정, 인정)로 개발할지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는 것으로서, 일명 '(국·검·인정) 구분 고시'라고 부름.
- 7)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3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심의회(시·도 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도서로서, 일명 '심의 없는 인정 도서'라고 부름. 시·도 교육청 인정 도서 승인은 내용 심사 및 인정도서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데, '심의 없는 인정 도서'의 경우 인정도서심의회의 의결보다는 내용 심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음.
- 8)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 교과과는 2011년에 최초로 적용하여야 함. 학생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는 2010년에 교과서 개발이 완료되어야 함.
- 9) 검정 도서에서 인정 도서로 전환된 전문 교과 교과서는 원가 회계, 세무 회계, 무역 영어, 기업과 경영, 기업 자원 관리, 전자 상거래 일반, 창업 일반, 멀티미디어 일반임.
- 10)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필수 과목이었던 국어, 도덕, 사회 등은 2008년 8월 30일 검정 실시 공고문에 따라 2009년 검정 심사 후 2010년 3월 적용 준비가 완료된 상태임. 수학 및 영어 교과(군)의 모든 과목은 2006년 8월 29일 부분 개정 고시(제2006-75호)된 교육과정에 따라 2009년 이미 현장에 적용되었거나, 2010년 3월 적용 준비가 완료된 상태임.
- 11) 교육과정에 제시되었지만 국가에서 국·검·인정 도서로 개발하지 않은 도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실기 과목임. 예를 들면, 고교 보통 교과 중에서 음악 실기, 전문 교과(과학 교과) 중에서 과제 연구, 워크숍 등은 교육과정에 제시되었지만 국·검·정 도서로 구분하거나 개발하지 않았음.
- 12)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2조임.
- 13) 저작권법 제25조 (학교 교육 목적 등의 이용)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 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교과서 보급 활성화를 위한 소고



손병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석연구위원)

I. 서론

2010년 1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창의적인 ‘산지식’을 제공하고, 학습자 친화적인 미래형 교과서 보급”을 주요 골자로 한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 방안 수립의 배경에 깔려 있는 문제의식에는 “많은 지식이 요약 압축된 교과서를 이해하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참고서를 구입해야 했으며, 우리는 미래 사회로의 변화를 선도해 나갈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해야 하는데, 미래의 창의적인 ‘산지식’을 교과서에 적시에 반영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국정과 검정 교과서가 주축을 이루는 현행 교과서 시스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1년 국어, 영어, 수학 과목부터 가정에서도 활용 가능한 e-교과서를 기존 서책형(종이) 교과서와 함께 CD 등의 형태로 학생들에게 보급하기로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e-교과서를 보급함으로써 첫째, 학생들이 학교에 책을 두고 가정에서는 e-교과서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무거운 책가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둘째, 향후 e-교과서는 정보 기술(IT)의 발달에 따라 개인용 모바일(mobile) 형태로 활용할 수 있어, 각종 멀티미디어에 익숙한 오늘날의 젊은 학습 세대에게 ‘보다 친밀한(friendly)’ 교과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는 e-교과서의 가격은 기존 서책형 교과서 가격에 포함하여 반영할 예정이며, 의무 교육인 초·중등학생에게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고등학생은 저소득층에 대한 교과서 구입비 지원 확대를 검토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이 외에도 교과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함께 발표하였다. 이 중에서 서책형 교과서와 e-교과서를 공식적으로 함께 보급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한 정부의 교과서 정책의 진일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e-교과서를 현재 연구, 개발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와 다른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스스로 발전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디지털 세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음에도 변화와 발전에 한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e-교과서는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1월 12일자 발표에 따르면, 참고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내용이 풍부한 교과서를 개발하게 되면 교과서 분량이 많아져 휴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서책형 교과서를 사용하고, 가정에서는 e-교과서로 학습할 수 있도록 e-교과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e-교과서는 풍부한 내용을 담은 서책형 교과서를 디지털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개발되어 보급되는 e-교과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교과서의 개념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디지털 교과서 체제로 발전해 가는 과정의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 과도기적 상황에 따라 개발되고 보급될 e-교과서가 보다 학습자 친화적이면서도 교육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e-교과서의 개발, 보급 및 활용에 대한 몇 가지 변수

교육과학기술부는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 대하여 2011년부터 기존 서책형 교과서 보급 시 e-교과서를 함께 제공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여 다른 교과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e-교과서가 개발, 보급, 활용될 과정을 예상하고, 이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변수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e-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와 달리 특정 기술이 있어야 활용할 수 있다.

e-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와 달리 읽거나 보는 등 교과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CD로 제작되어 보급되는 경우를 고려해 보면, 최소한 컴퓨터 또는 e-book 리더기, CD 플레이어, e-교과서를 읽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 소프트웨어 등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컴퓨터를 통해 e-교과서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적 방향으로 하는 경우, 가정에 컴퓨터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컴퓨터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컴퓨터 기종과 성능 등이 실제 활용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서책형 교과서와 e-교과서에 수록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와 형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무리 풍부한 내용을 담은 서책형 교과서를 만든다고 해도, 인쇄 자료인 서책형 교과서에 담을 수 있는 자료는 시각 자료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즉, 영상 자료나 음성과 음향 자료는 서책형 교과서에 담을 수 없다. e-교과서가 학습자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친화적이 되기 위해서는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서책형 교과서에 담기지 않은 동영상이나 노래 등이 e-교과서에 담겨 있다면, 가정에서 e-교과서를 활용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사용한 서책형 교과서와 다른 교과서를 사용하는 결과가 된다.

만약, e-교과서에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자료 등이 수록되지 않고, 서책형 교과서와 똑같은 내용의 자료만 수록한다면, e-교과서가 서책형 교과서가 제공하지 못하는 학습 지원 내지 촉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서책형 교과서와 e-교과서로 이원화하는 경우 학습자의 학습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학생들이 서책형 교과서를 이용하는 행태를 보면, 서책형 교과서에 직접 표기하고, 여러 가지 색깔이나 굵기의 연필,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기도 한다. 나아가 요약이나 추가 정보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한다. 그러나 서책형 교과서를 학교에 두고, e-교과서로 집에서 학습하는 경우에 학교에서 학습하는 동안 생산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는 학습의 연계성을 약화시켜 학습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다양한 개발자가 참여함에 따라 e-교과서 개발과 보급에 필요한 기술적 문제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새로운 교과서 정책은 검 인정 교과서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e-교과서를 개발하게 될 개인, 기관 출판사는 매우 많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 개발자가 활용할 기술은 매우 다양할 것이다. 만약, 서책형 교과서와 달리 멀티미디어 자료가 e-교과서에 포함되는 경우, 예를 들어 국어나 영어의 경우 음성 인식이나 발성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자료를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모두 같은 기술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 교과서의 내용이 아닌 소프트웨어가 e-교과서와 함께 보급되어야 하며, 교과서 개발자에 따라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구비해야 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 간의 충돌, 메모리 부하 과중 등 컴퓨터 운영에 지장을 야기할 수도 있다. 기술 표준으로 이러한 기술적 문제를 해소 또는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나, 시장 경제의 원칙과 기술 발전의 추세 등에 비추어 볼 때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

다섯째, e-교과서의 유지, 보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서책형 교과서의 경우 오류, 오 탈자, 변화된 사실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개정판을 내고 있다. 서책형 교과서의 개정에 따라 e-교과서도 개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서책형 교과서를 그대로 디지털화하는 경우라면 문제의 소지가 적으나, 그렇지 않고 e-교과서에 일부 다른 자료가 포함되는 경우에 그

e-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와 달리 읽거나 보는 등
교과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CD로 제작되어 보급되는 경우를 고려해 보면,
최소한 컴퓨터 또는 e-book 리더기, CD 플레이어, e-교과서를
읽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 소프트웨어 등이 필요하다.

자료 자체의 질 관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 심의 외에 디지털 자료의 기술적 심의가 필요하다.

여섯째, 명확하지는 않으나 e-교과서가 인터넷 등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상호 작용 허용 여부에 따른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

정보 통신을 제한하는 경우는 e-교과서로서 다양한 가능성을 살리지 못하게 된다. 학습자의 학습의 진행에 따른 적합한 자료의 지속적 제공이 불가능하게 되며, 학습자와 교사나 다른 학습자 등과의 정보 교류도 제약된다. 그러나 상호 작용 허용에 따른 다양한 문제 상황은 피할 수 있다.

상호 작용을 허용하는 경우에 e-교과서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개선, 새로운 자료의 신속한 제공,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와 정보 교환 등이 가능한 장점이 예상되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책형 교과서와 다른 모습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전혀 다른 모습의 e-교과서로 발전함으로 인한 혼란도 예상된다.

앞으로 e-교과서를 개발하여 보급하게 된다면, 다음【표 1】에 열거한 점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분명한 원칙을 수립하고, 개발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1】 e-교과서의 개발과 보급에 따른 고려 사항

구분	고려 사항
교과서 접근 기반	e-교과서 활용 전용 하드웨어 여부 e-교과서용 소프트웨어 종류와 규격 가정의 컴퓨터 보유 유무 등
e-교과서 수록 자료	e-교과서와 서책형 교과서의 자료 동일성 여부 e-교과서 멀티미디어 자료 수록 여부
e-교과서 활용 학습	e-교과서와 서책형 교과서 병행 사용의 경우 연계 단절 문제 학습자의 학습 행태의 변화 등
e-교과서 개발 기술	e-교과서 개발 관련 기술의 다양화에 따른 복잡성의 문제 e-교과서 개발 기술의 진화 발전에 따른 문제
e-교과서 유지 보수	e-교과서 내용의 유지 보수 e-교과서 관련 기술의 유지 보수
e-교과서 활용 시 상호 작용	e-교과서 활용 시 상호 작용 허용 여부

Ⅲ. 효과적인 e-교과서 보급을 위한 제언

e-교과서는 단순히 서책형 교과서를 그대로 디지털화하여 CD 등의 매체에 저장하여 보급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해결하거나 사전에 결정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 앞에서 e-교과서가 보급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또는 고려 사항을 살펴보았다.

다음에서는 몇 가지 상황을 상정하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e-교과서 보급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1. 전용 단말기 없이 e-교과서를 보급하는 경우

기존의 e-book의 경우, 아마존의 kindle이나 삼성과 교보가 공동 개발 보급하고 있는 SNE-60K와 같이 전용 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와 일반 PC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 e-book이 있다. e-교과서를 후자와 같이 보급하는 경우에 개발자마다 각기 다른 규격과 기능을 가진 e-교과서를 개발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e-book 제작을 위한 다양한 e-book 제작용 소프트웨어가 판매되고 있으며, e-book 제작을 대행해 주는 업체도 많이 활동하고 있다. 현재까지 e-book은 대체로 자바 스크립트(Java Script)나 플래시(Flash)를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소프트웨어의 버전은 다양하며, 가정에 보급된 PC에 이들 소프트웨어가 작동한다는 보장도 없다.

e-교과서가 서책형 교과서를 그대로 디지털화하는 것이라고 해도, 개발자가 서책형 교과서를 디지털화함에 있어 인쇄 자료를 쉽게 PDF와 같은 형식의 자료로 전환해 주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전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는 있으나, 학습자가 전환된 자료를 읽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e-교과서 개발과 보급을 위해 별도의 기반을 조성하지 않는다면 기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나 기술을 활용하여 e-교과서를 개발해야 한다. 이 경우 e-교과서 간의 호환성은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나 단일 기술로 e-교과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e-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자료 처리와 e-교과서를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기능 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문제도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독점 등의 경제적, 정치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또, 기술 발전의 제약이 야기될 수 있는 점 등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기존의 다양한 기술과 디지털화에 따른 자료 포맷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국가적으로는 e-교과서 간의 호환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화 등을 사전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e-교과서와 서책형 교과서의 내용의 동일성 문제

e-교과서를 서책형 교과서를 그대로 디지털화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면, 현실적으로 e-교과서를 개발, 보급하여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익을 상당 부분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쇄 자료인 서책형 교과서에 담을 수 있는 자료의 형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문자, 도표, 그림, 사진 등에 한정된다. 디지털 세대인 학생들에게 친화적 교과서가 되는 데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서책형 교과서를 그대로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e-교과서가 지닐 수 있는 가능성을 극히 제한하는 것이 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서 e-교과서를 디지털 교과서와 다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습자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동영상이나 소리 등의 자료가 필요하므로 이를 허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디지털 교과서가 지향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학습자에게 필요한 자료가 담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교과서가 서책형 교과서를 그대로 디지털화하는 것이라고 해도,
 개발자가 서책형 교과서를 디지털화함에 있어
 인쇄 자료를 쉽게 PDF와 같은 형식의 자료로 전환해 주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전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는 있으나,
 학습자가 전환된 자료를 읽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책형 교과서와 e-교과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학습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향후 e-교과서를 개발할 때에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수록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e-교과서의 보급

e-교과서를 개발하여 보급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보급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서책형 교과서 보급과 같은 방식과 정보 통신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이 있을 수 있으며,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하여 보급할 수도 있다.

e-교과서를 서책형 교과서와 같은 방식으로 하더라도 e-교과서 저장 매체로 무엇을 활용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대표적인 보조 기억 장치로 CD와 USB를 생각할 수 있다. 최근 보급되는 CD의 경우, 700 MB 제품은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고, 870 MB 제품은 USB에 비해 가격에서 이점은 별로 없다. USB의 경우, OS의 종류와 버전에 따라서 사용에 일부 불편이 있으나, 최근 가격 대비 용량이 급격히 좋아지고 있다. 휴대의 편리성이나 다른 정보 통신 기기와의 연계성이 우수한 면이 있다. 특히, 최근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넷북 등은 CD 플레이어를 장착하고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어서 USB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 등을 통해 e-교과서를 보급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e-교과서 전체를 온라인으로 보급하는 방법과 CD나 USB 같은 저장 매체와 병행하는 방법이 있다. 온라인으로 보급하는 경우, e-교과서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와 확인, 과금, 전송권 확보 등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삽화, 그림, 음악, 시 등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하여 서책형 교과서에 수록하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 사용 권한을 확보한 경우는 별도로 원저작물의 디지털화와 같은 가공과 변환, 그리고 인터넷 등을 통해 전송하기 위한 전송권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 저작권 협상이나 저작권료 공탁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

동시에 가정에 e-교과서를 활용함에 필요한 기기나 장비를 보유하지 못한 학생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정에 PC가 없는 학생에 대해서는 서책형 교과서를 한 권 더 제공하거나, PC를 대여 또는 리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 컴퓨터 공동 이용 공간과 시설의 운영 등을 검토할 수도 있다.

4. e-교과서의 유지, 보수

e-교과서는 보급된 이후에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서책형 교과서가 수정, 보완, 개정된다면 e-교과서는 당연히 바뀌게 된다. 이때, 수정, 보완한 결과를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서책형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CD나 USB 등의 저장 매체에 수정, 보완한 내용을 담아 보급하거나, 온라인으로 보급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학생 개개인이 수정, 보완된 내용

을 받아 e-교과서를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CD의 경우 다시 쓸 수 있는 CD로 보급해야 하며,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유지, 보수 절차와 기준 등에 있어 서책형 교과서와 다른 변수가 있다. 예를 들어, 서책형 교과서에 담지 못하는 동영상 등의 자료가 담기거나, e-교과서에 수록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도구 소프트웨어 등이 같이 포함되는 경우에 이들 자료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심사가 더 필요하다. 특히,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경우에 내용 심사가 아닌 기술적 심사가 필요하다. 수정, 보완하거나 개정한 e-교과서를 보급할 때에 인터넷 등 통신을 활용하는 경우, 보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e-교과서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와 확인, 과금, 전송권 확보 등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e-교과서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정부 차원에서 향후 각각의 문제와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e-교과서 개발과 보급에 앞서 분명하게 정리해야 할 문제가 있다. e-교과서를 개발하여 보급한 이후에 교사와 학생이 e-교과서를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그 결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과서가 이원화되는 경우, 학교와 가정 사이의 학습에서 학생들 사고와 행동의 단절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학교에서 서책형 교과서를 활용한 학습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료나 정보가 가정에서 e-교과서를 활용하는 상황에 연계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단순히 서책형 교과서를 디지털화한 e-교과서는 디지털 세대인 학생들에게 별다른 흥미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교과서에 대한 접근과 활용에 불편을 주고, 학습권의 차별을 야기할 소지도 있다.

학습자가 주도적, 능동적으로 학습에 임하고,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배우고, 응용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을 갖춘 인재를 기르려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서책형 교과의 틀을 뛰어넘는 e-교과서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기술적 문제, 법 제도적 문제 등에 대하여 지금부터 체계적,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는 e-교과서에 포함된 시, 그림, 음악 등의 저작물의 가공 또는 변환 및 전송에 필요한 권한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만약 이러한 저작권 관련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시간과 노력이 e-교과서의 개발과 보급에 있어 사회적으로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저작권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저작자의 저작권 보호와 동시에 저작물 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사회 경제적 효용을 형평성 있게 확보하는 수준에서,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 적정한 비용 대비 효과를 얻도록 교육을 위한 저작물의 활용을 좀 더 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저작권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저작권 관련 문제들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사회적 기술적 제 문제의 도출과 이의 해결 과정을 통해 개선된 제반 정책, 기술, 법령 및 제도 등은 향후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활용을 위한 준비 및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선진 교육 체제로의 전환에 있어 핵심적 기반이 될 것이다. 

인정 도서 확대 방안과 과제

조난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연구본부장)



1. 인정 도서 중심 체제로의 전환

얼마 전 필자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운영에 대하여 듣는 기회가 있었다. 그 학교는 자율적으로 다양한 교육 활동을 계획하여 실천함으로써 많은 학생이 오고 싶어 하는 학교였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의 발언 중에 특히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다. “우리 학교 교과 지도 교사들이 교과서를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질문해 온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수요에 맞게 교과목을 개설하고, 학생들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교수 학습 내용과 자료를 준비하여 가르치는데, 실질적으로 교과서가 활용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은 차라리 교과서를 구입하지 말고, 학교에서 필요한 다른 자료를 활용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제7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제도로는 해당 교과에 국정이나 검정 도서가 있으면 학교에서 그것을 사용해야 하므로 교과서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우리의 경직된 교과서 제도와 자율화, 다양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고등학교 현실과의 괴리를 잘 보여 주는 사례이다. 현재 모든 고등학교가 이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 교과서 제도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점에서 지난 1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2010년 1월 12일)을 발표한 것은 매우 적절하고 전향적인 교과서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교과부에서는 “미래 사회로의 변화를 선도해 나갈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해야 하는데, 미래의 창의적인 산지식을 교과서에 적시에 반영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국정 도서와 검정 도서가 주축을 이루는 현행 교과서 시스템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천명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교과부가 고시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걸맞은 새로운 교수 학습 자료로서 교과서상의 구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서 중요한 정책 변화의 하나가 바로 ‘인정 도서의 확대’이다. 교과부는 2011년부터 국정 도서 145종(특목고 및 전문계고)과 검정 도서 39종(고교 과학, 음악, 미술, 체육 교과와 선택 과목) 등 총 184종의 도서를 인정 도서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국정과 검정 도서 위주였던 우리 교과서 체제가 비로소 인정 중심의 교과서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과부는 향후에도 고등학교 전문 과목의 교과서를 모두 인정으로 전환하고, 초·중 고등학교의 보통 교과목의 경우에도 인정 도서로 전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교사들이 자체 제작한 학습 자료나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서적도 인정 절차만 거치면 교과서로 사용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직접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어서 지식, 흥미, 창의력을 키워 주는 수준별 맞춤 수업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교과부의 교과서 정책 방향은 해방 이후 우리의 현대 교육에서 국정 도서와 검정 도서 위주로 운영해 왔던 교과서 체제를 인정 도서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광복 직후부터 학교 교과서를 국정, 검정, 인정 도서로 구분하여 편찬하는 틀을 유지해 왔다. 물론, 제3차 교육과정기에서 제6차 교육과정기까지는 국정 검정 인정 도서가 아니라, 1종, 2종, 인정 도서라는 다른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그 제도적 요건은 1종은 국정, 2종은 검정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종류의 교과서 편찬의 틀을 유지해 온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국정과 검정 도서가 주를 이루어 왔다. 한편, 인정 도서는 국정과 검정 도서의 보완적인 역할을 해 왔다.

【표 1】 교육과정기별 국 검 인정 구분 종수 현황

(단위: 종수)

구분	국정	검정	인정	계
제7차 교육과정(1997)*	721(69%)	187(18%)	134(13%)	1,042
	초 302	초 0	초 48	초 350
	중 45	중 65	중 0	중 110
	고(보통) 34	고(보통) 113	고(보통) 0	고(보통) 147
	고(전문) 340	고(전문) 9	고(전문) 86	고(전문) 435
2007 개정 교육과정(2007)*	537(56%)	181(19%)	239(25%)	957
	초 280	초 22	초 48	초 350
	중 5	중 56	중 28	중 89
	고(보통) 3	고(보통) 89	고(보통) 9	고(보통) 101
	고(전문) 249	고(전문) 14	고(전문) 154	고(전문) 417
2009 개정 교육과정(2009)	334(39%)	136(16%)	382(45%)	852
	초 178	초 22	초 8	초 208
	중 5	중 56	중 38	중 99
	고(보통) 3	고(보통) 52	고(보통) 78	고(보통) 133
	고(전문) 148	고(전문) 6	고(전문) 258	고(전문) 412

※ 초등학교에 유치원, 특수학교 포함(국정은 1종 1책이며, 검 인정은 1종 다책임.)

그런데 이번에 교과부가 인정 도서의 확대를 추진하면서 이러한 교과서 편찬 체제에 변화가 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향후에는 인정 도서의 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으로써(【표-1】 참조) 인정 도서 중심 체제가 됨과 동시에 국정과 검정의 보완적인 역할에서 더 나아가 ‘고등학교 교과서의 다양화’를 견인하는 편찬 체제로서 인정 도서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인정 도서 중심의 교과서 체제의 발전을 위해 인정 도서 확대의 필요성과 과제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인정 도서 확대의 필요성과 의의

이상과 같이 교과부에서는 인정 도서 체제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육에서 이러한 변화가 왜 필요한 것일까?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하는 ‘인정 도서’는 ‘국정 도서, 검정 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인정 도서는 어디까지나 국정이나 검정 도서의 보완을 위해 인정하는 도서로서 보조적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 교육계에서 인정 도서에 대한 인식도 국정이나 검정에 비해 중요성이 덜하거나 인정 과정이 좀 더 용이한 도서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뿐만 아니라, 향후에 인정 도서를 좀 더 확대해 나가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정 도서는 국정이나 검정 도서에 비해 학습자 친화적이며,
 보다 유연한(flexible) 체제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인정 도서는 학교에서 교과서를 직접 활용하게 될 교사 등이
 주도적으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비교적 간편한 심사 절차와 채택 절차 등으로 인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자료들이 교과서로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1. 교과서 제도의 유연화 필요

인정 도서 확대의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국정이나 검정에 비해 인정 도서가 상대적으로 교과서 제도의 유연성 면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국정 교과서는 말 그대로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유일한 해석을 전제로 단 한 종의 교과서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체제로 교육의 다양성을 제한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교과서에 살리기 어려운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과서와 수익성이 적은 일부 전문계 과목 등의 교과서가 국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점차 검정이나 인정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검정 교과서는 민간의 저작자와 출판사들이 최선을 다해 교과서를 개발하고 이를 검정 기준에 따라 심사함으로써 교과서로 승인을 하는 제도로서, 국정에 비해 교과서 구성의 자유도가 높고, 무엇보다 교과서 편찬 과정에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과서 개발 과정이 사전에 제공되는 검정 기준에 의해 크게 제한을 받는다는 점, 그리고 검정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모험적인 구성을 하기보다 관례적인 구성을 위주로 한다는 점에서 검정 교과서의 중수가 많지만 다양성은 크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국가 수준에서 엄정하게 관리하는 교과서인 검정 도서는 점차 초등학교 단계인 공통 교육과정기의 일반 교과 교과서들에 한정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 단계에서는 인정 교과서의 확대 적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곧,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로 운영될 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의 다양한 운영에 걸맞은 좀 더 유연한 교과서 체제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단위 학교에서 개설하는 과목들에 대한 교수 학습 자료, 학생들의 수요에 알맞은 각종 수준별 교과서, 시중에 이미 나와 있는 양질의 교수 학습 자료의 활용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교과서 체제가 요구되는 것이다.

인정 도서는 국정이나 검정 도서에 비해 학습자 친화적이며, 보다 유연한(flexible) 체제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인정 도서는 학교에서 교과서를 직접 활용하게 될 교사 등이 주도적으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비교적 간편한 심사 절차와 채택 절차 등으로 인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자료들이 교과서로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 심사를 한 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16개 시도 교육청에 위임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좀 더 다양한 교과서의 출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학교 현장 주도적인 교과서 체제

앞에서 자율형 사립고의 예를 들었는데, 향후에 교육과정 자율화가 정착되어 단위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 활성화되면 그에 따른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에 대한 요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율형 사립고나 특목고, 그리고 전문계고와 같이 학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교사들이 주도적으로 교과서를 개발하여 인정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검정 도서보다는 인정 도서 체제가 좀 더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3. 교과서 내용의 적기 업데이트 체제

유연한 인정 도서 체제를 유지한다면, 교육과정 개정 주기에 맞추어져 있는 교과서 개발의 기회를 상시적으로 제공하여 교과서 내용을 적기에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과학의 경우에 융합형으로 개정된 교육과정의 취지 및 현대 과학 발전 추이 등을 반영하는 데 인정 도서 체제가 좀 더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특목고 및 전문계고를 위한 고교 전문 과목 교과서의 경우에는 산업 현장 및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추어 교과서를 해마다 개발하거나 수정, 보완할 수 있어 좀 더 적합한 내용을 담을 수 있고, 학생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수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ICT 분야 과목 같은 경우에는 5~10년 주기로 개정이 되는 교육과정 주기에 맞춘 교과서 체제로는 신기술을 따라 배우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자칫 학생들은 이미 사장(死藏)된 기술을 소개하는 교과서로 학습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교과서 체제의 유연화를 통해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수정, 보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런 점에서 인정 도서 체제가 좀 더 적절성이 있다.

Ⅲ. 인정 도서 확대의 쟁점과 과제

1. 인정 도서 지위의 재조정

앞에서 제시했듯이, 현행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인정 도서는 국정 도서와 검정 도서의 보완재에 해당된다. 곧, 국정 도서나 검정 도서가 있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국정이나 검정 도서를 활용하고 인정 도서는 보완적인 자료에 머무르게 된다. 곧, 규정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인정 도서는 그 자체로 적극적인 의미로 정의되기보다 국정이나 검정에 의존하여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는 국정과 검정 중심의 기존 교과서 체제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학교의 교과서라면 당연히 국정 도서나 검정 도서이고,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만 특별하게 허용하는 것으로 인정 도서의 지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인정 도서의 이러한 지위 때문에 현재에도 인정 도서로 전환되는 해당 교과 관련자들은 인정 도서 전환이 자기 교과와 품위를 낮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출판사나 저작자들은 인정 도서 심사를 좀 더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과서가 인정 도서 중심 체제로 가게 되면 이러한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인정 도서는 편찬 및 활용이 다른 체제일 뿐만 아니라, 교과 교과서로서 지위가 낮다거나 질 자체가 낮아도 된다는 식으로 인식하면 절대로 안 될 것이다. 곧, 교과서의 질을 높이면서도 편찬과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인정 도서 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에서 논의한 구체적인 인정 심사 절차 등의 개선과 함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인정 도서에 대한 개념 정의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국정이나 검정의 보완 교과서로 정의하기보다는 '교과서 활용자의 관점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구성한 교과서를 채택하고, 이를 승인한 교과서'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담길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2. 시 도 교육청의 인정 도서 업무 지원

인정 도서가 확대되면 국가 수준의 국정 도서 개발 업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서 검정 업무가 일부 줄어드는 반면에 시 도 교육청의 업무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제까지 대부분의 인정 도서 심의가 이루어졌던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인정 업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시 도 교육청에 인정 도서 업무를 포함하는 교과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체계적으로 설치하여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부서에서는 단지 인정 심사만을 담당할 것이 아니라, 관내

학교들에게 양질의 교과서를 제공할 수 있는 제반 정책적인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시·도 교육청들 간에 원활한 업무 협조를 통해 역할 분담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해양 수산계 고등학교를 두고 있는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등에서 이 계열의 전문 과목 교과서의 인정을 담당하고, 인정된 도서는 전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다. 특히, 인정 도서의 승인 상황을 늘 시·도 간에 공유하여 타 시·도에서 인정된 도서를 원하는 다른 시·도에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일부 수익성이 낮아서 자발적으로 인정 도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교과서 개발비를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의 지도 교사들에게 지원하여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초기의 예산은 교과부에서 각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도록 한다.

3. 인정 도서의 질 관리 방안 마련

인정 도서 확대와 관련하여 가장 크게 대두된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인정 도서의 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하는 문제였다. 그동안 보완적인 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인정 도서의 경우에는 검정 도서와 같은 엄정한 심사 과정과 절차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많은 교과목의 교과서를 인정화할 경우에 그 교과서의 질이 문제될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특히, 교과부의 위임을 받아 각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도에 따라서는 교과서 심사를 담당할 전문적인 인력을 찾기 어렵고, 그러한 인력을 활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도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는 타당한 지적으로서 인정 도서 확대가 궁극적으로 우리 교과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인정 도서 심사를 담당하는 교육청에서는 기본적으로 교과서가 국가의 이념이나 근본적인 가치 등과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내용과 구성인지 심사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교과목별로 전문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교과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정 도서 감수 기관’을 지정, 운영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곧, 인정 도서에 대한 교과서로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교과부에서는 2010년도부터 인정 도서 교과목별로 공모를 통해 전문 학술 기관 등을 인정 도서 감수 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정 도서를 심사를 진행하는 시·도 교육청에서 이들 기관에 교과서 질에 대한 심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표 2】 인정 도서 교과목별 감수 기관 지정(안)

교과	감수 기관(안)*
과학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교육연구회, 과학교육학회
기술 가정	IT국제화기술연구소, 대한경영교육학회
체육	한국스포츠교육학회, 대한체력관리학회, 한국스포츠학회
음악	한국음악교육학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미술	한국교육미술학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외국어	한국외국어교육학회, 한국독일어교육학회
한문	근역한문학회, 한국고전번역원
디지털 교과서(전자 저작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교과별 감수 기관은 선정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 예정

심의 없는 인정 도서는 그 자체로 교과용 도서의 자유도를 최대한 허용하는 장치로서 실질적으로 자유 발행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자유 발행제가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국가의 관여를 전혀 배제하는 제도라면, 이 심의 없는 인정 도서의 경우에는 문제가 큰 경우에는 인정 도서 승인 취소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최소한의 질 관리 조치를 할 수 있다.

교과서 질을 관리하기 위해 이와 같이 편찬 단계에서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과서가 채택 활용되는 단계에서도 꾸준한 수정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검정 교과서뿐만 아니라 인정 도서에 대한 교과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수준 또는 시도 교육청 연합으로 ‘교과서평가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전문가는 물론이고 학부모나 일반인들까지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교과서 질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양질의 교과서가 널리 홍보되어 채택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질이 낮은 교과서가 퇴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고등학교 교육의 자율화, 다양화를 위한 심의 없는 인정 도서의 확대

인정 도서 중에는 현재에도 규정된 심의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른바 ‘심의 없는 인정 도서’가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 고등학교 교과목의 경우에 교과서는 검정 도서이지만 교사들이 활용하는 지도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쓰는 ‘심의 없는 인정 도서’로 개발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도 교육청에서 필요에 의해 개발하는 교과서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그러한 도서는 실질적으로 심의 없는 인정 도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심의 없는 인정 도서는 그 자체로 교과용 도서의 자유도를 최대한 허용하는 장치로서 실질적으로 자유 발행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자유 발행제가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국가의 관여를 전혀 배제하는 제도라면, 이 심의 없는 인정 도서의 경우에는 문제가 큰 경우에는 인정 도서 승인 취소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최소한의 질 관리 조치를 할 수 있다.

필자는 향후에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 다양화를 위해 인정 도서 전반의 확대와 아울러, 이와 같은 심의 없는 인정 도서의 확대를 강화해 나갔으면 한다. 특히, 고등학교 다양화, 자율화와 맞물려 고등학교 수준의 교과용 도서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크게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예를 들어, 전문계 고등학교의 특정한 과목의 교과서는 해당 교과목의 교사와 전문가들이 상시적으로 개발 활용함으로써 기술적인 업데이트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데, 이것을 일일이 시도 교육청의 인정 도서 심의에 붙인다면 행정의 낭비와 자율적인 개발 의욕을 꺾는 것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자율 과정’의 이수 단위를 64단위 이상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학교에 따라서는 이 단위 수를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들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필요한 내용을 지도하고 싶어 하지만, 과목 개설의 요건 자체에 인정 도서 개발 및 심의가 포함되어 있어서 학교 현장에서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특목고나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일반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학교 개설 과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심의 없는 인정 도서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 이를 위해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과서 담당관과 교육과정 담당관이 협의하여 관내 고등학교에 적절한 안내를 하면 될 것이다. 

교과서 검정 심사의 한 방식으로 재택 심사의 정착을 위한 정책 과제



이인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서연구본부장)

I. 머리말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는 ‘기존의 서책형(종이) 교과서와 함께 e-교과서 보급’, ‘국정 도서와 검정 도서의 인정 도서 전환’, ‘학회나 공공 기관의 검정 교과서 출원을 전제로 한 검정 교과서 출원 자격 완화’, ‘폐쇄형 합숙 심사의 개방형 재택 심사로 전환’, ‘검정 교과서의 가격 사전 심의제 도입’ 등이 교과서 정책 방향 또는 제도 운영 방안으로 제시되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1. 12.) 이것은 그동안 정부가 추구해 온 교과서 정책 목표인 ‘학생의 학습 능력과 창의력 신장에 적합한 교과용 도서 개발’¹⁾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이자 국정 과제로 추진해 왔던 ‘교과서 선진화’ 정책의 성과 목표로 볼 수 있다. 이 성과 목표는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주요 국정 과제의 하나로 추진하였던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민간 및 교원의 참여 확대’와 ‘교과서의 질 향상을 위한 교과서 유통 질서 개선’(교육과학기술부, 2008. 3. 22.), ‘질 좋고 균형 잡힌 교과서 개발’(교육과학기술부, 2008. 12. 27.)이라는 정책 과제를 ‘창의적인 산지식을 제공하고 학습자 친화적인 미래형 교과서 보급’으로 통합, 정리한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이 점을 고려하여, ‘질 높고 균형 잡힌 교과서 개발’이라는 정책 목표를 존중하면서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제시된 검정 제도 개선 사항 중에서 재택 심사에 한정하여 이의 성공적 정착에 필요한 정책 과제²⁾의 제언에 초점을 맞추어 이 글을 전개한다.

II. 교과서 정책의 변화와 교과서 검정 문제

1. 학술 연구와 교과서 정책의 변화

교과서 정책의 형성과 변화에는 학계의 연구가 많은 영향을 끼쳐 왔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개인 또는 국가 차원에서 수행한 교과서 정책 관련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교과서 외형 체제 개선 정책은 물론 최근의 교과서 자율화와 선진화 정책의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들 연구의 주요 논점은 주로 초·중등학교 교과서의 편찬(개발) 주체와 지위 부여 주체 문제이었다. 이 논점은 국정, 검정, 인정, 자유 발행 등 편찬(개발) 방식의 구분과 이의 단계적 이행 등에 대한 논의의 기저로도 작용하였다. 또, 이들 연구는 교과서의 현실 문제 개선, 교육의 주체로서 교사의 권한 확대, 국가 교육과정의 대강화 등 교육 또는 교육과정에 대한 관점을 반영한다는 공통의 특징도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교과서의 현실 문제로 진단한 ‘진부하고 낙후된 교과서’, ‘지식 요약 압축형 교과서’, ‘따분하고 재미없고 어려운 교과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 제시는 부족한 편이다. 교사의 권한 확대 문제도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을 뿐 교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행사의 범위와 기준 등에 대한 문제 등은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국가 교육과정의 대강화도 국가 교육과정의 상세한 제시가 교육 내용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해석을 저해한다는 점만 부각시킬 뿐 상세화의 국면, 주체, 시기, 절

차와 방법 등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이들 연구 성과는 교과서 정책 형성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정치계 등 사회 각 분야와 관련된 이해 단체의 문제 제기와 교과서 집필자와 출판사 등 이익 집단의 요구도 정책 형성 과정에 영향을 끼쳐 왔다. 경제계가 현행 경제 교과서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경제 교과서 집필 기준을 개발하게 한 것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 조정 과정에서 경제 과목의 지위를 유지하게 한 것 등이 그 예이다. 또, 역사 해석과 관련한 외교 문제가 야기되고 2002년의 ‘한국 근 현대사’ 교과서 검정 파동 이후 교과서가 정치 쟁점의 대상으로 부각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기관 감수제를 도입한다든가,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 함께 검정 교과서로 전환된 중학교 ‘국어’, ‘도덕’, ‘역사’ 과목의 교과서 검정을 위해 검정 기준 이외에 집필 기준을 확정 발표한 것도 그 예이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 제기와 요구는 정책 내용의 일관성 부족 문제를 야기하거나 정책 집행과 관련된 각종 비용의 증가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2. 교과서 정책의 변화와 교과서의 지위 부여

교과서 정책 변화에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해 온 교과서의 편찬(개발) 주체와 지위 부여 주체의 문제가 교과서 정책 변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국정 교과서는 개발 주체와 교과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주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국정을 검정 또는 인정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즉, 국가 사무를 위탁(임)받은 정부 기관의 장이나 시·도 교육감이 교과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검정’과 ‘인정’ 교과서의 경우이다. 교과서의 검정이나 인정 사무는 민간 출판사(집필자 포함)의 출판물에 대해 교과서의 지위를 부여해 주는 행정 행위이자, 민간의 교과서 시장 진입을 승인하는 인 허가권의 행사이다. 위탁(임) 주체는 국가가 위탁(임)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지만, 권한 행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교과서의 검정과 인정이 국가 사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이고, 검정과 인정 교과서의 지위 부여 행위를 국가로 볼 수 있는 근거이다.

‘국 검정 위주의 교과서 체제’를 ‘인정 중심의 교과서 체제’로 정책을 전환함에 따라 야기될 수도 있는 인정 도서의 질 저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부터 인정 도서 과목별로 공모 등을 통해 전문 학술 기관 등을 인정 도서 감수 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3-4). 이 계획을 보면, 검정과 인정은 행정 행위의 수행 주체만 다를 뿐 심사(심의)와 전문 기관 감수를 병행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검정과 인정 교과서의 구분 준거가 행정 행위의 수행 주체라는 오해를 피할 수 없고, 구분할 이유도 근거도 그 준거도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것은 최근에 발표한 인정 도서 확대 정책의 집행과 관련된 ‘심의 없는 인정 도서’의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인정 도서 중에는 시장의 기능에만 맡길 수 없고, 학교 교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편찬 보급해야 하는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이 교과서의 개발 주체가 시·도 교육감이 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과 관련된 교과서는 개발 주체와 지위 부여 주체가 동일하여 인정 절차를 거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를 하지 않고 교과서의 지위를 부여하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교과서를 ‘심의 없는 인정 도서’라고 칭하나, 인정 교과서에 대한 견해가 엇갈릴 수 있다.

3. 교과서 검정의 본 심사 방식과 심사 결과의 신뢰도

교과서 정책 변화의 또 다른 동인에는 교과서 검정 문제도 있는데, 교과서 검정의 간소화 논의가 그 예이다. 이 논의는 간소화의 대상을 교과서 검정의 기준과 절차와 방법 등으로 설정한다. 간소화의 이유로 검정 기준이 세밀하고 절차와 방법이 엄격하여 검정 기관의 업무 부담 가중을 든다(김재춘, 2009:39). 검정 기준의 문제는 교과서 정책 목표 달성과 관련지어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과학 교과서 검정을 위해 우리나라가 적용하는 심사 항목이 20개인 데 반하여,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적용하는 평가 기준은 54개나 된다. 이것은 사회와 문화 배경, 사회 구성원의 성숙도 등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으나, 그

본질은 교육과 교과서에 대한 철학의 차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검정 기준의 간소화 문제는 교과서 정책의 목표와 연계하여 논의하지 않는 한 특별한 의미가 없다.

검정의 절차와 방법의 간소화 문제 또한 같다. 2010년에 적용하고 있는 검정 절차는 ‘기초 조사’와 ‘본 심사’ 2단계이다. 그리고 ‘기초 조사’와 ‘본 심사’ 모두 ‘합숙 연수 개별(재택) 조사/심사 합숙 조사/심사’로 설계되어 있다. 즉, 재택 중심의 조사/심사를 실행하기 위해 구축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장기 합숙에 따르는 여러 문제, 특히 심사의 과정과 결과와 관련된 ‘특정인 중심의 밀실 담합’ 등의 오해를 불식하고, 조사와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의 자율과 독립이 보장되는 가운데 전문성을 최대한 발현하여 타당한 심사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다(이인제 외, 2008; 2009). 그러나 이 시스템도 심사 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와 연계하여 계속 진단 평가하여 사실 근거(factual evidence)를 확보하고, 이에 근거하여 보다 완벽한 시스템으로 계속 보완해 가야 한다.

4. 재택 심사 시스템의 필요성과 검토 과제

심사 방식으로 재택 심사는 사회의 변화와 시대의 요구 등과 관련지어 볼 때에 반드시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심사 방식이다. 그러나 심사 여건, 예컨대 심사의 물량(책 수), 기간, 인력, 소요 예산 등과 연계되어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한 방식이자, 심사 보안과 공정성 훼손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물적, 인적 장치를 체계적이고 완벽하게 보완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운 방식이기도 하다. 재택 심사는 검정 심사 방법 중의 하나일 뿐 최고선도 진리도 아니기에 굳이 개방형이라는 수식어를 더할 이유가 없다. 심사 방식이 개방형이든 폐쇄형이든 심사 방식은 국가의 행정 행위로서 심사의 공정성이 유지되고, 타당하고 신뢰 있는 심사 결과를 산출하여 ‘질 높고 균형 잡힌 교과서 개발’이라는 교과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때 심사 여건, 예컨대 심사 물량, 심사 인력, 심사 기간, 경비, 심사 운영의 효율성까지 고려하여 심사 방식을 선택한다면 심사 방식의 건전성은 물론 교과서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를 판단할 분명한 기준과 근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재택 심사는 검정 심사의 전체 시스템을 운영하는 상시 전담 인력이 확보되지 않는 한 유지하기가 어려운 심사 방식임도 분명하다. 이 방식은 합숙 심사 기간보다 2배 이상의 심사 기간(2010년의 재택 심사 기간은 최대 42일임.)을 확보해야 하며, 시스템의 기획 운영 결과 분석을 위한 인력도 합숙 심사에 비해 약 2.5배 이상 더 필요하다. 그리고 웹(web) 기반 평가 시스템의 운영 인력도 합숙 심사보다 2배 이상 필요하다. 또, 위원들의 담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택 심사 기간 동안 위원 간 소통을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재택 심사의 약점 중의 하나인 효율의 문제 등 심사 진행 상황 등을 매일 점검하고 제기되는 문제에 대응해야 재택 심사 결과와 신뢰도 높은 심사 결과 산출을 연계시킬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은 상시 전담 기구가 구축되어 있지 않는 한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처럼 교과서 검정 문제는 교과서 정책 목표와 연계하여 검토해야 한다. 그 이유는 정책 행위로서 교과서 검정 문제를 간소화 차원에서만 논의할 수 없는 특수한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어쨌든 교과서 검정 심사 방식은 타당하고 신뢰 있는 심사 결과를 산출할 수 있고 ‘질 높고 균형 잡힌 교과서 개발’이라는 교과서 정책 목표 구현에 적합한 방식이어야 한다. 따라서, 교과서 정책의 목표에 따라서는 현재의 검정 기준과 절차와 방법을 보다 강화해야 할지도 모른다. 2010년에 확대 시행 중인 재택 심사 방식도 심사의 실효성과 효율성, 결과의 신뢰성, 심사 시스템 운영의 합리성, 관련 인프라(조직, 인력, 예산), 민간의 검정 수수료 등의 현실 여건 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면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정책 형성과 집행의 실효를 기할 수 있다.

Ⅲ. 재택 심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정책 과제

1. 교과서 검정 정책의 목표와 실행 전략 명료화

교과서 정책의 방향과 목표는 이전 시기에 형성, 집행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학교 교육과 교과서의 기능 등과 연계하여 명료하게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정 교과서를 검정과 인정 교과서로 전환한 정책이 교과서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였는지, 검정과 인정 교과서의 실상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고, 학습자 변인이 다양한 교실 상황에서 현재의 교과서가 학습자 수준 적합성의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현재의 학년(학기 포함) 단위 교과서 편찬(개발) 방식이 타당한지 등에 대한 진단도 필요하다. 그래야만 현행의 교과서 검정 정책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시켜야 할 것인지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국가 교육과정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진단해야 할 과제이다.

만약, 현행의 교과서 검정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어떤 시스템이 정책 목표 구현에 더 적합한지 점검하고 정책 집행의 방향을 보다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검정 시스템을 운영하는 미국의 22개 주³⁾의 시스템을 참조해야 하는지, 일본이나 대만과 같이 중앙 정부의 공무원이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고 연중 상시 수정 보완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중국과 같이 1년 정도의 현장 실험 적용을 거쳐 수정 보완하여 제출한 심사본을 대상으로 정부가 엄격하게 심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한지, 유럽의 몇몇 나라처럼 채택 사용 등의 과정에서 책무성을 엄격하게 묻는 사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교과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가야 한다. 또, 심사의 기능도 교과서의 최소 요건 확인에 둘 것인지, 아니면 내용의 오류와 이념적 편향이 없으면서도 질적으로 우수한 자료의 판별에 둘 것인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검정 기준의 강화 완화 문제와 절차와 방법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잦은 실험도, 막대한 자산 투입 대비 효과가 없는 시행착오도, 그로 인한 과도한 사회 비용의 유발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것이 교과서 검정 정책의 목표와 집행 전략을 명료하게 해야 하는 이유이다.

2. 검정 심사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기초 연구의 수행

교과서 검정과 관련되는 변인이 다양하고 그 얽힘 관계가 복잡하다고 해도 타당한 심사 결과의 산출과 신뢰도 확보라는 검정의 목표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교과서 검정의 과정과 절차, 검정 기준과 평가 척도, 평가자로서 검정 참여자(연구 위원/검정 위원)의 자질 등은 타당하고 신뢰 있는 심사 결과 산출과 연계하여 문제점을 분석해야 한다. 즉, 검정 절차는 각 절차의 엄정한 운영과 타당한 결과 산출과 연계시켜 설계해야 하고, 검정 기준과 평가 척도는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에 근거하여 개발, 적용해야 한다. 검정 참여자(연구 위원/검정 위원)의 자질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의 요건뿐만 아니라 평가 전문가로서 소양 문제를 연계하여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의 변화와 시대의 요구, 그리고 검정 정책 변화에 따라 확대 시행하는 재택 심사도 이 심사 방식이 타당한 심사 결과 산출과 신뢰도 확보에 기여하는지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심사 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 확보가 교과서 검정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검정 기준, 절차와 방법, 검정 결과 산출된 각종 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기초 연구를 보다 강화하고 충실하게 수행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들 연구는 장기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행할 때에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장기 계획에 따라 연구 설계를 하는 경우, 교육과정의 수시 개정 정책, 그리고 최근에 검정 주기와 관련하여 교과부가 발표한 합격 유효 기간제(5년) 폐지에 대응할 수 있는 검정 체제 등에 대한 연구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재택 심사의 시스템 보안과 운영 인프라 구축

법적 인적 물적 기반인 뒷받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 재택 심사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한 연구가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는 재택 심사를 정착시키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시사하고 있다. 이 설문 조사 대상자는 2009년 교과서 검정 참여자(연구 위원/검정 위원), 교과서 출판사와 집필진, 교과부 정책 담당자이었는데, 이들 중에서 약 56.0% 이상이 '심사에 유용한 각종 자료에 대한 접근성 용이', '검정 위원의 자율성 강화'를 재택 심사의 장점으로 들었다. 반면, 재택 심사의 난점으로는 '보안 유지의 어려움' (35.3%), '심사 기준의 일관된 해석의 어려움' (25.8%), '업무 집중도 및 효율성 저하' (22.1%), '심사의 공정성 훼손 우려' (16.0%)를 들었다.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검정 심사 참여자보다 정책 담당자 또는 직접 이해 당사자가 보안 문제와 공정성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이창훈 외, 2009: 45-49). 이 결과는 보안 문제 등의 난제 해소가 재택 심사의 성패와 직결되어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재택 심사는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법적 물적 장치를 보완, 강구하지 않는 한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다. 즉, 검정 참여자(연구 위원/검정 위원)의 도덕성과 양심에 호소하는 시스템으로는 공정성 문제를 완벽하게 해소하기 어렵고, 심사 결과의 신뢰도 확보도 쉽지 않으며, 검정 위원의 평정(채점)의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재택 심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위원의 자기 규율 등과 관련된 법적 장치⁴⁾와 함께, 심사 보안과 위원의 개별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 웹 기반 평가 시스템 등의 물적 장치도 보완하여 완벽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재택 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인적 시스템의 보강, 구축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검정 참여자(연구 위원/검정 위원)는 물론 검정 정책의 기획 집행 분석 평가 업무를 전담할 인력도 보강하고, 그들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각종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검정 기준의 심사 항목 중에는 위원의 주관이 개입되어야 평가가 가능한 것이 많다. 그러므로 위원의 자질과 평가에 관한 소양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하여 심사 전, 심사 중, 심사 후의 각 단계에서 적용해야 한다. 이는 외부 인력 중심의 심사나 공무원 또는 전담 인력 중심의 심사에 공통으로 적용해야 한다. 위원의 자질과 평가에 관한 소양이 위원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과 심사 외적 요인의 개입을 차단하는 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의 신뢰도 확보의 제1요건이다. 따라서, 재택 심사를 포함하여 검정 심사 전반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기획 평가 분석 연구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의 확보 등 상시 전담 체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4. 위원의 사전 공개와 심의회의 상시 운영과 출판사(집필자)와의 소통 채널 구축

재택 심사 정착의 난제 중의 난제인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정 위원의 사전 공개와 심의회의 상설 상시 운용 방안을 제안한다. '심사 결과 보고 자료'의 하나인 합격본 도서에 대한 '수정 보완 대비표'는 2009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검정 참여자(연구 위원/검정 위원)도 2010년 검정 합격본 발표 이후 공개할 예정이다(이인제 외, 2009: 138-142). 재택 심사가 확대 도입된 현 시점⁵⁾에서 심사본과 평가 척도 등 심사 관련 자료의 보안은 실질 면에서는 해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심사 보안 문제가 공정성 문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위원의 책무성 제고와 관련하여 동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위원으로 활동하는 2년 동안 교과서 집필 참여 불허 등 개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데 따르는 보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검정 심사 과정에서 검정 위원과 출판사 관계자 또는 집필자가 상호 소통하는 체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출판사 관계자나 집필자가 심의회에 출석하여 심사 자료의 장점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심사 보안 및 심사의 공정성 확보와 연계하여 검토할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 방안은 출판사가 검정 기관에 제출한 자료만을 대상으로 심사할 때 발생될 수 있는 평가(채점)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검정 결과의 신뢰도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해 볼 직하다.

IV. 맺음말

이 글은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제시된 ‘개방형 재택 심사’와 관련된 교과서 정책의 내용, 교과서 정책 형성에 미친 영향 요인과 형성된 정책의 내용 등을 살펴보고, ‘재택 심사’를 하나의 제도로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논의해 왔다.

교과서 검정 본 심사의 한 방식으로서 재택 심사는 발전, 정착시켜야 할 방식이다. 이 명제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2010년 현재 운용하고 있는 웹 기반 평가 시스템과 함께 검정 심사의 전체 운영 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진단, 평가하여 체계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그리고 타당하고 신뢰 있는 심사 결과를 산출하여 정부의 교과서 정책 목표 달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속 보완해 가야 한다. 교과서 검정의 각 단계에서 적용해야 할 각종 기준 및 지침에 관한 연구는 물론, 검정 결과 산출된 각종 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정책을 개발하거나 제안하는 연구 체제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재택 심사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언급되는 보안과 공정성 유지 문제를 해결하고 타당한 심사 결과 산출할 수 있는 법적 물적 인적 인프라도 이상과 현실, 그리고 효율 측면까지 종합 검토하여 보완해 가야 한다. 이때에는 심사의 물량, 기간, 참여 인력의 평가 전문성, 소요 예산 등 검정 현실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도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이 글의 논점이었던 본 심사의 한 방식으로서 재택 심사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그리고 학생의 학습을 돕는 교과서의 산출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교과서 정책 전담 기구(관)의 신설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기구(관)가 교과서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를 전담하게 한다면, 복잡한 교과서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지금보다는 훨씬 질적으로 향상된 교과서의 출현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교과서 정책은 고도의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신설 기구는 교육과학기술부 내에 두되, 부서명으로는 ‘학교정책실’ 또는 ‘교육과정정책실’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현실 여건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선행 연구가 제안한 대안들, 예컨대 ‘한국교과서 검정청’, ‘국가교육과정교과서연구원’ (이인제, 2008; 2009), ‘국가교과서청’, ‘국가교육과정교과서원’ (김재춘, 2009), ‘교과서평가센터’ (진재관, 2009) 등을 독립 기관 또는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의 부설 기관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있다.

한국 교과서의 품격은 세계 수준을 능가해야 하는 까닭에.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0).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2010. 1. 12.).
- 교육과학기술부 교과서기획과(2009). 교과서 제도 개선 추진 방향(2009. 11. 22.).
- 교육과학기술부(2009a). 교육 과학 기술 선진화로 세계 인류 국가 도약(2010년 업무 보고, 2009. 12. 22.).
- 교육과학기술부(2009b). 검정 도서 편찬 및 검정 기준(교과용 도서 업무 편람).
- 교육과학기술부(2008a). 교육 과학 기술의 미래 경쟁력 강화(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업무 보고, 2008. 12. 27.).
- 교육과학기술부(2008b). 교육 살리기, 과학 기술 강국 건설: 2008년 주요 국정 과제 추진 계획(2008년 대통령 업무 보고, 2008. 3. 20.)
- 김성훈 외(2009). 2009년 중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심사 결과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재춘(2009). 교과서 검정 체제 개선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인제 외(2009c).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한 교과서 검정 결과 분석 정책 제도 개선 방안 연구: 2009년 시행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수학 영어 선택 과목의 교과서 검정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인제 외(2009^㉔). 고등학교 선택 과목 교과서 검정 이원화 방향 및 적용 기준 개발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창훈 외(2009). 교과서 검정 재택 심사제의 타당성 검토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진재관 외(2009). 교과용 도서 평가 연구(Ⅲ): 평가 도구 개발 및 적용.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서검정연구기획단(2009^㉕).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수학 영어 선택 과목의 교과서 검정 기초 조사 시행 결과 분석 및 개선 방안.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서검정연구기획단(2009^㉖).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수학 영어 선택 과목의 교과서 검정 본 심사 시행 결과 분석 및 개선 방안.
- Florida Department of Education(2008). *2008 Mathematics Specifications for the 2009-2010 Florida State Adoption of Instructional Material*.
- Texas Educational Agency(1995). *Education Code*. TITLE 2. Public Education의 SUBTITLE F. Curriculum, Program, and Service. CHAPTER 31. TEXTBOOK.
- Texas Educational Agency(2010). *State Adoption and Distribution of Instructional Materials, Texas Administration Code*. 19 Texas Administration Code, Part II: Texas Education Agency Ch. 66
- Texas Educational Agency(2007). *State of Texas Proclamation 2005: State Review Panel Handbook*.
- Texas Educational Agency(2004). *EMAT: Textbook Coordinator Reference for Textbooks & Materials*.

- 1) 이 정책 목표의 하위 목표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한 교과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에 적합한 교과용 도서’, ‘학습자 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용 도서’의 세 가지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5)
- 2) 이 글에서 ‘정책 과제’는 정책 집행의 주체인 정부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뜻한다.
- 3) 미국에서 교과서 검정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주는 Alabam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Florida, Georgia, Idaho, Indiana, Kentucky, Louisiana, Mississippi, Nevada, New Mexico, North Carolina, Oklahoma, Oregon, South Carolina, Tennessee, Texas, Utah, Virginia, West Virginia의 22개 주이다.(James R. Squire(1985). *Textbooks to the Forefront*, Book Research Quarterly 1. 참조)
- 4) 재택 심사 및 교과서 검정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두 자료가 참고가 된다. 하나는 미국의 텍사스 주 교육법(Texas Education Code)이다. 이 법의 ‘TITLE 2 공교육(Public Education)/SUBTITLE F / ‘CHAPTER 31. 교과서(TEXTBOOK)’에는 일반 규정, 주 정부의 예산 검정 구입, 지역 교육청의 역할, 행정 제재와 검정 위원회의 역할 및 책무, 교과서 공급의 다섯 개 영역에 교과서 예산, 교과서 평가 및 심사, 중간 검토와 교과서 검정, 예산-균형 주기, 교과서 목록 작성, 주 교육부의 검정, 가격의 제한, 출판사와의 접촉과 가격, 학교 구에 제공하는 정보, 특수 교과서, 이중 언어 교과서, 주니어 칼리지에 진학하는 학생을 위한 교과서, 보조 교과서 등 주 정부와 지역 교육청, 그리고 학교가 해야 할 임무와 책임 등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또, 텍사스 주 행정법(Texas Administration Code)의 ‘Chapter 66. 교수 자료(교과서)의 검정과 공급’에는 일반 규정, 주 정부의 검정, 지역 교육청의 역할, 특수 교과서에 관한 행정 처리 지침 등도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 5) 이 글에서 논의해 온 재택 심사는 2009년도 검정에서 시범 적용하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실행 체계를 구축하였다(이인제 외, 2009: 139-152). 그리고 2010년부터 재택 중심의 본 심사를 운영하고 있다.

교과서 가격 자율화와 교과서 개발 정책의 방향



홍후조 (고려대학교 교수)

교과서 가격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일은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지만, 상대적으로 교과서 질을 향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정 교과서의 검정화, 1 교과 다책주의, 검정 교과서의 공동 발행 및 이익금 균분제의 폐지, 교과서 가격의 현실화와 가격 결정 자율권 확대 등 일련의 조치들은 적정 가격을 통한 고품질 교과서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이 검정 교과서 가격을 정부가 사전에 고지하거나 일정한 한계를 두지 않고, 발행사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가격을 산출하도록 유도하고, 가격을 자율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글은 교과용 도서의 가격 결정에 관한 자율화 확대 조치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적정 가격에 고품질 교과서를 확보하는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교과서 가격 문제는 가격 그 자체의 결정 체제, 구성 요소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 정부의 예산 부담이나 학부모의 교재비 부담을 고려하면 도서의 발행과 공급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적정한 가격의 고품질의 교과용 도서를 확보하여 학생과 교사에게 도움을 최대로 주는 것이 교과서 정책의 주목표이기 때문이다.

I.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개선

2009년 8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 규정(대통령령)은 검정 심사 방법 및 절차에서 검정 심사를 기초 조사와 본 심사로 구분하고, 불합격 판정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를 신설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검정 심사 제도를 일부 개선하였다. 그 이의 신청 양식도 첨부되어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국정 도서와 검정 도서의 가격을 결정 고시하였으나, 앞으로는 국정 도서와 검정 도서의 가격 결정 방법을 분리하여 국정 도서는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고, 민간인이 개발 발행하는 검정 도서는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가격을 정하도록 변경하였다. 검정 도서 발행사로 하여금 공동 인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앞으로 검정 실시 공고에 따라 검정 신청하는 도서에 대하여는 개별 발행할 수 있도록 전환하였다.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교과서의 질 제고를 위한 교과서 제도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국정 도서의 검 인정 도서 전환을 확대하고, 그동안 비공개해 온 검정 심사본과 심사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교과서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물려주기, 대여제 실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해성 검증 결과에 따라 재생 용지를 활용한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를 공급하고, 학생 편의를 우선하는 초등 국어 교과서 외형 체제를 개선하여 학습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는 ‘선진형 교과서’를 개발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I. 교과용 도서의 가격 결정

교과용 도서는 1년에 2회에 걸쳐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 이 가격 결정 작업은 1학기 물량은 10월경에, 2

국정 교과서의 연구, 개발을 위한 예산은
 그동안 꾸준히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다.
 연구 개발비, 원고료, 삽화료, 사진료, 개고료, 일반 관리비, 편집비 등은
 검정 교과서에 비한다면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고
 국정 교과서 제작에 참여하는 인사들의 희생적 노고에 기반하고 있는 편이다.

학기 물량은 5월경에 실시한다. 가격 결정 시 기준이 되고 있는 조달청 인쇄 기준 요금 단가는 매년 2월에 발표되고 있다. 교과용 도서를 정부에 납품하는 공공 물품의 하나로 볼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원가 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및 이윤으로 크게 구분 작성한다. 일반 관리 비율은 종이 종이 제품 인쇄 출판물의 제조 구매는 14%이다. 교과용 도서의 가격 사정 구성 요소에는 재료비, 인쇄 제조비, 일반 관리비, 발행자 이윤, 저작자 인세(국정 제외), 연구 개발비(신설), 공급 수수료, 기타 경비(심의본 제조 원가, 폐기 도서 제조 원가, 부가 가치세, 저작권 보상금) 등이 있다.

가격은 그 형성되는 유형에 따라 시장 거래 가격, 생산자 공표 가격, 행정 지도 가격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시장 거래 가격'이라 함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한 시장의 가격 조절 기능을 통하여 형성되는 가격을 말한다. '생산자 공표 가격'이라 함은 상품의 성능 시방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거나 독과점으로 인하여 시장 거래 가격의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 생산자가 대외적으로 공표한 판매 희망 가격을 의미한다. '행정 지도 가격'이라 함은 국민 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대하여 정부가 그 거래 가격의 상한선을 지정 고시하는 가격을 칭한다. 교과서 가격 자율화에 따르면 검정 교과서는 시장 거래 가격이나 생산자 공표 가격으로, 국정 교과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가격을 산정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어느 정도 예산에 맞추어서 납본해야 하므로 행정 지도 가격으로 이해될 수 있다.

2009년 8월에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여 국정 도서의 가격 결정은 입찰 과목군별 총액으로 예정 가격을 산정하여 입찰을 통하여 결정(입찰 명시)하도록 하였고(제32조), 검정 도서와 인정 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하도록 하였다(제33조). 이에 따라 국정 도서 가격 결정에 관한 규칙이 만들어져 고시되었다(2009년 12월). 이 규칙에 따르면 일반 관리 비율은 14%로 변경되었고, 소량 부수 추가 생산에 따른 원가 손실의 보전을 명시하고 있다. 국정 교과서의 연구, 개발을 위한 예산은 그동안 꾸준히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다. 연구 개발비, 원고료, 삽화료, 사진료, 개고료, 일반 관리비, 편집비 등은 검정 교과서에 비한다면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고 국정 교과서 제작에 참여하는 인사들의 희생적 노고에 기반하고 있는 편이다. 결과적으로 검정 교과서에 비해 국정 교과서는 전반적으로 질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검정제를 확대하더라도 시장 실패를 보이는 특수학교 교과서, 실업계 고등학교 교과서, 선택이 매우 적은 일부 교과서의 교과서가 국정으로 남게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국가에서 교육 복지 차원, 교육의 기회 균등 차원에서 이들 교과서를 개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국정 도서의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 투자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Ⅲ. 가격 자율화와 가격 결정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시장 경제 원리는 모든 재화나 용역의 가격 형성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원

칙에 의한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서 거래 가격이 형성되어지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그러나 교과용 도서는 교과서라는 특수성을 명분으로 발행자와 생산 과목이 지정되어 있고, 정부가 가격 결정 방법을 통제하고 있어 교과용 도서의 가격 결정 체계는 시장 경제 원리를 배척하고 있어 인쇄 시장을 왜곡시키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관련 민간 시장과 연구진 및 여러 관계 부처로부터 자율과 책임이 강화될 수 있고 시장 경제 원리에 부합한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청이 꾸준히 있어 왔다.

검 인정을 중심으로 한 교과서 가격은 한편으로는 정부의 요구를 바탕으로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 출판사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절충적인 가운데 결정되는 구조이다. 다만, 정부 측은 민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고, 민간 측은 정부의 고충을 이해하기 어렵다. 품질 좋은 교과서를 저렴하게 확보하려는 측과 적정 이윤을 내서 공급하려는 측의 절충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 가격의 자율화를 계기로 발행사들은 교과서 가격 상승 욕구를 갖게 될 것이다. 교과서 가격 상승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첫째, 쪽수, 지질, 판형 등을 바꾸면서 가격 상승 요인보다 부풀려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으며, 둘째, 현재와 동일한 형태의 교과서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현실화라는 명분으로 교과서 가격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타 출판사들이 높은 가격을 결정하면 이에 동조하는 현상도 피하기 어렵다(김재춘, 2009).

정부는 교과용 도서 원가의 정확한 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적정 가격으로 정부 예산 부담을 적정화하면서 품질 높은 교과용 도서를 확보하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정 도서의 예정 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 산정 기준과 방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정 도서의 원가 산정이 정확해야 하는 데 이를 수행할 만한 전문 요원들이 교육과학기술부 내에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순환 보직제로 인해 교과용 도서의 원가를 산출하거나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문가를 교육과학기술부 내에서도 확보하기 어렵다. 현재까지는 국 검정 도서 가격 산출을 출판사나 한국검정교과서 직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좀 더 높은 가격을 받아 내려는 출판사 입장에 의존하게 되면 정부는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국가의 부담, 국민의 부담이 될 수 있다. 원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내의 전문가 확보가 필요하다.

IV. 검정 도서의 가격 결정

검 인정 도서의 경우도 지난 2009년 8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민간이 개발 발행하는 도서는 저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가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교과서의 품질 제고 및 전문 교과서 발행사 육성을 위한 자율 경쟁 체제를 확대하는 바람직한 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검정 도서 및 인정 도서가 출판사 자율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지만 가격 심사 시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격의 판단 기준 모델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개선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정 도서 가격 결정에 관한 규칙의 가격 결정 구성 요소 및 결정 방법을 산출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국정 도서 가격 산출 기준을 검 인정 도서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가장 큰 차이점은 민간의 창의적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되 발행사 간 경쟁을 거치고, 일정한 검정 절차를 거침에 따라 투입 비용이 국정 도서보다 높기 때문에 국정 도서 가격 결정 요소나 방법과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교과서 발행 과정에서 교과서의 질과 가장 관련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교과서 개발비 항목 중 기획 연구비(인건비), 연구 개발비(편집자 인건비)의 현실화, 본문 디자인비, 국정보다 적게 적용되는 인쇄 제초비, 심사본의 운문 및 수정비, 현장 검토료, 검정 수수료, 부가 가치세 제조 원가 항목에 산입하는 문제, 폐기 도서 인정률의 현실화, 공급 수수료 등이 국정 가격 결정 구조에는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검 인정 도서 가격 결정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이 없을 경우 적정 가격을 산출하는 데 혼란이 예상되며, 교과서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 시장 참여를 유도 또는 억제하는 적정 가격을 제시하지 않으면 과당 경쟁과 이로 인한 줄도산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검정 도서의 경우 출원 시 가격을 기

가격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입찰의 특성을 좇아 무조건 최저 가격을 강조하기보다
검정제가 존속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자칫 제도 변화기에 많은 영세한 출판사들이
도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제하게 되어 있으며, 가격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별도의 교과용도서심의회를 열어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고 있으나, 가격 결정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을 경우 형식적인 심의회가 되어 출판사 간 단순 비교하여 가격을 조정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인정 도서의 경우 시도 교육청에서 심사하면서 가격에 대한 특별한 지침이나 기준이 없어, 출판사에서 제출한 가격을 상호 비교하여 주먹구구식으로 조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검 인정 도서에 대한 가격 결정 방법이 발행자 자율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과서가 갖는 사회적 지위와 파급 효과를 감안하여, 교과서의 특수성과 교과서 개발 프로세스에 따른 실질적인 개발비 항목을 현재의 가격 결정 방법에 추가하여 검정 도서의 가격 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격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입찰의 특성을 좇아 무조건 최저 가격을 강조하기보다 검정제가 존속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자칫 제도 변화기에 많은 영세한 출판사들이 도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검정 도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발행사에 대해 어떤 형식에서 어느 정도의 이윤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 일정한 신호를 주어야 할 것이다. 검정 도서의 종류와 수가 늘어나고 있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안정화시키고 예산을 더 정확히 추계할 필요성은 더 높아졌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채산성 부수를 넘어서는 검정 도서의 가격과 채산성 부수를 넘어서지 못하는 영세한 검정 도서의 가격의 차이를 어떻게 보정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후자의 경우 지나치게 단가가 높아지는 폐단을 갖고 있다.

V. 교과서 가격 적정화 방안과 발행 형식의 개선

교과서 가격이 자율화되고, 검 인정 교과서가 확대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교과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교과서 구입비는 늘어날 것이다. 정부의 예산이 꾸준히 늘어난다면 어느 정도 인상에 대해서 정부가 넉넉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 구입 가격이 급등할 경우 정부의 재정 압박도 심해질 것이고, 각자 교과서를 구입해야 하는 고등학생 학부모의 불만도 증가할 것이다. 가격 자율화에 따른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대응 방향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들의 학습에 쓰이는 빈도를 고려하여 교육적 효과가 높은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다. 특히, 수업과 학습에 덜 쓰이는 교과서는 간이로 만들거나, 아예 내구성 높은 것으로 만들거나, 다학년용으로 만들거나, 학교 비치용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그렇게 되면 전체 교과서 숫자 중에서 학생 개인 소지용은 줄어들고, 학교 비치용은 늘어나서 교과서 가격이 자율화되거나 이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재정 압박을 덜 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교과서는 1) 그 사용자를 고려하면 학생 소지용, 학교 비치용으로 구분될 수 있고, 2) 교과 분류 측면에서는 필수 교과와 선택 교과로 구분 가능하며, 3) 교과서 제도라는 측면에서 구분하면 국정, 검정, 인정 도서로 구분되고, 4) 수업과 학습의 사용 빈도를 고려하면 주교재와 부교재로 구분될 수 있는데, 사실상 이 4

가지 구분이 교과서 가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들 각각을 가격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초·중학교에서는 1 교과 다책주의를 재고해 보아야 한다. 필요도,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줄일 수 있다. 많이 만들어 사 주지만 수업과 학습에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한 점검은 없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분책을 하되 한 책 안에서 분책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분책한 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이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국어의 경우 각 하위 분야를 종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기에 가지고 다니거나 책상 위에 펴 놓는 교과서의 수를 주교재 하나로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 책의 각 장을 살리되 분기별로 재편하여 책이 두꺼워지면 4책으로 분기별 책을 만들 수도 있다. 따로 분책은 안되 통권 속에 간지를 넣어 분책하는 절충도 필요하다.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와 수학 익힘책을 통합하거나, 수학 익힘책을 재생지 중 질이 낮은 것으로 하여 한 번 풀고 버리는 종이를 사용하여 만든다면 값이 싸질 것이다. 과학의 실험 관찰이나 도덕의 생활의 길잡이, 사회와 탐구도 교과서에 합본하거나 교사용 지도서에 반영하여 발간하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절감된 예산은 도서관을 풍성하게 꾸미는 데 사용하면 될 것이다.

중학교에서도 생활 국어, 수학 익힘책, 영어 학습 활동책이 반드시 따로 필요하지 않다면 주교과서와 합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수학 익힘책이 평균 4,500원, 생활 국어가 2,500원, 영어 학습 활동책이 평균 3,500원이라고 할 때, 이들 책을 본 교과서 주교재와 통합한다면 부교재의 가격이 주교재로 전가되어 주교과서 가격이 1,000~2,000원 정도 높아진다고 하여도 교육과학기술부로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 폐기 도서나 파본을 고려하여 중학생의 수를 200만 명이라고 할 때 연간 수학 익힘책에서 2,500원, 생활 국어에서 1,500원, 영어 학습 활동책에서 2,500원을 절감한다면 총 6,500원을 200만 명에게서 절감하는 셈이니 약 195억 원을 절감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서, 자습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를 만들려고 학생 소지(휴대)용이기 때문에 별책으로 만든 것인데, 학생들은 국어, 수학, 영어 등에서 부교재를 만들어도 문제집이나 자습서를 여전히 별도로 사고 있다. 그 취지를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런 발행 형식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필자는 절감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분책으로 인하여 연구 개발자의 노력이 분산되고 집중하여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들 수 없다는 것에 주목한다. 또, 같은 비용을 들이고 질 높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교과서를 보급하는 것이 정부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본다.

초등학교 3~4학년과 5~6학년 미술 2책값은 총 2,000원 정도 된다. 이를 2개 학년분으로 산다고 할 때 매년 정부 예산은 20억 원이 들고, 5년이면 약 100억 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지급된 교과서는 학생의 학습이나 교사의 수업에 거의 쓰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학생들은 학년이 지나면 해당 교과서를 버리게 된다. 결국, 연간 20억 원이 낭비되는 것이다. 친환경적으로 말하면 엄청난 나무나 종이, 물감, 화공약품이 낭용되는 셈이다. 이런 교과서의 개인 지급은 반성되지 않은 관행일 뿐이다. 만약, 이 돈을 들여 필요한 화첩으로 발간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렇게 되면 5만 원짜리 화첩 40종 또는 10만 원짜리 화첩 20종을 5천 개 교에 보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각 작가와 각 유파별, 시대별 그림, 공작, 디자인, 도화, 붓글씨, 조각, 건축 등 주제별로도 보급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신기한, 기가 막힌 그림이나 사진을 접하게 되고, 여기서 오는 상상력과 창의력은 값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하다. 이런 화첩이 비치된 미술 교실은 미술 교실다울 수 있고,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풍성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출판 인쇄 기술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체육책도 각종 운동 요령, 경기 규칙이나 방법, 체조 방법, 건강법 등을 담은 비디오를 개발하여 보급하면 더 나을 것이다. 같은 예산을 들고고도 더 나은 교육 효과를 보려는 것이 교과서 정책에서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만들어 준 주교재, 부교재가 실제 수업과 학습에 얼마나 쓰이며,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가를 조사해 보고 발행 형식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년군이 도입되었으므로 교과서를 학년용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즉, 집중 이수 대상이 되는 과목들은 중학생 전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범용성을 지닐 필요가 있다. 미술처럼 체육, 음악과 선택 과목은 중학교용의 교과서 한 책이면 충분할 것이다. 도덕은 1학

기용과 2학기용으로 총 2책이면, 기술 가정은 1학기용과 2학기용으로 각각 2책의 총 4책을 제작하면 집중 이수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책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교과서와 지도서의 연구 개발 예산이나 구입 비용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거나 같은 비용으로 고급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개정으로 단위 수가 줄어들고, 필수가 선택 과목으로 변경되어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서 종수나 수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 수학, 사회, 영어, 예술, 체육 등 중점 학교의 대상이 되는 교과는 추가적으로 교과서를 수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우수한 학생들이 이수하게 될 것이므로 사실상 학교에서 편찬한 인정 교과서가 주된 수요가 될 것이다. 가령, 영어과의 경우 특수 목적 고등학교인 외국어 고등학교, 국제 고등학교, 영어 우수 학교 또는 영어 교육 강화 거점 학교용을 별도로 제작 발매하는 경우이다. 이럴 경우 대학의 교재와 비슷한 모양을 띌 수 있다. 일반 고등학교용 교과서 사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만큼 특수 목적 고등학교용 교과서의 사용은 증가할 수 있다. 즉, 예 체능 거점 학교, 자율형 사립고에서 현재 특목고의 전문 교과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를 차용하여 쓸 수 있다.

교과 특성에 따라 본 교과서 1책만 두거나 다학년용, 교사용 지도서만 주는 방법, 온라인 디지털 자료, 영상 자료로 개발 보급하는 방법, 화첩과 같은 고급 양장본으로 도서관이나 해당 교과 교실에 비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얼마든지 같은 값을 들이고도 좋은 교재를 확보할 수 있다. 도서관의 참고 자료가 풍성하다면 그만큼 부교재의 필요성은 줄어들 것이고, 심지어 시험 방법을 현재의 선택형 지필 시험에서 서술형 논술형으로 바꾸어도 그만큼 두꺼운 문제집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Ⅶ. 교과서 공급 체제 개선과 가격 적정화

끝으로, 교과서 가격 자율화에 따라 공급 체제를 일원화하여 가격을 낮추는 방법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생산자가 최종 소비자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즉, 발행사 판촉 사원이 학교 교사를 직접 접촉할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한다. 국 검 인정 공급망을 일원화하면 교과서 공급도 수월해지고 학교에서도 여러 면에서 편리할 것이다. 또한 영세한 공급망들도 규모의 경제가 생겨나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량이 줄어드는 국정 교과서와 검 인정 교과서의 공급망을 일원화하여 정부의 교과서 자율화 정책을 대변하는 중립적인 기관에 공급을 일임할 필요가 있다. 중립적인 학교 공급소(공급인 국정 121개소, 검정 113개소; 특정 발행사의 대행사나 특약 공급자 및 총판업자 배제가 중요함)를 공익 법인의 지점식으로 직영 고용해서 교육청과 학교를 상대하게 하는 것이다. ‘공익’ 법인은 전사본 관리, 적기 공급 보장, 합격본의 품질 평가 및 유지, 공정한 채택, 주문, 수금, 정산, 이익금 배분 등을 대행하면 된다. ‘공익’ 법인은 교과서 수정 의무 책임의 전달, 부도난 발행사의 발행 및 공급 대행, 사용자의 불만 처리, 교과서 오류 수정, 학교 비치용 교과서의 폐기 여부 평가, 정부의 교과서 정책 및 편수 관리 방안 전달 등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오수, 신중섭, 이영균(2008). 교과서 가격 사정 개선 적용 구체화 방안.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 보고서.
- 김재춘(2009). 교과서 가격 및 공급 제도 개선 방안. ‘다양하고 질 좋은 교과서’를 위한 미래형 교과서 정책 토론회(2009. 9. 15.,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 발표 자료.
- 홍후조 김대석 변자정(2010). 교과용 도서의 가격 결정 자율권 확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 보고서.

정부는 시·도 교육청(교육감)으로 하여금 교과서 선정을 위한
참고 자료(예: 검정 보고서, 발행사 홍보 자료(집필 계획서, 설명서 등)) 제공을
의무화하여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무 교육인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장이 교과서 채택 '권장 목록'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제3조 제3항)이 사문화되어 있는데, 이를 활성화시키고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중·고등학교 학급 수별 교사 현황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는 그 규모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구가 대도시에서 집중되면서 그 외의 지역은 대부분 소규모 학교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진은 편의상 소규모 학교를 1, 2, 3학년 전체를 합하여 10학급 이하로 정하고, 중규모 학교를 11~20학급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21학급 이상은 대규모 학교로 분류하였다.

2009년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급 수별 학교 수는 다음 【표 1】과 같다. 학급 수를 기준으로 볼 때, 10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로 분류되는 학교는 중학교에서 전체 3,106학교 중에서 중학교 1,032학교(33.2%), 고등학교 345학교(15.5%)이다. 10~20학급 규모의 학교 수는 중학교 560학교(18.0%), 고등학교 421학교(18.9%)이고, 21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는 중학교 1,514학교(48.8%), 고등학교 1,459학교(65.6%)이다.

【표 1】 2009년 중·고등학교 - 학급 수별 학교 수

(단위: 개교(%))

구분	계	10 학급 이하	10~20 학급	21 학급 이상
중학교	3,106(100)	1,032(33.2)	560(18.0)	1,514(48.8)
고등학교	2,225(100)	345(15.5)	421(18.9)	1,459(65.6)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 통계 연보, 2009.)

하지만, 비록 학교의 규모가 큰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교사의 분포를 보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몇 개 주요 과목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과목을 담당할 교사는 과목별로 1~2명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선정 채택하는 데 1~2명만의 검토를 거쳐 선정 채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음 【표 2】는 중학교 학급 규모에 따른 과목별 교사 수를 보여 주고 있다. 학급 수에 따른 각 과목별 교사 수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학교 규모가 중학교는 21학급과 9학급, 고등학교는 30학급과 12학급의 학교들을 임의 표집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학교 현황 자료를 분석하였다.

다음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모두에서 대체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의 5개 과목 이외에 해당 학교의 교사만으로 교과서의 선정과 채택을 하기에는 수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즉, 주요 몇 개 과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과목에서 교사 수가 1~2명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표 2】 중 고등학교 학교 학급 규모에 따른 과목별 교사 수

(단위: 명)

과목	중-21 학급 ²⁾	중-9 학급 ³⁾	고-30 학급 ⁴⁾	고-12 학급 ⁵⁾	고-6 학급 ⁶⁾
도덕	2	1	2	1	
국어	4	2	9	4	2
한문	1		1	1	
수학	5	2	11	4	2
사회	3	2	9	3	2
과학	4	2	8	4	1
체육	4	1	3	1	1
음악	1	1	1	1	
미술	2	1	1		
영어	5	2	10	4	2
중국어			1		
일본어			1	1	
가정	3(기술 가정)	1(기술 가정)	1	1	
기술			1		
컴퓨터	1	1	1		1
보건	1		1		
특수	2			1	
상담	1				
기타	사서 1	교목 1		사서 1	상업 2
계	40	17	61	27	13

서 6학급인 경우는 전 과목이 1인 또는 2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과목은 해당 학교에 과목을 담당할 담당 교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는 순회 교사나 인근 중학교 교사의 고등학교 수업 담당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학교 교사에 대한 교과서 채택 지원 방안

대부분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1~2명의 교사가 자신의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선정하여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교과서를 선정하거나 채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교과서 선정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음으로써 제한된 시간 내에 선정 작업을 소수의 인원으로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것은 교과서 선정의 부실로 이어지고, 교사가 교과서의 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전문적인 판단이 아니라 외부의 불합리한 요인에 의해 교과서 선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중학교의 경우 23과목 321종의 교과서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본인이 재직하는 학교의 수학과와 경우 1, 2학년의 교과서를 선택하기 위해 검토해야 하는 교과서의 종류가 무려 90여 종이다. 교사는 달랑 6명, 그마저도 교과서 집필자와 기간제 교사를 제외하면 4명의 교사가 그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은 일주일일 채 안 된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 교과서 선택의 기준은 왜곡되고 만다. ‘수학적 개념을 어

시·도 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의 교사들로 하여금 우수한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는 시·도 교육청에서 관할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정해 주는 단일종 선정과, 몇 개의 교과서를 선정하여 목록으로 제시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그 목록에 속한 교과서 중에서 하나를 골라 사용하는 채택 권장 목록 제공 방법, 그리고 전 교과서에 대한 평가 자료만을 제공해 주고 이를 토대로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선정 채택하도록 하는 평가 자료 제공의 방법 등이 있다.

떻게 접근하는가?와 같은 차별적인 요소를 비교하고 교과서 구성을 꼼꼼히 살피기보다는 눈에 띄는 디자인, 출판사 지명도 등에 따라 몇 권의 책을 골라 들고 순위를 매기는 식이다. 어떤 교사에게도 단 한 번도 펼쳐지지 않은 채 탈락되는 교과서들이 수도룩한 것이 현실이다.”〔교육과학기술부, 다양하고 질 좋은 교과서를 위한 미래형 교과서 정책 토론회(2009. 9. 15. 토론회문)〕

따라서, 시·도 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의 교사들로 하여금 우수한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방법으로는 시·도 교육청에서 관할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정해 주는 단일종 선정과, 몇 개의 교과서를 선정하여 목록으로 제시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그 목록에 속한 교과서 중에서 하나를 골라 사용하는 채택 권장 목록 제공 방법, 그리고 전 교과서에 대한 평가 자료만을 제공해 주고 이를 토대로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선정 채택하도록 하는 평가 자료 제공의 방법 등이 있다.

(1) 단일종 선정

교육청에서 단일종의 교과서를 선정하여 제시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일선 학교에서는 교과서 채택을 위한 선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교육청이 엄정한 평가 과정을 거쳐 교과서를 선정한다면 우수한 교과서가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반면에 일선 학교의 교과서 채택 권한을 침해할 수 있으며, 채택 로비 대상이 단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오히려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일선 학교의 교과서 채택 자율권 침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절차를 미리 안내하여 지역 교육청이 선정한 교과서 이외의 교과서를 채택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2) 채택 권장 목록 제공

교육청이 검정 합격 도서 목록 중에서 관내 학교가 사용할 교과서를 일정한 수로 선정하여 채택 권장 목록으로 제시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이 목록에 제시된 교과서 중에서 하나를 채택하여 사용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 채택을 위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도 교육청에서 엄정한 평가 과정을 거쳐 채택 대상 교과서 목록을 정하기 때문에 우수한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또, 일선 학교에서 다수의 교과서 중에 자신의 학교 실정에 맞는 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단일종 선정 방안과 유사한 단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단일종 선정과 마찬가지로 일선 학교의 자율권 침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교육청이 선정한 교과서 이외의 교과서를 채택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3) 평가 자료 제공

시·도 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청에서는 교과서를 선정하거나 채택 권장 목록을 제공하지 않고 교과서 평가 자료만을 제공함으로써 일선 학교에서는 이 평가 자료를 토대로 하여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는 일선 학교의 교과서 채택 권한을 보장해 주고, 시·도 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청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 채택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교과서 대금 납부자인 시·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이 어떠한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일선 학교가 교과서 채택 권한을 전적으로 가지게 된다는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청이 교과서 채택 관련하여 불합리한 면을 찾아내어 개선하고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감독 권한의 행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4. 교과서 평가 자료의 종류와 특징

교과서 평가 자료란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통칭하여 부르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교과서 선정과 채택을 목적으로 생산된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생산된 자료라도 교과서 채택 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면 교과서 평가 자료의 범주에 포함시키하고자 한다. 교과서 채택 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다양한 교과서 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일선 학교에서 우수한 교과서를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이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에는 시·도 교육감이 일선 학교 교사들에게 교과서 평가 자료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과서 평가 자료는 시·도 교육감이 작성해서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시·도 교육감이 교과서 평가 자료를 직접 작성하기도 하지만, 다른 경로로 작성된 자료를 검토하여 제공하는 간접 작성의 경우도 가능하다.

교과서 평가 자료는 교과서 검정 심사 자료, 교과서 발행사의 홍보 자료, 학회 및 교과 교사 모임 등의 교과서 평가 자료, 교과서 전문 기관의 교과서 평가 자료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교과서 평가 자료의 종류와 특성

평가 자료	특징	비고
검정 심사 자료	교과서의 자격 여부를 평가한 자료로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에 한해서는 검정 과정에서 파악한 교과서 내용 검토 의견을 제공하여 교과서의 수정 보완을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심사본 교과서와 선정 채택용 교과서는 상당한 정도로 달라질 수 있어 심사본의 검정 심사 자료를 평가 자료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교과서 심사 자료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공개의 범위 결정해야 함.	- 검정 교과서 수정 보완 권고서 - 기타 검정 심사 과정의 산출 자료
발행사 홍보 자료	발행사가 자신의 교과서 채택을 목적으로 하여 작성한 홍보 자료로, 교과서의 특장점이 과장되어 서술되고 단점이나 미흡한 점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발행사별 공정한 홍보 기회의 제공이 필요함.	- 교과서 집필 계획서 - 교과서 홍보용 설명 자료
교사 모임 및 학회 자료	학회나 교과 교사 모임에서 교과서 채택을 위해 작성한 자료로 학회나 교과 교사 모임의 성격이나 평가자의 성향을 반영하여 교과서 평가 자료가 작성됨. 평가 결과 산출을 위한 용역 의뢰 등의 방법을 검토할 필요 있음.	- 검정 교과서 특징 관련 자료

교과서 채택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앞의 세 가지 평가 자료는 나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교과서 선정 채택의 목적에 가장 합당하게 작성된다고 볼 수 있는 교사 모임이나 학회 자료의 경우에도 모든 과목의 검정 교과서에 대해 교과서 평가 자료가 산출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산출 자료라고 하더라도 교사 모임이나 학회의 인적 구성에 따라 수준이나 결과가 다양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교과서 평가 전문 기관의 설치가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시·도 교육청이 학회나 교사 모임에 교과서 평가 자료를 산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일선 학교에 제공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II. 맺음말

교과서 평가 자료 제공의 목적은 일선 학교에서 우수한 교과서를 선정하여 채택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 우수한 교과서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은 발행사로 하여금 우수한 교과서를 제작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수한 교과서가 현장에서 선정 채택되어 사용하게 된다면 발행사들은 교과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쟁을 지속적으로 하게 됨으로써 교과서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다수의 검정 교과서 중에서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절차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일선 학교 교사들에 대한 다양한 교과서 평가 자료의 제공은 교과서 채택과 선정을 위해 가장 유용한 지원 활동이 될 것이다.

교과서 평가 결과는 단순히 일선 학교의 교과서 선정 채택에만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교과서 평가는 일선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의 선정뿐만 아니라, 교과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교과서 검정 사업, 교과서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질을 개선하는 교과서의 질 향상 활동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평가 결과의 다양한 활용은 다양한 교과서가 나올 수 있는 토양이 되기도 한다.

다양한 교과서의 출현을 위해서는 교과서 검정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과서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지나치게 많은 종수의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게 됨으로써 채택을 둘러싸고 과당 경쟁을 유발할 수 있고, 대다수의 교과서 발행사가 교과서 판매 및 공급에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검정 기준은 엄격하더라도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에 대해서는 교과서 질 개선 활동에 대한 발행사의 재량권을 확대해 주고 교과서 평가 자료를 참고로 하여 지속적인 질 향상과 다양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연**

-
- 1) 교육과학기술부(2010),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 발표' 보도 자료(2010. 1. 12.).
 - 2)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중학교로 학급 수는 학년별 7학급으로 모두 21학급이다.
 - 3)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는 중학교로 학급 수는 학년별 3학급으로 모두 9학급이다.
 - 4) 부산광역시 동구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학급 수는 학년별 10학급으로 모두 30학급이다.
 - 5)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학급 수는 학년별 4학급으로 모두 12학급이다.
 - 6) 전라북도 익산군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학급 수는 학년별 2학급으로 모두 6학급이다.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의 과제와 전망



김만곤 (전 남양주양지초등학교장)

I. 교과서 선진화 방안 개관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 혹은 교과서 제도 개선의 목적은,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는, 좋은 교과서를 선정 공급하는 것’으로, 이러한 정책 제도 하에서 ‘교과서’는 ‘지식을 담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은, 지난 1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이어서 발표한 이른바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 방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은 두 가지로 나타나 있다. 우리 교과서는 그동안 “질적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거듭하여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학생들이 “많은 지식이 요약 압축된 교과서를 이해하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참고서를 구입해야 했으며, 이는 고스란히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함께 ‘교과서는 따분하며 재미없고 어려운 책’이라는 인식이 있어 왔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다. 다음은 “우리는 미래 사회로의 변화를 선도해 나갈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해야 하는데, 미래의 창의적인 ‘산지식’을 교과서에 적시에 반영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국정과 검정 교과서가 주축을 이루는 현행 교과서 시스템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와 같은 배경 아래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 2011년 국어, 영어, 수학 과목부터 가정에서도 활용 가능한 e-교과서를 기존 서책형(종이) 교과서와 함께 CD 등의 형태로 학생들에게 보급기로 하였다.
- 2011년부터 국정 도서 145종(특수 목적 고등학교 및 전문계 고등학교)과 검정 도서 39종(고교 과학, 음악, 미술, 체육 등) 총 184종의 도서가 인정 도서로 전환된다.
- 검정 교과서 출원 자격을 완화하여 민간 출판사(저작자)뿐만 아니라 학회나 공공 기관도 검정 교과서 출원을 허용할 예정이다.
- 검정 심사 과정은 종래 폐쇄형 합숙 심사에서 개방형인 채택 심사로 전환하게 되며, 지금까지는 공개하지 않았던 검정 심사 결과 보고서도 공개한다.
- 2011년 검정에 출원되는 교과서부터 가격을 사전에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교과서 가격의 조정을 출판사에 권고토록 함으로써 교과서 가격 안정화를 도모토록 하였다.
- 일선 학교에서의 교과서 채택 비리를 근절하고, 교과서 선정 및 채택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 규정을 새로이 마련키로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 방안을 통해, 우리 교과서가 보다 “쉽고, 재미있고, 학생들에게 친근한 미래형 교과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교사들이 현장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직접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과서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통해,
우리 교과서가 보다 “쉽고, 재미있고, 학생들에게 친근한 미래형 교과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교사들이 현장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직접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과서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II. 교과서 선진화 방안 검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현행 교과서를 “많은 지식이 요약 압축되어 있어 별도의 참고서를 구입해야만 하는 교과서”로, 학부모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주고 학생들에게는 “따분하며 재미없고 어려운 책이라는 인식이 있어 온 교과서”로 평가하고 있다. 또 국정 교과서와 검정 교과서가 주축을 이루는 교과서 시스템에 대해서도 미래의 창의적인 ‘산지식’을 적시에 반영하고 교육시키려면 변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았다. 현행 교과서와 이 선진화 방안에 의해 생산될 교과서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견해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구체적 방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1. e-교과서의 보급

디지털 교과서의 연구 개발은, 일찍이 1996년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 제4차 교육 개혁 방안의 ‘각종 교육 자료의 전자화, 멀티미디어화 및 한국화 추진’에서 비롯된 과제였다.²³⁾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그동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디지털 교과서 연구 개발 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해 왔다.

또 2007년에는 멀티미디어 요소로 표현된 교과 내용과 참고서, 문제집, 학습 사전, 공책 등의 기능을 하나로 묶어 유 무선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교과서(Digital Textbook) 상용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⁴⁾ 우선 초등학교 5,6학년 전 과목, 중학교 1학년 3 과목, 고등학교 1학년 2 과목의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100개 학교에 연차적으로 적용하여 2012년 이후 상용화하고,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에 필요한 학습 단말기를 개발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총 660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그러나 이번의 선진화 방안에서는 CD 등의 형태로 보급될 e-교과서는 “학생들이 학교에 책을 두고 가정에서는 e-교과서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무거운 책가방’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고, “향후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용 모바일(mobile) 형태로 활용할 수 있어, 각종 멀티미디어에 익숙한 오늘날의 젊은 학습 세대에게 “보다 친밀한(friendly)” 교과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e-교과서에 대한 이 조치는 오래전부터 교육 자료와 학습 지도 방법을 연구해 온 교사들이 제기해 온 현장의 요구가 실현된 것으로, 전자 교과서(e-교과서)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는 이처럼 개방적으로 이루어져야 보다 현실적이고 발전적일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할 수 있게 되었다.

2. 국 검정 도서의 인정 도서 전환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9년 1월 21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 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 인정 구분 고시(2008.8.28)의 내용을 수정 고시하면서, 중등 학교의 경우 전 교과목의 지도서와 일부 전문 교과와 교과서를 인정화한 조치에 더하여 추가로 71 책의 전문 교과 국정 교과서를 인정 도서로 전환

했다.⁵⁾

이번 방안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2011년부터 국정 도서 145종(특수 목적 고등학교 및 전문계 고등학교)과 검정 도서 39종(고등학교 과학, 음악, 미술, 체육 등) 총 184종의 도서를 인정 도서로 전환하면서 “국 검정 위주였던 우리 교과서 체제를 비로소 인정 중심의 교과서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⁶⁾ 2007년의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에서는 국정이 56%(인정은 25%)의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0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인정이 45%(국정은 39%)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므로 교과서의 수량 비중만 놓고 보면 ‘인정 중심의 교과서 체제’라는 표현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초 중 고 보통 교과목의 경우에는 엄연한 국 검정 교과서 중심 체제이므로 우리 교과서 체제를 전체적으로 ‘인정 중심 체제’로 표현하는 데는 아직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의 이 조치는, 우리나라의 교과서 제도가 엄격한 국가 통제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는⁷⁾ 획기적인 조치인 것은 분명하다.

3. 교과서 검정 및 검정 교과서 관리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의 내용은 여섯 가지로 그중에서 검정 교과서 출원 자격 완화와 검정 과정의 개선(개방형 채택 심사제 도입), 교과서 가격 안정을 위한 사전 심의, 교과서 선정 및 채택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률상 근거 규정 마련 등 네 가지가 검정 교과서에 관한 것이었고, 이러한 내용들은 통제의 용이성을 도모해 왔던 규제의 완화와 교과서 출판 및 학교 현장의 자율성 확보에 따르는 새로운 규제 혹은 제한에 관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가. 검정 출원 자격 완화 및 개방형 검정 심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검정 교과서 출원 자격을 완화하여 현행 출판사(저작자) 외에 학회나 공공 기관에도 교과서 검정 출원을 허용하고, 종래의 폐쇄형 합숙 심사를 개방형 채택 심사로 전환하는 동시에 지금까지는 비공개였던 심사 결과 보고서도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는 교과서 편찬에 “역량 있는 기관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재미있고 다양한 교과서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한 것이며,⁸⁾ 이른바 ‘개방형 검정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중전의 불투명한 검정 심사 과정의 폐쇄성으로 인해 검정 결과까지도 불신당했던 검정 시스템을 개선하여 개방형 검정으로” 전환한 것이다.

검정 출원 자격의 완화는 검정 과정을 거쳐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합숙 심사를 채택 심사로 전환한 것은, 그 조치에 따르는 위험 요소가 산재하여 언제라도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는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인력 풀 관리 업무를 강화함으로써 검정 심사에 기꺼이 참여하는 인력이 그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별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당연한 듯 실시되는 채택 심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왜 특별한 것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교과서 검정이 왜 지금까지 오랫동안 합숙 심사로 이루어져왔는가에 대해 검정 참여 인력 전체가 당위성이나 배경을 인식함으로써 채택 심사에 순조롭게 적응해 가는 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나. 유효 기간 폐지

검정 합격 교과서의 유효 기간(5년) 폐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미래 사회에 대비할 ‘산지식’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실은 그보다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의 교과서 검정은 아무리 훌륭한 교과서라 할지라도 새로운 검정이 실시될 때마다 다시 새롭게 집필해야 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조치는 집필자나 출판사 모두에게 매우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 검정 및 검정 교과서에 대한 몇 가지 제한

과목명이 동일한 경우 개별 출판사는 1종만(국어, 영어, 수학은 2종까지) 출원을 허용한 것은, 과열 출원

‘초 중등교육법’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으로써
 국 검정 교과서 위주의 엄격한 국가 관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교과서 정책을 인정 도서 중심 체제로 전환하려면,
 즉 인정 도서의 확대를 초 중 고 보통 교과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인정 도서’의 정의와
 ‘교과용 도서의 선정’에 관한 조항을 적극적인 관점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경쟁을 막고 교과서 전문 출판사 육성을 지향한 필수적 규제가 되었고, 2011년 검정 출원 교과서부터 사전에 가격을 심의하겠다는 것도 가격 자율화 정책에 따르는 필수적 조치이다. 교과서 채택 비리에 대해 과징금 3천만 원 이하 또는 5년간 검정 출원 제한 등 해당 출판사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을 초 중등교육법에 명시하기로 한 것은, 교과서 정책 선진국의 사례를 원용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선정 채택상의 과열 경쟁 예방을 위해 전시본 교과서 제공에 그치던 것을, 교과서 선정을 위한 다양한 참고 자료 제공(교육감), 초 중학교에 채택 ‘권장 목록’ 제시(교육장)를 의무화하는 등 교육청의 책무성 강화 방침은, 국 검정 교과서에 관해 국가 수준에서 추진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앞으로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Ⅲ. 교과서 선진화를 위한 제안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의 배경 설명에서 현행 교과서에 대해 “많은 지식이 요약 압축된 교과서”로 별도의 참고서 구입이 필요하여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교과서, “따분하고 재미없고 어려운 책”이라는 인식을 주어 온 교과서, 그리고 국 검정 교과서 중심으로는 미래의 창의적인 ‘산지식’을 적시에 반영하고 교육시키기에 적절하지 못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위에서 살펴본 교과서 선진화 방안의 실천을 통하여 현행 교과서 및 현행 교과서 제도가 지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방안이 비전으로 제시한 “창의적인 ‘산지식’을 제공하는 교과서, 학습자 친화적인 미래형 교과서 보급”이 실현 가능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의 실현을 위해, 그리고 이후의 보다 발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검토

‘초 중등교육법’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으로써 국 검정 교과서 위주의 엄격한 국가 관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교과서 정책을 인정 도서 중심 체제로 전환하려면, 즉 인정 도서의 확대를 초 중 고 보통 교과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인정 도서’의 정의와 ‘교과용 도서의 선정’에 관한 조항을 적극적인 관점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규정에서 인정 도서는 “국정 도서 검정 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로 정의하고 있고, “학교의 장은 국정 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 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 도서를 선정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 도서 검정 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 것은, 인정 도서의 위치를 국정 도서 검정 도서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는 규정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며, 학교에서도 교과용 도서의 비중을 국정 도서 → 검정 도서 → 인정 도서의 순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인정 도서 확대의 목적 설정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은 국정과 검정 중심의 교과서 체제는 미래의 창의적인 ‘산지식’을 교과서에 적시 반영하고 교육시키는 데 부적절한 반면, 인정 도서는 국 검정 도서에 비해 “학습자 친화적이며 보다 유연한(flexible)” 도서로,⁹⁾ “앞으로는 교사들이 자체 제작한 학습 자료나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서적도 인정 절차만 거치면 교과서로 사용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직접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어서 지식, 흥미, 창의력을 키워 주는 수준별 맞춤 수업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이러한 관점은, 교과용 도서 중 인정 도서의 정의를 적극적인 개념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위의 관점과 합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과서의 목적이 ‘지식을 담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탐구적 창의적 미래 지향적인 학습을 유도하고 수업 방법을 개선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자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¹⁰⁾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지금까지 추진한 바와 같이 고등학교(특수 목적 고등학교 및 전문계 고등학교) 선택 과목 국정 도서부터 인정 도서로 전환하는 방법 외에 초 중 고 보통 교과서의 국정 도서 혹은 검정 도서부터 인정 도서로 전환하는 방법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며, 이 관점으로는 당연히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일대 혁신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와 같이 고등학교 전문 교과목 교과서부터 인정 도서로 바꾸는 관점만으로는 보통 교과서의 교과서를 인정 도서로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교과용 도서, 특히 인정 도서에 대한 관점을 많이 바꾸어야 한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34학년 사회과) 지역 교과서는 행정 절차상 인정 도서일 뿐, 실제로는 중앙 정부의 국정 도서 업무를 지역별로 분산 위임한 또 다른 형태의 국정 도서(인정 도서 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 도서)에 지나지 않는다. 그 교과서를 보다 유연하게 개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시·도(또는 시·군)의 여러 기관 단체(교원 연구 단체 등)를 대상으로 한 개발 계획 공모, 여러 종류의 인정 도서 인정 및 각 학교의 선정 채택, 출판사, 저자, 학회,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검정 형태의 심사제 도입 실시, 인정 도서의 취지에 맞는 지역 사회의 각종 도서 혹은 학습 자료의 수집 및 인정 목록 작성 제시 등 얼마든지 있다.

교과서 혹은 학습 자료에 대한 우리의 사고 방식은 매우 한정적이고 통제적이다. 통제 규제 완화 중심의 인정 도서 확대를 넘어 현장 혁신 중심의 인정 도서 확대를 지향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3. 디지털 교과서 연구 결과 공개

1990년대 중반부터 오랫동안 디지털 교과서 개발 연구를 선도해 온 학자들은,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단순히 서책형 교과서를 디지털화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필요한 인쇄 및 멀티미디어 자료, 참고서와 문제집, 사전류 등과 각종 평가, 학습 관리, 저작 도구 등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한다.¹¹⁾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번에 서책형 교과서의 내용이 담긴 e-교과서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이러한 e-교과서의 공급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디지털 교과서는 우리의 획일적 지식 전수적(知識傳授的) 교수 학습에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개발되어, 장기적으로는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교사가 설명하고 학생들은 그 강의를 듣는 혹은 교사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일제히 학습 활동을 전개하는 현재의 교수 학습 체제를 탈피하고 학생들이 자신이 학습할 시간, 장소, 내용 등을 결정하는 개방적 체제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명심할 것이 있다. 빌 게이츠(1996)는 이미 오래전부터 “멀티미디어 문서는 지금의 교과서, 영화, 시험, 그 밖의 교육 자료가 맡고 있는 역할들을 일부 떠맡을 것이며 정보 기술은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왔고,¹²⁾ 인공 지능 전문가 로저 샤크(2001)는 “동네에서 가장 많이 아는 사

람이 나눠 줄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앉아서 그 정보를 암기해야 한다는 개념에 바탕을 둔 학교라는 낡은 개념은 새로운 지식 습득 개념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했다.¹³⁾ 또 그러한 학자들 중에는 학교와 교과서는 곧 없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학자들도 있다. 오랜 기간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서 내용이 그대로 담긴 e-교과서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게 된 배경을 보더라도 앞으로는 디지털 교과서 연구 과정과 연구 결과 및 실험 적용 과정 등이 보다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

덧붙이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연전에 교과서 대여제를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으나 이번의 선진화 방안에서는 그 발표의 추진에 관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다. 보다 생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교과서제도개선위원회’(가칭)를 구성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연

- 1) 교육과학기술부 보도 자료, 2010. 1. 12,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
- 2)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 제4차 대통령보고서(1996. 8. 20),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Ⅲ), pp. 40~41.
- 3) 1997년에는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세 가지 정책 연구 중 한 가지가 바로 광병선(1997. 12.), 「전자 교과서 개발 방안 연구(I)」였다(김만곤, 2008. 12,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운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 보고서 2008-01), 부록 4 참조).
- 4) 교육인적자원부,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常用化) 개발 본격 착수, 2007. 3. 7. 보도 자료.
- 5)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교과목의 인정 도서’는 시·도 교육청 인정 도서 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교과용 도서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학교의 경우 국어, 도덕, 사회, 특별 활동 지도서 등은 ‘교육청 심의 인정 도서’이나 교육청 주관으로 개발하는 도서는 인정 도서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고, 고등학교 보통 교과 중의 교양 과목 교과서 및 국어, 도덕, 사회, 역사, 특별 활동 지도서도 이에 해당한다고 했다(2009. 1. 21.,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초·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고시」 및 설명 자료 참조).
- 6) 교육과학기술부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07년의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는 국정 56%, 검정 19%, 인정 25%이던 것이 2010년의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따라 국정39%, 검정 16%, 인정 45%로 그 비중이 변하게 되었다고 했다.
- 7) 우리나라 교과서의 법률상의 위상과 기능,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교육의 다른 어떤 요소보다 막강하게 작용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중에서 ‘교과용 도서의 선정’에 관한 다음과 같은 규정(제3조 제1항)이 잘 보여 주고 있다. “학교의 장은 국정 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 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 도서를 선정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 도서 검정 도서가 없을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16조(인정 도서의 인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인정 도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의 의미가 포함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국정 도서와 검정 도서, 인정 도서로 나누어지며, 학교(교사)에서는 그러한 교과서를 필수적으로 국정 교과서 → 검정 교과서 → 인정 교과서의 순으로 사용해야 한다.
- 8) 외부 기관에 대한 검정 출원 자격 부여는, 그동안 국정 교과서 공동 개발이나 인정 교과서 개발 실적을 인정한 것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고등학교 ‘경제’ (2008년 적용),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과학’ (2010년 적용) 교과서를 개발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초등학교 음악, 미술 교과서(2010년 적용)를 개발했다(교육과학기술부 보도 자료 참조).
- 9)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인정 도서가 학습자 친화적이고 보다 유연한(flexible)한 반면, 비교적 간편한 심사와 채택 절차 등으로 인해 교과서로서의 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전문 학술 기관 등을 과목별 인정 도서 감수 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교육과학기술부 보도 자료 참조).
- 10) 교과서의 목적이 단순히 ‘지식을 담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탈피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식이 요약 압축된 교과서”, “(교과서에) 미래의 창의적인 ‘산지식’을 적시에 반영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는”이라는 설명을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아직은 교과서의 기능에 대한 정의를 확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11) 손병길(2009), 디지털 교과서의 이론적 기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 연구 제56호.
- 12) 빌 게이츠, 이규행 감역(1996), 미래로 가는 길, 도서출판 삼성, p. 284.
- 13) 로저 샬크 존 브룩만 엮음 이한음 옮김(2002), 「우리는 더 영리해지고 있는가?」 앞으로 50년, 생각의나무, p. 297.

학교 평가를 활용한 학교 경쟁력 제고 방안



구자역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관평가연구센터 소장

세계화가 진행되고 국가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우수 인재의 양성과 확보가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국가는 세계적인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간을 길러 내기 위하여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 한다. 국민 개개인도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더 좋은 교육을 찾아 나서고 있다. 범국가적으로 학교의 경쟁력이 요구되면서, 교육계 안팎에서 학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갖가지 제안과 전략들이 모색되고 있다.

I. 학교 경쟁력의 의미

‘학교의 경쟁력’을 거론할 때, ‘학교’는 개별적으로 특정 학교를 의미하기도 하고 집합적으로 학교라는 교육 기관을 의미하기도 한다.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주체는 개별 학교들이지만, 국가의 정책적 목표로 ‘학교 경쟁력 제고’가 거론될 때는 학교라는 교육 기관 일반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학교 경쟁력’에서 ‘경쟁력’이란 대개 ‘비교 대상들 중에서 우위에 놓일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한다. ‘학교 경쟁력’은 ‘비교되는 여러 교육 기관들 중 특정 학교(또는 학교 일반)가 우위에 놓일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한다. 개별 학교에 초점을 둘 때, 비교의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우선 인근에

있는 같은 급의 학교들이지만(초등학교 간, 중학교 간, 고등학교 간), 인근의 각종 사교육 기관과 평생 교육 기관, 그리고 원거리에 있는 같은 급의 학교들에게까지 비교의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학교 경쟁력이 국가적 관심의 중심에 놓이게 된 배경에는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다. 국내에서는 사교육이 팽창하면서 공교육이 심각하게 위축되었고, 지역 사회의 우수 인력이 대도시와 수도권의 학교로 집중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교육적 이슈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조기 유학의 붐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 수지의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국내의 우수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고, 국가 간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확보할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절박해졌다.

이처럼 다양한 배경 요인이 작용하고 있지만, 학교 경쟁력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중요한 맥락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 선택권을, 더 정확하게는, 교육 선택권을 발휘하는 상황이다. 학생과 학부모는 다양한 교육 상품 중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공교육 제도가 확고하게 자리 잡은 한국 사회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교육 상품은 거주지 인근의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이지만, 이 외에도 원거리에 있는 학교의 교육,

각종 대안 교육, 각종 사교육, 외국 유학, 홈스쿨링, 이러닝 등 다양한 교육 상품이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이처럼 다양한 교육 상품들을 놓고 몇 개의 교육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제 각 학교들은 학생과 학부모 앞에서 선택되기를 기다리는 상황을 맞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이 진학할 상급 학교나 그들이 취업할 기업 등으로부터도 선택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학교 경쟁력은 학생과 학부모 등 여러 교육 수요자들의 선택에 의하여 좌우된다. 경쟁력 있는 학교는 선택되고, 경쟁력 없는 학교는 외면된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학교 경쟁력의 크기는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여러 교육 수요자들이 ‘선택하고 싶어 하는 정도’에 의하여 측정될 수 있다. 다양한 교육 수요자들의 선택 앞에서, 학교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의 공개는 불가피하다.

II. 학교 평가의 취지와 성과

전국의 모든 학교는 3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받는다. 개별 학교들은 3년마다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이어서 외부 평가단에 의하여 평가를 받는다. 국 공 사립을 막론하고 매년 전국 초 중 고등학교의 1/3이 평가를 받고 있다. 학교 평가를 주관하고 있는 16개 시 도 교육청은 학교 평가를 위하여 매년 엄청난 인력과 예산을 동원하고 있다.

학교 평가는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교의 교육 책무성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1996년부터 도입되었다. 학교 평가 제도가 도입된 해인 1996년부터 16개 시 도 교육청이 관할 초 중등학교들을 평가하였으며, 2000년부터 2003년까지는 국가 수준의 학교 평가가 별도로 시행되었다. 2006년부터는 국가 수준의 학교 평가와 시 도 교육청 수준의 학교 평가가 중복되는 문제를 피하고 학교 평가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평가의 기능을 이원화하였다. 즉, 국가 수준에

서는 기본 계획의 수립과 지원을 담당하고, 시 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를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학교 평가 지표도 국가 수준에서 개발 적용하는 ‘공통 지표’와 시 도 교육청 수준에서 개발 적용하는 ‘자체 지표’가 함께 사용되었다. 2008년 415 교육 자율화 조치 이후에는 시 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학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국회에서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 평가의 주된 목적은 학교 교육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려는 것이다. 학교 교육의 질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된 것이 학교 평가 공통 지표이다. 학교 평가 공통 지표는 ‘좋은 학교’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¹⁾

학교 평가 공통 지표는 좋은 학교에 대한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평가를 통하여 학교가 지향해야 할 학교상을 학교 구성원들이 스스로 창조하고 공유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학교 평가 공통 지표는 국가가 정한 어떤 기준을 성취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보다는 학교 스스로 하고자 하였던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였는지를 전문가의 눈으로 평가할 것을 강조한다. 이런 평가를 통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스스로 원하는 학교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학교 평가는 1996년에 시행된 이래 많은 변화를 겪어 왔지만, 이제는 비교적 안정된 체제를 유지하면서 학교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학교 평가의 성과를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와 교육청 수준에서 학교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정착되고 있다. 현행 학교 평가 시스템은 학교 평가를 시 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되, 국가 수준의 공통 지표를 사용하고 평가 결과를 수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 도 교육청별로 자체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지표별 반영 배점을 시 도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시 도 교육청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국가 수준에서 학교 교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이다.

둘째, 학교 개선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학교 평가는 단위 학교에 개선을 위한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 개별 학교들의 입장에서는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느끼게 되지만, 그 부담은 오히려 학교의 여건을 개선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동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학교 평가는 침체된 학교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고, 학교 구성원 스스로 학교의 강점과 약점을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협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셋째, 학교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 평가의 결과는 DB로 축적되고, 평가 위원들이 평가한 구체적인 기술 자료들은 해당 학교로 피드백된다. 학교 구성원들은 자체 평가를 통하여 학교의 교육 수준에 대한 자기 진단 수준의 정보를 생산하고, 외부 평가단의 객관적인 평가에 의한 결과들을 제공받는다. 이러한 평가 결과 자료들은 학교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010년에 시행되는 학교 평가의 결과는 학교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될 예정이므로, 학교 평가 결과는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학교 평가 결과가 공시되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개별 학교들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넷째, 학교 개선을 위한 지원 체제가 마련되고 있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결과에 따른 다양한 후속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을 차등화하기도 하고, 학교 개선을 위한 컨설팅과 장학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중 우수 사례 확산과 학교 개선 컨설팅은 학교 개선에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성식 외, 2009: 39).

Ⅲ. 학교 평가를 통한 학교 경쟁력 제고 방안

학교 평가의 성과들을 통하여, 우리는 학교 평가가 학교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학교 평가를 통하여 학교 교육의 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고, 학교 개선의 문화가 정착되고 있고, 학교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고, 학교 개선을 위한 지원 체제가 갖추어지고 있다는 점은 학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 조건들이 갖추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평가가 학교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학교 평가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공감대가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 평가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대체로 학교 행정가와 부장 교사들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일반 교사들까지 확대되어 학교 평가가 학교 개선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 학교 평가의 내용을 더 구체화하고 평가 기준을 더 객관화하여야 한다. 일선 학교에서는 공통 지표가 추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 요소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평가 위원들은 학교의 교육력을 평가할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판정 기준의 모호성은 평가 결과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일으킬 수 있다. 셋째로, 평가 방법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평가 지표를 학교 급별로, 학교 유형별로 다양화하여 개별 학교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개 1일 동안 이루어지는 학교 평가의 일정을 확대하여 평가 자료를 더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관계자 면담과 교육 활동의 실재를 살펴보는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평가 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금보다 더 전문적인 인사로 평가 위원을 구성하여야 하고, 양성 및 연수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행 연수 프

학교 평가 공통 지표는
국가가 정한 어떤 기준을 성취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보다는
학교 스스로 하고자 하였던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였는지를
전문가의 눈으로 평가할 것을 강조한다.
이런 평가를 통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스스로 원하는 학교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로그랩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연수 일정도 짧은 문제가 있다. 평가 위원은 주로 관내의 전 현직 교장, 교감, 교사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학연이나 지연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고 온정적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금은 평가 결과를 피드백하고, 우수 학교를 표창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고, 학교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다. 특히, 학교 평가에 기초한 컨설팅은 학교 개선을 위한 매우 실용적인 활용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학교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한 전문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교 평가는 학교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 학교 평가를 통하여 학교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단위 학교와 시·도 교육청 수준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평가의 기회를 학교 개선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학교 평가는 교육 계획, 실천, 결과 관리 등 학교의 총체적인 모습을 평가할 수 있는 장치이다. 학교 평가는 학교 구성원이 학교의 비전과 교육 목표를 공유하고, 모든 교육 활동을 그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전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의 책무성과 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판단은 그 비전과 교육 목표의 달성 정도에 비추어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교 구성원들은 학교 평가를 통하여 학교의 문제를 개선하고 장점을 강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힘을 합하여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단위 학교는 또한 학교 평가를 통하여 생산된 자료와 정보를 학교 개선을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학교 평가 지표는 학교 교육의 투입, 과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 학교의 시스템적 성격을 반영하는 지표, 학교의 개선에 방향감을 줄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 평가를 준비하면서 생산한 자료, 학교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에 모아진 정보, 학교 평가가 종료된 후에 제공된 정보 등은 모두 학교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교의 목표를 보완하거나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수정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학교 평가 결과 자료들을 활용하여 학교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학교 컨설팅은 반드시 평가 결과가 미흡으로 나온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개선을 필요로 하거나 더욱 발전적인 전략이 필요한 모든 학교가 주제적인 판단에 따라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학교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를 더 객관적으로 시행하고, 평가 결과를 해당 학교에 구체적


으로 제시하고, 학교 개선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적인 인사로 평가위원을 구성하되, 학연이나 지연 등의 연고로 인하여 평가의 객관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위원 구성 단계에서 신중하여야 한다.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평가 결과 보고서를 평가 지표 및 평가 요소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게 하여 해당 학교에 실질적인 진단과 처방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학교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때는, 해당 학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특히, 미흡 학교이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선입견이 작용하지 않도록, 컨설팅 대상 학교를 선정할 때 학교의 자발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팅 전문가들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 전문가들을 미리 확보하여 두는 것도 중요하다.

2010년 학교 평가 결과는 교육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 등 모든 교육 수요자들에게 공시될 예정이다. 이로써 교육 수요자들이 학교들을 상호 비교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학교를 선택할 경우, 개별 학교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의 경쟁력 확보 정도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하거나 기피하는 학교가 생길 수 있으며, 교장과 교원들도 근무를 원하거나 기피하는 학교들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서는 특별히 선호되는 학교와 특별히 기피되는 학교에 대한 조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한국의 교육에서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것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한국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높

고, 교육비의 투자량도 많고, 교육 경쟁도 심한데, 교육의 국제 경쟁력이 낮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초·중등학교에서는 국제 학력 비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는데 대학은 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잘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교육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이다. 학교 평가를 통하여 학교의 결함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선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학교 평가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권장할 만한 전략이다. 모든 학교들이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 평가는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다. 학교 평가가 학교의 시스템과 교육의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진단한다는 점에서, 학교 평가는 종합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개별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비전과 목표와 실행 계획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학교 평가는 특수성을 확보하고 있다. 학교 평가가 단위 학교의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진단과 처방을 제공하면, 각 학교들은 그것을 활용하여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와 실행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학교 평가와 학교 경쟁력 강화 전략 간의 조화로운 궁합이 기대된다. 

1) 학교 평가 공통 지표 개발자들은 성공적인 학교, 효과적인 학교, 참된 성취(authentic achievement)를 이루는 학교 등을 모두 '좋은 학교'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한국교육개발원(2009). 학교 평가 공통 지표 매뉴얼, pp. 4~10.

변혁의 시대, 교장의 역할



김영운
수락고등학교 교장

I. 들어가는 말

2010년은 학교 현장에 또 한바탕 변화의 바람이 일어날 것 같다. 교과부가 지난 2008년 4월 15일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 교육 자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교과부, 2008)한 이래, 학교 현장은 날이 갈수록 지금까지 느껴 보지 못하였던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7일에는 초 중등학교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되었다.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지나친 학습 부담은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유발하며, 단편적 지식 이해 교육이 아닌,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고, 지나친 암기 중심 교육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의 변화를 추구(교과부, 2009)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수차례 걸쳐 교육과정을 개정해 왔지만,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단위 학교의 재량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단위 학교는 배전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특히, 창의적 체험 활동 도입을 통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 육성이랄지, 고교의 경우 최소 필수 이수 단위만 지정하는 등의 교육과정 자율화를 통한 학교의 다양화 유도는 교장의 역할을 크게 요구하게 되었다.

교장으로서는 그동안 그토록 요구하여 왔던 재량권이었고, 이제는 지금까지 누려 보지 못하였던 재량권을 가지게 되었지만, 주어진 재량권만큼 할 일도 많아졌다는 점에서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교장을 대상으로 사실상 세 가지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금년 1월부터 이미 학교장 경영 능력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 3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도입하게 되었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학교 평가도 사실상 교장 평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병진(2008)은 지금과 같이 창의적 학교 경영과 교육력 신장이 요구되고 있는 변화의 시점에서 우리 교육계, 특히 단위 학교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교장에게 부과된 책무는 막중하기 이를 데 없다고 했다. 한 조직의 성패가 그 조직의 리더에 달려 있는 것이라면, 단위 학교 조직의 리더인 교장의 역량은 이 변혁의 시대에 우리 교육의 성패를 좌우할 원동력이요 추진력이라고 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학교 현장에 강력한 변화의 바람이 예고되고 있는 변혁의 2010년을 맞이하여 교장의 역할에 대하여 평소 생각하여 왔던 바를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II. 교장의 역할

그동안 교육에 있어서 학력 향상과 바른 인성 함양은 수레의 두 바퀴에 비유되며 강조되어 왔다. 그리고 역대 정부마다 즐거운 학교를 만들겠다고 공약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학력 향상과 인성 교육 강화를 부르짖고 있고, 여전히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즐거운 곳이 아니다.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알게 된 것은, 학생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즐거운 학교는, 아름다운 음악이 강물처럼 흐르는 교정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설 좋은 학교보다, 선생님이나 급우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학교라고 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자기들의 잘못만 지적하지 이해하여 주지 않는다고 한다. 또, 일부 학생들이 학교 규정을 지키지 않아 학급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스트레스를 준다고 한다.

교사들은 해가 갈수록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아 골치가 아프다고 토로한다. 학생들 중에서 몇몇은 다른 학생들을 위하여 아예 학교 현장에서 격리하여 내보냈으면 좋겠다고 한다.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의 사소한 잘못을 선생님들이 관대하게 대하여 주지 않는다고 불만이다. 입시 지도에 있어서도 학원에 비하여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야단이다. 오늘날 학교에 대하여 학교 공동체 구성원 누구도 만족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럼, 지금 우리 교장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아무리 시대가 변하여도 다음과 같은 기본에 보다 충실하여야 하는 일이 아닐까 한다.

1. 비전과 희망을 창출하는 창의적 학교 경영

교장은 학교와 지역 사회의 교육적 욕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그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비전을 개발하고, 상세화하고, 실행하고, 봉사하여야 한다. 아울러, 교장은 보다 광범위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고, 그에 알맞

게 반응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단위 학교 책임 경영을 강조하면서 단위 학교의 재량권이 크게 확대되었다. 학교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교장이 교원의 20%~100%까지 초빙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 교육과정도 교과별로 연간 수업 시수의 20%~35%까지 증감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교장은 교육과정 전문가로서 학교 실정에 최적한 창의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원을 초빙하여야 한다.

학력 향상, 인성 함양,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비전을 공유하며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교육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가 학교 공동체 구성원에 의하여 발굴되고, 실천되는 학교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2. 긍정과 격려의 즐거운 학교 문화 조성

교장은 학생들의 학습과 교직원들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학교 문화 증진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위한 조직과 운영, 자원의 관리에 힘써야 한다.

변화의 시작은 긍정이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다가갈 때 성과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교육 정책도 나름대로 여론 수렴을 거쳐 최선을 다하여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긍정의 눈으로 보고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는 일이 필요하다. 교육 정책에 대하여 교장과 교직원이 긍정의 눈으로 볼 때 학생과 학부모도 긍정적이고 협조적으로 다가온다.

학교도 서비스 기관이다. 학생, 학부모는 교육의 대상 이전에 고객이다. 학생들의 작은 변화도 크게 격려하여 주고, 학부모의 목소리에 친절하고 정성스럽게 대하여야 한다.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격려와 친절이 넘치는 즐거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일은 교장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하겠다.

교장은 학생들의 학습과 교직원들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학교 문화 증진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앞장 서야 한다.

또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위한

조직과 운영, 자원의 관리에 힘써야 한다.

3. 학생 감성에 호소하여 감동을 이끌어 내는 생활 지도

교사가 학생에게 화난 얼굴로 다가가면 학생들은 일단 마음을 닫아 버린다. 귓속말로 타이르면 귓속말로 대답하고 약속하는 학생들이다. 강제하고, 지시하고, 협박으로 지도하던 시대는 지났다. 인간 승리 다큐멘터리, 비행 청소년의 참회록 등 학생 감성에 호소하여 감동을 이끌어 내는 영상물 한 편이 학생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보다 효과적이다.

일 년 중 몇 번이라도 학생보다 먼저 출근하여 교문이나 교실에서 학생들을 맞이하는 교사가 많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머가 풍부한 교사가 많은 학교를 만드는 일에 교장이 앞장서야 한다.

이울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행정은 절차는 엄정하게, 결론은 융통성 있게, 사후 지도는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학생들은 가변성이 크기 때문이다.

4. 정당하고, 합리적 본질적인 일에 전력

교장은 합리적 본질적인 일 추진에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 힘을 쏟아야 한다. 또한, 교장은 학교 현장의 문제 해결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판단을 해야 한다.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 공동체 구성원과의 민주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 효과적인 학교 관리와 민주적 의사 결정을 통하여 많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여야 하는 역할이다.

우선, 지킬 수 있는 학교 규정 제 개정을 위하여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학교의 제반 규정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이 민주적 합의 절차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규정들이 이 과정을 소홀히 하거나 건성으로 진행하여 사문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종래 규정의 틀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살아 있는 규정을 만들어 보아야 한다. 스스로 학교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규정을 만들어 보고, 함께 숙의하여 확정하고 준수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일, 그것이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절실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훈련이 아닐까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교장 스스로 성실하고 정직하고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5. 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개선

교장은 다양한 지역 사회의 교육적 욕구를 반영하고 지역 사회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협조를 구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학부모들의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주는 일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다양화된 사회에서는 학교만 학생 교육을 책임질 수 없다.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함께하여야 함을 늘 깨우쳐야 한다. 자녀는 자녀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점, 학부모도 학교에 가면 유익한 일이 많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학교에서 학부모 대상 평생 교육 교실을 수시로 열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교장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이다.

6. 다양한 외부 전문 인력 적극 활용

교장은 학교에 상담 교사, 전문 상담 순회 교사, 상담 자원봉사자, 원어민 보조 교사, 배움터 지킴이, 청소년 상담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에서 일반 교사들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인성 교육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프로그램과 시간의 한계에 부딪힌다. 이론적으로는 학교의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하여 인성 교육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학생들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학교에서는 잘 구성된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속적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외부 전문 기관의 협조를 얻어 재량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다.

또, 학교에는 학생들이 매점 드나들 듯 스스럼없이 다가가갈 수 있는 학생 상담실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언제든지 찾아가면 상담에 응하여 주는 마음이 넉넉한 상담 교사가 필요하다.

학교에는 대다수의 모범 학생과 소수의 문제성을 지닌 학생이 있다. 문제성이 있는 학생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킨다면 학생들로 인한 스트레스는 줄일 수 있다. 최근 도입된 학교 내 대안 교실 ‘Wee 클래스’는 학교마다 특성을 살려 우수한 사례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Wee 클래스’를 활성화하면서, 학교 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보다 전문적인 대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 내 대안 교육 시설을 활

용하여 저출산 시대 인적 자원의 유실 방지에도 힘써야 한다.

Ⅲ. 맺음말

사회 발전의 원동력은 교육에 있고, 교육의 내용과 방법도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면, 지금 우리의 교육은 바뀌어야 한다. 2010년은 우리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학교 교육의 변화에 대한 요구도 커질 것 같다.

지금과 같이 창의적 학교 경영과 교육력 신장이 요구되고 있는 변혁의 시기에는 단위 학교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교장에게 부과된 책무가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우리 교장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충분히 활용하고, 교육 리더십을 발휘하여 비전과 희망을 창출하는 학교 경영에 앞장섬으로써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여야 하겠다. **연**

● 참고 문헌

- 이병진(2008). 교육력 신장을 위한 학교장의 슈퍼 셀프 리더십. 2008. 1. 7. 전국국 공립교장회 연수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08).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 발표. 2008. 4. 15. 보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09). 창의와 인성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으로 개편. 2009. 12. 17. 보도 자료.

교육 변화의 주연, 선생님



문종국
서울잠실초등학교 교감

I. 조금 슬픈 단상

올해는 학교 경영의 자율화와 의무적인 수업 공개와 함께 교원 평가가 시행되는 첫 해이어서 교직 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가, 교육계가 뒤숭숭하다. 연이어 터지는 교육계의 비리 소식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일부의 일이지는 하지만, 장학사 인사 비리 사건, 학교 공사 비리 사건, 방과 후 학교와 관련된 비리 사건, 이후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교육계 비리 근절 대책 등 보도된 내용만 보면 학교와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연말부터 발표된 일련의 학교 경영 자율화, 교원 평가제 전면 실시와 모든 교사의 연 4회의 수업 공개, 올해 지방 선거와 관련된 교육 자치제 논란 등으로 학교 현장이 혼란스러운데 연이은 교육계의 비리 소식이, 소수의 잘못으로 인하여 전체 교육계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 버린 현재의 상황이, 그저 묵묵히 학교 현장을 지키고 있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참담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선 교육의 현장에선 새 학기 새 학년을 맞아 봄 방학을 이용하여 선생님들을 상대로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지도 연수, 학생 생활 지도 연수 등이 지역 교육청 단위로 실시되고 있다.

분명한 현실은 학교와 교육계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 우리는 변화의 객체로 머물 것인가? 변화의 주체로 당당히 설 것인가? 고민하여야 할 시점이다.

II. 학교 단위 책임 경영을 위한 학교 자율화 추진

1. 학교 자율화 방안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년 9월 11일 발표하여 올 3월 새 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학교 단위 책임 경영을 위한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 자율화의 주요 내용은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교원 인사상의 자율권 확대, 자율 학교 지정 확대 등이다.

먼저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화는 학교장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관련 정책 방안 등을 토대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학교의 여건과 실정에 알맞게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¹⁾

물론, 지금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각 학교 여건에 맞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권장하고 있지만 이젠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권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12월 23일 고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서는 지금까지의 특별 활동과 재량 활동을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통합하고, 학교의 특성 학생 교사 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²⁾

둘째, 학교장의 교사 초빙권 확대 및 교원 전보상의 권한 강화 방안이다. 이에 따르면 학교장의 책임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학교장에게 정원의 20%까지, 초빙 교장제 공모제 교장제 학교에는 50%까지 교사 초빙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사 전입 및 전보 유예 요청권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교육청은 학교장이 교사 정원의 20~50%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 밖에도 학교의 자율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 학교 지정 확대와 학교 재정 운용의 자율성 확대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2. 문제점과 대책

우선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화는 바람직한 방향이나 학교에서 혹 입시 위주의 주요 교과 중심의 편성 운영을 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다. 기본 교육과정의 운영에 충실하되 학교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이 되어야 하겠다. 인사상의 자율권 확대도 꼭 필요한 정책이나 초빙받지 못한 교사의 사기 문제, 교사의 초빙, 유예 제도가 오남용 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의 지혜가 더욱 절실하게 되었다.

자율과 자유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 마련이다. 학교 경영의 자율화 방안 중 학교(장)의 책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는 학교장 중임심사 강화 방안이다. 학교장이 학교 경영에 대한 갖는 자율성 확대에 대한 책무성 제고로, 중임심사 기준 개정, 학교장 경영 능력 평가 도입 등 시도 교육청 차원의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학교에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학교(장)은 성과를 내기 위한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교사들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그에 따라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학교생활에 더 만족하고 학교를 더 신뢰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학교 단위 책임 경영을 위한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과 그에 따른 학교(장) 평가에 따른 문제점도 함께 생각하여 보고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평가를 받는 학교(장)는 눈에 보이는 실적을 위하여 학교를 효율적으로 '경영'하려고 할 것이다. 만약, 학교가 눈에 보이는 실적에 집착한다면 교사의 가장 큰 책무인 수업 개선과 학생 생활 지도를 위한 교사들의 고민과 연구를 위한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이지 기업처럼 경영하는 곳은 아니리라. 또한, 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긴 성장을 도모하는 곳이지 당장의 성과를 가지고 경영의 잣대로 평가할 것이 아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육적인 평가 도구의 개발에 노력하여야 하겠고, 학교장과 교사들은 다시 한번 진정한 교육의 의미와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을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할 시점이다.

Ⅲ. 교원 평가제 전면 시행과 수업 공개

1. 교원 평가제 3월 전면 시행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교원 평가제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나, 교육과 기술부는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3월부터 이를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도별 교육 규칙을 제정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번 교원 평가는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포함되고 평가 결과가 개인별 연수 등 전문성 신장 자료로 활용된다.³⁾

먼저, 교육청과 학교 등에 교원, 학부모, 외부

교사가 수업 과 학생 지도 등의 전문성 신장에 더욱 매진하여 떳떳하게 평가를 자처 하되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인기 투표식 평가가 아닌
 교육 본질적인 평가 요소와 평가 방법의 개발로
 우리나라의 교육을 살리고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교원 평가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전문가 등으로 평가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청 및 학교 소속 교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평가 내용은 교장과 교감에 대한 교원 능력 개발 평가는 학교 경영 전반을, 이외 교원에 대한 교원 능력 개발 평가는 학습 지도와 생활 지도 등을 그 평가 영역으로 한다. 학생의 만족도는 평가 대상자부터 직접 교육을 받는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되 학생의 특성상 만족도 조사의 실시가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평가의 개인별 결과는 평가 지표별, 평가 참여자별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평가 대상자는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자기 능력 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용권자와 교장은 평가 결과를 소속 교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교원 평가제와 함께 시행되는 수업 공개 방안을 보면 모든 교사가 학기별 2회 이상 수업을 공개하고 학부모의 수업 공개 참여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업 공개의 날, 수업 공개 주간 등을 학부모에게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

2. 문제점과 대책

교사가 전문성을 인정받으려면 수업과 학급 운영, 그리고 학생 생활 지도에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교사 본연의 업무인 수업을 공개하고 자신의 수업과 학생 지도의 결과에 대하여 평가받는 교원 평가제와 수업 공개에 대하여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로 수궁을 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의 결과를 교원 능력 개발에 활용한다는 취지에도 공감은 간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찬성은 높지만 평가 방식과 내용을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평가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정성적 측면이 강한 교육 활동을 단기간의 성과를 가지고 계량화한 지표로 평가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문제는 평가의 기준과 방법이다. 평가의 기준과 방법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학교 현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다. 평가를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로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교사들을 당장 성과가 나타나는 일에 매달리게 하여 수업을 소홀히 하게 할 수도 있다. 즉, 수업의 질을 높여 보자는 교원 평가가 오히려 평가 위주의 학교 교육으로 학교 교육을 더 망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기존의 근무 평정, 성과급 평가 등과도 중복된다. 같은 해에 세 가지의 평가를 중복하여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역시 평가를 받는 교사들의 입장에서서는 부담되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제 떳떳하게 적극적인 사고로 대처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먼저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 등의 전문성 신장에 더욱 매진하여 떳떳하게 평가를 자처하되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인기 투표식

평가가 아닌 교육 본질적인 평가 요소와 평가 방법의 개발로 우리나라의 교육을 살리고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교원 평가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학교 교육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볼 때이다. 따라서, 교원의 평가를 하되, 교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평가로 양적 평가보다는 질적 평가의 방법을 찾아 수업의 질 개선과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하여 연구해야 할 것이다.

IV. 변혁의 현장에 선 선생님의 자세

필자가 알고 있는 조금 이상한(?) 교장 선생님 이야기로 글을 맺으려 한다. 인생의 선배요, 교직의 선배로서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이 계신다. 스스로 조금 철이 덜 들었다고 생각하고, 학부모들과 싸움이 아닌 논쟁하시기를 좋아하시고 선생님들이 자신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불평하는 분이다. 학예회를 보시고 엉망진창이었다고(그래서 더 재미있고 교육적이었다고) 학부모와 선생님 앞에서 태연히 말씀하시는 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시비를 가리고 잘난 척도(?) 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아무도 항변하지 않는다. 그 까닭은 그분의 마음 깊은 곳에 교육에 대한 성찰과 학생들에 대한 진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조금은 아니 참 이상한 교장 선생님의 모습에서 변혁의 시기에,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선생님의 표상을 본다. 이분은 또 교장 선생님이지면서도 자신은 학교의 경영자는 절대 아니며, 주인공도 아니라고 완강하게 우기신다. 선생님들과 함께 있으면 당연히 선생님이 주인공이고 자신은 조연이며, 특히 학생들과 함께하면 학생이 주인공이고 자신은 주연을 돕는 조연이라고 부득부득 주장하신다. 우리가 이분에게 꿈쩍 못하고 당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교장 선생님의 생각과 주장의 중심에는 항상 교육에 대한 고민과

애정이 담겨 있다는 점이다. 변화를 수용하되 교육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학생에 대한 진한 사랑의 갑옷을 입고, 학생의 교육에서는 사랑 많은 사려 깊은 조연으로 그러나 평가와 변혁 앞에서는 당당한 주연으로 설 수 있는 선생님의 상을 그려 본다. **연**

- 1)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교육과학기술부, 2009)
- 2)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과학기술부, 2009)
- 3) 이하 서울특별시교육청(안)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9),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교육과학기술부(2009),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
- 서울특별시 교육청(2009), 학부모의 학교 참여 이해 연수 교재.
- 서울특별시교육청(2010), 2010 서울 초·중·고·고·대학 계획.
- 서울특별시교육청(2010), 교원 능력 개발 평가제 실시에 관한 교육 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안).
- 연합뉴스, 2010. 2. 8.

2009 개정 교육과정, 어떻게 달라지나



김동민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기술표준원장)

I. 개정 배경

지난해 12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 고시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대통령 자문 기구)가 교육과정 개정 논의를 시작('08. 10.)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안한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을 현장에 적용 가능하도록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학생의 학습 부담은 과중하나 학습 의욕과 지적 호기심을 유발시키지 못하였고, 전국의 모든 학교가 국가가 정해 준 동일한 교과목과 내용으로 운영되어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부족하였다. 또, 교과 활동 위주의 교육으로, 다양한 체험, 봉사, 진로 교육 등 폭넓은 인성 교육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따라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은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학생의 지나친 학습 부담은 감축하고, 학습 흥미는 유발하고자 하였다. 단편적인 지식 이해 교육이 아닌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고, 암기 중심 교육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성을 기르는 교육으로의 변화를 추구하였다.

II. 개정 경과

그동안 미래 사회를 대비한 국가 교육과정의 근본적 개편의 필요성은 교육계 및 정부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된 2007년부터 각계 저명 인사가 참여한 '국가교육과정포럼'('07. 10.~'09. 2., 제14회 개최)이 운영되었고, 전문 연구 기관의 정책 연구(2008 KICE 교육과정선진화연구 등) 등에서 이미 국가 교육과정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이 제시된 바 있다.

따라서, 자문 회의의 '미래형 교육과정'은 새롭게 제기된 것이 아니라 학계와 정부에서 오랫동안 논의되고 연구되어 왔던 것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 조정하여 제안된 것이다. 즉, 자문회의 산하에 경제, 산업, 언론, 문화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참여한 교육과정특별위원회를 구성('08. 12. ~)하여 그동안 학계와 정부에서 논의된 교육과정 개편의 방향을 정리하고, 이를 전국 권역별 국민 대토론회('09. 2.~7., 총 8차례) 및 전문가 토론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하여 시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제안된 자문 회의의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을 교과부가 현장 적합성이 높아지도록 정교화하고 구체화한 것이 '2009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9월 8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교과부에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을 송부한 이후, 교과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 개정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내에 ‘2009 개정교육과정추진단(단장: 학교자율화추진관)’을 설치하고, 추진단 아래 외부 전문가 그룹인 ‘2009 개정교육과정자문위원회(위원장: 이화여대 교수 성태제)’와 ‘2009 개정교육과정연구위원회(위원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김성열)’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교육과정 관련 법정 기구인 ‘교육과정심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을 12월 23일 확정 고시하게 되었다.

교과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현장 검토, 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여 현장 의견 반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2009 개정교육과정자문위원회’, ‘교육과정심의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Ⅲ. 주요 특징

1.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축소를 통하여 학습의 효율성 제고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축소를 위하여 도입된 개념이 ‘학년군’, ‘교과군’ 개념이다. 현행 교육과정은 학년 간 단절로 매 학년, 매 학기에 모든 교과목을 배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매 학년(학기) 이수 과목 수 과다로 학생의 학습 부담은 높고 집중도는 낮아 학습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학년 별 교사 및 교과 간 협력이 어려워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학년군’을 도입한 것이다. 초등학교는 1~2학년, 3~4학년, 5~6학년의 3개 학년군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3개 학년을 각각 1개 학년군으로 설정하였다. 학년군을 도입하면 학년 별, 학기별 집중 이수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줄여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년군 개념의 도입은 과거 교육과정 운영의 폐쇄성을 탈피하고 ‘상호 연계와 협력’으로의 운영 방식 혁신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프랑스, 영국 등이 이미 운영하는 방식으로 국제적인 추세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학년군 도입으로 초등학교의 담임 연임제, 중학교의 집중 이수, 고등학교의 무학년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1】 학년군 형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7~9학년	10~12학년

현행 교육과정 체제에서는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한 교과 내에 여러 과목이 난립한다. 이는 교과 내 과목 분화 현상 심화로 교육과정의 파편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교과목 간 통합 운영이 어렵고, 교과목 구조 조정 및 시수 조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로 인하여 학생들은 지나치게 많은 교과목 수업에 전념하지 않거나 학교 교육과정이 교과목과는 다른 수능 과목 위주의 수업으로 변칙 운영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과군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교과군은 기존의 교과들을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실제 생활 양식에서의 상호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군 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년군’, ‘교과군’ 도입을 통한 ‘집중 이수제’ 운영은 지금까지 매 학기 나누어 배웠던 교과목을 한 학기에 집중해서 공부함으로써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 과제 부담, 시험 부담 등을 감축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수업 방법의 개선도 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정책이다.

념으로 유목화하는 개념이다. 이를 통하여 학교는 교과 편제 조직과 교과별 수업 시수를 배정함에 있어 개별 교과 이기주의로 인하여 생기는 경직성으로부터 탈피하여,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탄력성 있게 교육과정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또, 교과군 내 또는 교과군 간 비슷한 주제의 교과목을 통합 연계 운영하게 하여, 학교가 자체적으로 교과목별 수업 시수를 조정하거나 수업 시수 운영에 융통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

【표 2】 교과군 형태

현행 10개 교과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외국어 (영어)	체육	음악	미술
↓	↓		↓		↓		↓			
개선 7개 교과군	국어	사회 / 도덕		수학	과학 / 실과 또는 과학 / 기술 가정		영어	체육	예술 (음악 / 미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년군’, ‘교과군’ 도입을 통한 ‘집중 이수제’ 운영은 지금까지 매 학기 나누어 배웠던 교과목을 한 학기에 집중해서 공부함으로써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 과제 부담, 시험 부담 등을 감축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수업 방법의 개선도 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정책이다. 예를 들면, 현재에는 중학교 3년간 ‘미술’을 주당 1~2시간씩 수업하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상적 맛보기 수업만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집중 이수제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이 작품의 창작 활동에 몰입할 수 있게 되고, 수업을 통하여 얻게 되는 성과물은 미술을 더욱 잘 이해하게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2. ‘창의적 체험 활동’을 도입하여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 육성

이제까지 학교는 교과 지식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비교과 활동은 재량 활동과 특별 활동으로 구분 운영하였으나,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이에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비교과 활동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이를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명명하고 그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이는 지나친 교과 지식 위주의 학교 교육 활동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폭넓은 인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 급별에 따라 초등학교는 지금보다 질적으로 더욱 내실화하도록 하고, 고등학교는 현행 주당 2시간에서 4시간 이상으로 시간을 확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의 세부 영역인 자율 활동, 진로 활동,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하여 비교과 활동을 강화하면 지식과 인성이 겸비된 균형 있는 교육이 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교육과정의 일반적 추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학생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자 고등학교 교과를 재구조화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이며,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10개의 기본 교과를 획일적으로 학습하는 체제였으나, 공통 교육과정(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을 개칭) 이수 기간을 중학교 3학년까지로 조정하여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진로와 적성, 필요에 따른 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공통 교육과정 기간을 조정한 것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게 원하는 공부를 더 깊고, 넓게 할 수 있게 하고,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고등학교 유형의 다양화,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단위 학교 중심의 교육과정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 고등학교 단계에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한 기초 교육은 모든 학생이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나머지 교과에 대해서는 개별 학생의 흥미, 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 집중해서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과 이기주의에 의하여 지나치게 세분화된 교과를 통합하고, 위계 가능한 교과를 재구조화하였다. 이렇게 될 경우, 학생은 자신의 수준에 따른 교과목을 선택함으로써 고등학교에서의 학습 결과가 대입에서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고등학교 교육과 대입 제도의 연계 및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교육과정 자율화를 통하여 학교의 다양화를 유도

현행 교육과정은 지역, 학교의 특성과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어 왔고, 학교별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 편성 운영이 제한되어 왔으며, 학생의 능력, 진로, 적성에 대한 교육과정의 탄력적 대응이 어려웠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 지적에 따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가는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틀만을 제시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즉, 교과목별 20% 범위 내 수업 시수 자율 증감을 허용하였고, 교과(군) 학년군 도입을 통하여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원활히 하였다. 고등학교는 공통 필수 과목을 지정하지 않고, 교과(군)별 필수 이수 단위만을 지정하여 학생이 필요로 하는 학습을 촉진하는 한편, 균형적 교과 이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교 자율 과정’을 도입하여 단위 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및 학생의 진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으며, 학교는 필요에 따라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 이외에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IV. 기대 효과


이번에 개정 고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이 현장을 많이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교과 집중 이수제 운영으로 학기당 이수하는 교과목 수가 현재의 11~13과목에서 8과목 이하로 감축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은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교 구성원들의 의지에 따라 인근 학교와
차별화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은 곧 학교 교육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다.

됨에 따라 학생의 학습 부담은 낮춘 반면, 체험 활동, 탐구 활동, 창작 활동 등이 강화되어 학습의 효과는 증대될 것이다.

둘째, 학생 개인차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학교 자율 과정’에서 진로 집중 과정과 관련된 과목의 심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 점이나 과학, 영어, 예술, 체육 등 교과 중점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 그리고 학생의 성취 수준을 반영하여 학교가 필요에 따라 대학 과목 선이수제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은 학생 개인차를 고려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유도할 것이다.

셋째, 똑같은 교육과정을 획일적으로 교육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모든 학교가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은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교 구성원들의 의지에 따라 인근 학교와 차별화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은 곧 학교 교육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다. 

참고 문헌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2009).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
- 2009 개정교육과정연구위원회(2009). 2009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총론) 시안 개발 연구.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시론



이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I. 창의적 체험 활동의 도입과 의의

미래는 현재의 연계선상에 있다. 시계열적으로 현재와 가까운 미래, 먼 미래 등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전개되는 사회적 특징들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전개될 미래 사회는 지식 정보화 사회, 세계화 국제화 사회 등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 또는 사회인들은 이러한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다양한 역량 또는 능력들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량을 계발하기 위하여 교육의 방향, 교육 과정의 내용과 교수 학습 방법 등의 변화가 요구된다.

국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12월 23일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을 강화하여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 양성 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하도록 하였다. 즉, 기존의 재량 활동과 특별 활동을 통합하여 배려와 나눔의 실천을 위한 '창의적 체험 활동'을 신설하였다. 재량 활동과 특별 활동의 구분이 모호하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규정하여 단위 학교의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 양성 교육을 실천하도록 주요 취지가 설정되었다. 학생들의 도덕성 함양, 준법 정신 및 윤리 의식 강화를 위해서 기존의 교과 중심 교육에서 체험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2007 개정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창의적 체험 활동과의 주요 변화 사항은 초등학교의 경우 '우리들은 1학년'을 폐지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 내용으로 반영하며, 중학교의 교과 재량 활동을 폐지하였으며, 학교 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교과 외 교육 활동의 수업 시수를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창의적 재량 활동의 도입의 취지와 편성 운영의 측면에서 볼 때 창의적 체험 활동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지향하고 있다. 우선, 창의적 체험 활동은 '창의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즉,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하여 창의성 교육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 양성 교육의 실천'이라는 창의적 체험 활동의 도입 취지에서도 밝히고 있다. 또,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의 인재 양성 교육 강화' 추진 과제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창의성은 '새로운 것을 창안해 내는 힘 또는 능력'이다. 창의성 발현의 단초는 학교 내 외의 다양한 교육 활동 과정에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체험하는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은 말 그대로 ‘체험’ 활동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체험은 기본적으로 활동 또는 경험을 전제로 하고 있다. 체험을 강조한다는 것은 경험과 활동이 중심이 되어 실천을 통한 학습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체험은 학습자가 직접적으로 겪은 경험을 의미한다. 이러한 체험은 ‘겪은 경험’ 그 자체로 존재하는 소극적인 체험의 결과와 다양한 활동과 경험의 누적으로 학습자의 내면에 체화 또는 체득되어지는 적극적인 체험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 인제는 적극적인 체험의 결과이다. 적극적인 체험을 통하여 학습자들이 주어진 현상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하거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은 편성 운영 면에서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단위 학교의 자율성 추구는 제6차 교육과정 이후 일관되게 지향해 온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철학이다. 교과 활동과 달리 교과 외 활동, 특히 제7차 교육과정 이후 도입된 재량 활동을 통하여 단위 학교에서는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게 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은 단위 학교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II. 창의적 체험 활동 교육과정의 이해

창의적 체험 활동 교육과정이 단위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착근되기 위해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 교육과정 문서의 내용 중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주요 사항을 지면 관계상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표 1】 창의적 체험 활동의 내용 체계

영역	성격	활동
자율 활동	학교는 학생 중심의 자율적 활동을 추진하고, 학생은 다양한 교육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응 활동 - 자치 활동 - 행사 활동 - 창의적 특색 활동 등
동아리 활동	학생은 자발적으로 집단 활동에 참여하여 협동하는 태도를 기르고 각자의 취미와 특기를 신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 활동 - 문화 예술 활동 - 스포츠 활동 - 실습 노작 활동 - 청소년 단체 활동 등
봉사 활동	학생은 이웃과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과 배려의 활동을 실천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봉사 활동 - 지역 사회 봉사 활동 - 자연환경 보호 활동 - 캠페인 활동 등
진로 활동	학생은 자신의 흥미, 특기, 적성에 적합한 자기 계발 활동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이해 활동 - 진로 정보 탐색 활동 - 진로 계획 활동 - 진로 체험 활동 등

창의적 체험 활동은 교과 이외의 활동으로서 교과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앎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나눔과 배려를 할 줄 아는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 지향적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창의적 체험 활동 교육과정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이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각 영역별 활동 내용은 예시적 기준이므로, 학생의 발달 단계, 학교 실정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 달성에 적합한 내용을 선정,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창의적 체험 활동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있어서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창의적 체험 활동에 배당된 시간(단위) 수는 영역별로 학생의 요구, 학교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재량으로 배정하되,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교 급별, 학년별로 활동 영역 및 내용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의 하위 영역 간에 통합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학교의 필요에 따라 기준 시간(단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시간 운영은 통합, 집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 활동의 내용, 조직 단위, 장소, 시설 등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정일제, 격주제, 전일제, 집중제 등과 같이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자율 활동의 국토 순례 활동, 봉사 활동, 진로 체험 활동 등은 학교의 특성에 따라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집중 운영할 수 있다.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은 창의적 체험 활동의 자율 활동 중에서 '적응 활동'의 일부로 편성하여 지도한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과 사춘기 학생들의 적응 활동을 위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다.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평가는 창의적 체험 활동의 내용과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작성, 활용한다. 평가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평가하되, 평가 결과는 상급 학교의 진학 자료, 학생의 계속적 진보와 계발을 돕는 자료, 차후 창의적 체험 활동 계획 수립 및 운영의 개선 자료 등으로 활용한다.

Ⅲ. 창의적 체험 활동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위한 제언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학교 급 및 학년 군별로 시행할 예정이며, 2013년에 모든 학교 급에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창의적 체험 활동이 단위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착근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시행 준비 기간 및 시행 초기에 국가, 지역, 학교, 교사 수준에서 어떤 지원과 노력을 하느냐가 창의적 체험 활동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편성 운영하는 주요 관건이다.


우선, 창의적 체험 활동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은 기존의 재량 활동과 특별 활동의 정신을 계승하되 교과 외 교육 활동 편성 운영의 실효성을 극대화하여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성, 인성을 겸비한 창의 인재(학습자)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창의적 체험 활동이 단순히 기존의 재량 활동과 특별 활동을 물리적 병렬적으로 통합하였다는 인식에서 탈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창의성과 직접적인 체험 활동에 그 방점(傍點)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 수준, 지역 수준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을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가 수준에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 교육과정 해설서를,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및 장학 자료를 개발 보급하여 단위 학교로 하여금 교육과정 시행 준비 기간 동안 창의적 체험 활동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창의적 체험 활동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을 실질적으로 안내하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 모형(시간 운영, 운영 방식 등), 사례,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또한 필요하다.

창의적 체험 활동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서 지역 사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창의적 체험 활동을 편성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 외의 자원(인사, 시설,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교육청 수준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지원 사항으로 강조하고 있다. “학교가 …… 〈중략〉 …… 관내 학교가 활용 가능한 ‘지역 자원 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지침을 교육과정 총론에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 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언제, 어디서나 활용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서 학교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의적 체험 활동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요구되는 단위 학교 및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 노력이 필요하다. 창의적 체험 활동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주체는 학교이다. 그러나 ‘학교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잘 하겠지.’ 하는 자세를 견지해서는 안 된다. 창의적 체험 활동이 기존의 재량 활동과 특별 활동과의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해 오는 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들이 일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2009 개정 창의적 체험 활동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 따라서, 단위 학교가 자율적, 창의적으로 체험 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 및 지역 교육청 수준에서 교원 연수와 교육과정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실효성 있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원 연수의 방식과 내용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위에서 아래로 주어지는 기존의 전달형 연수와 함께 연수 주체자가 참여하는 워크숍 형태의 실무형 연수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연수를 비롯하여 학교 현장에서 당면하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전문적인 교육과정 컨설팅도 필요하다. 연수의 내용에 있어서도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방안 또는 기법도 중요하지만 창의적 체험 활동 교육과정의 철학과 방향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의 실정에 부합하는 창의적 체험 활동 교육과정 편성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모의로 적용해 보고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제반 문제들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일련의 노력들이 필요하다.

창의적 체험 활동의 평가 결과 기록 방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학교 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현재 재량 활동과 특별 활동 평가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창의적 체험 활동 평가 결과 기록도 ‘학교 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현행, 기록에 있어서 영역, 시간, 특기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009 개정 창의적 체험 활동 교육과정에 부합되게 ‘학교 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의 인성 교육 강화’에서 ‘다양한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이력 관리 실시’와 관련하여 향후 창의적 체험 활동의 기록에 관한 사항들의 변화가 요청되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국가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교육과정, 2009. 12. 23. 고시
- 교육과학기술부, 창의적 체험 활동, 2009. 12. 23. 고시
- 서울특별시교육청(2010),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추진에 따른 교육과정 포럼 운영, 서울특별시 교육청 정책 연구 보고서.

2009 교육과정의 특징 「환경과 녹색 성장」

이종식 (연세대학교 교수) 녹색교육센터장



I. 배경

지구 온난화, 세계화, 인구 증가를 인류의 위기로 규정한 토머스 프리드먼(Thomas L. Friedman)은 그의 책 「코드 그린」에서 산업화에 따른 환경 문제, 인구 증가, 경제 성장에 따른 자원 고갈 등으로 인하여 녹색 성장이 국제적 이슈로 등장할 것이라고 진단하여 전 세계적으로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지하며 경제를 성장해 나가기 위한 녹색 성장을 방침으로 정하였다. ‘녹색 성장에 관한 서울 이니셔티브’는 녹색 성장을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의미하며, 경제 성장으로 인한 환경적 압력을 감소시키고,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용량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경제 및 사회 성장도 이루기 위한 인류의 새로운 도전이며 패러다임’이라고 규정하였다. 즉, 현재 지구상의 인구, 경제 발전 속도, 에너지와 자원의 여건, 지구의 환경 등으로 보아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환경 보존 방법이나 절약의 방법으로는 경제 발전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이나 인도의 중산층이 우리와 같은 생활 수준을 향유하고자 한다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과 에너지의 양은 얼마가 될 것이며 그것을 누가 양보할 것인가 하는 간단한 계산만으로도 현재의 경제 발전 방식의 한계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 인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과 기술, 산업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통합적인 지속 가능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시적인 상생의 개념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녹색 성장 교육이란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국가와 지역 사회의 진취적 성장을 목표로, 미래 녹색 성장을 주도할 녹색 인재 양성 및 범지구적 차원에서 녹색 생활의 가치를 인식, 실천할 수 있는 글로벌 녹색 시민 양성 교육”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는 녹색 성장 정책 이해를 위한 교육과정 모델이 제시되어야 하며, 정제되고 통일된 리소스 구성을 위한 연구 개발의 기술적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녹색 성장 정책의 이해를 위한 교육 과정의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09년 12월, 녹색 성장 교육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고등학교 「환경」 관련 교육과정을 「환경과 녹색 성장」으로 지정하였다.

II. 「환경과 녹색 성장」 교육

「환경과 녹색 성장」 교육과정 구성 방향은 녹색 성장의 의미를 어떻

녹색 성장 교육이란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국가와 지역 사회의 진취적 성장을 목표로,
미래 녹색 성장을 주도할 녹색 인재 양성 및 범지구적 차원에서
녹색 생활의 가치를 인식, 실천할 수 있는 글로벌 녹색 시민 양성 교육”으로 정의한다.

게 파악하고 있는지의 관점과 이러한 녹색 성장의 개념이 기존 교과서에도 어느 정도 구현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녹색 성장 관련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09년 11월 1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고등학교 「환경과 녹색 성장 교육과정(안)」 개발 공청회’에서 김주훈 박사, 이재영 교수가 연구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고등학교 환경 교과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 및 생활 양식’이라는 대영역 속에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과 경제 및 사회,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생산, 소비, 유통,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의식주와 건강 및 보건,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과학 기술 등의 중영역을 제시하여 녹색 성장에서 중요시하는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다.²⁾ 그러나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가 개발되지 않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녹색 성장 관련 내용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제시될 것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2007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도 지속 가능 발전 개념은 다루어지고 있다. 환경 문제의 현상(환경 파괴, 자원 고갈, 삶의 질 저하, 지구 온난화 등)을 주목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속 가능 개발, 환경 친화적 개발, 환경 보전적 성장을 논의하며 일상적 실천 및 대안 모색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전 지구적 환경 문제, 성장의 한계 개념 등 환경 문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녹색 성장 관련 내용은 녹색 기술을 활용하면 지구 온난화를 줄이면서도 성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 교토 의정서와 같은 국제 협약으로부터 촉발된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녹색 기술을 통하여 경제 성장을 선도하고, 대외적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하여 세계 시장을 확대하여 나갈 수 있다는 전망과, 그 주요 내용으로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개발, 녹색 기술³⁾, 녹색 금융(배출권 거래 시장)을 소개하고 있다.⁴⁾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환경 교육, 지속 가능 개발, 신재생 에너지 등의 개념이 관련 단원에서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도입되어 있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녹색 성장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고등학교 1학년 ‘생명 과학과 인간의 미래’ 단원에서 생명 과학 연구에 이용되는 기술을 알고 우리 생활에 이용되는 사례를 든다거나, ‘자연계에서의 에너지’에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물리 I의 현대 물리, 생명 과학 I의 생태계와 인간, 지구 과학 I의 지구의 선물에서는 광물 자원, 변화하는 지구 환경에서 기후 변화 등을 다루고 있다.⁵⁾

이처럼 녹색 성장 교육은 이전부터 행하여 오던 환경 교육 및 지속 가능 발전 교육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일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환경 교육에 녹색 성장의 개념을 접목시켜 기존의 교육과정 체계와의 충분히 연계시켜야 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복잡한 여러 생체 지수로 표현하는 것보다 혈압이나 혈당량 같은 간단한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녹색 성장의 현황이나 달성도를 어떤 영역을 강조하여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인가? 여기에 유일한 정답은 없겠지만 온실가스 배출량과 인간의 여러 활동을 연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저탄소 성장'이 인류의 삶의 모습을 모니터해 주는 지표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접근 방식은 초중 등 교과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녹색 성장을 관련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녹색 성장 관련 내용을 각 영역의 내용과 맥락에 맞도록 분산하여 집필하고 있다.⁶⁾

「환경과 녹색 성장」 교과서에서는 지식과 개념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태도, 바람직한 인성 확립 등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중요시 여긴다. 기후 변화와 같은 녹색 성장에 따른 주제에는 항상 윤리적인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는 점이 특히 강조된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현 세대가 온실 기체를 감축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생각해서 결정하여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첨예한 이해 관계가 발생한다면,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손해와 불편함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치게 된다. 내가, 우리 기업이, 우리나라가 온실 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정말 비도덕적인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기존의 교육이나 상식선에서 쉽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적절한 교육이 없다면 녹색 성장과 관련된 주제에 따라서는 그런 합의점이 잘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새 교육과정에서는 바람직한 환경 윤리나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 활동 및 인성 함양'에 중점을 둔 활동을 각 소영역에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실천, 토론 등 직접적 문제 해결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녹색 성장과 환경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며 그 활동과 결과를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기록하여 학생 개인의 성장을 관찰, 평가할 수 있는 요소로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또, 환경,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관련시켜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과 통합적인 이해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III. 「환경과 녹색 성장」의 특징 및 향후 과제


「환경과 녹색 성장」의 주요 과제는 기존의 지식적 인재를 키우던 교육 방식과는 달리 녹색 생활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도록 하는 조기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녹색 성장을 이끌어 갈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환경과 녹색 성장」은 전통적인 환경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전 세계적인 쟁점인 기후 변화 문제, 자원과 에너지 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또, 학생들에게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환경 친화적 생활을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을 할 수 있는 창의, 인성적인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교육이 예전보다 더욱 강조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녹색 교육의 또 다른 특징은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을 하나의 개념으로 승화시킨 창조적 교육이라는 것이다. 「환경과 녹색 성장」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기존의 교육과정과는 다르게 '환경 프로젝트'라는 단원이 삽입되어 있다. 이는 학생 스스로 녹색 성장 교육에 걸맞는 녹색 교육 활동을 실천하면서 자신의 창의력과 인성을 높이는 프로젝트이며 미래형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꾸준한 인성 교육을 통하여 선진 녹색 시민으로서의 소양 증진을 갖추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녹색 교육 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창의와 인성을 기록화 할 수 있는 교육 체제가 이루어져 대입 입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력과 인성을 발달시켜 줄 수 있는 '환경 프로젝트' 활동 내용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

「환경과 녹색 성장」의 주요 과제는

녹색 생활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도록 하는 조기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녹색 성장을 이끌어 갈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환경과 녹색 성장」은 전통적인 환경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전 세계적인 쟁점인 기후 변화 문제, 자원과 에너지 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또, 학생들에게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환경 친화적 생활을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을 할 수 있는 창의, 인성적인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교육이
예전보다 더욱 강조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이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추상적인 개념인 창의 인성의 내용을 교과 내용에 적절하게 포함시켜야 하기에 많은 아이디어와 현장 경험이 필요한 과제이다. 또, 「환경과 녹색 성장」 대단원 중의 하나인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한 사회’는 기존의 「환경」 교과서에 없던 새롭게 도입된 부분이다. 새롭게 도입된 분야이니만큼 더욱 많은 자료와 리소스를 모아 공급하여야 한다. 좋은 자료와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리소스를 한데 모아 제공하여 주는 것도 향후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교육계, 현장 교사가 함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이다. 

- 1) 녹색 성장에 관한 서울 이니셔티브 후속 조치 수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 교육인적자원부(2007). 한문, 교양 선택 과목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 3) 이것은 아직 선도적인 기술이 명료화되지는 않고, 수소전지, 하이브리드카, LED 조명, 오염 처리 기술 등 화석 연료를 활용하지 않은 기계 장치 개발 등을 사례로 열거하는 수준이다.
- 4) 교육인적자원부(2007).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 5) 교육인적자원부(2007). 과학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 6) ‘환경과 녹색 성장’ 교육과정의 ‘6.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한 사회’, ‘7. 녹색 문명 구현을 위한 실천’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윤석주 (러시아 하바롭스크 한국교육원 원장)

러시아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제도

최근 일련의 교육 개혁 조치로 국제 표준에 근접하는 교육 체제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러시아는 구소련 시대의 교육 체제를 근간으로 전 국민의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 교육의 다양화, 개별화 및 민주화 지향, 학생·학부모·기업 등의 요구를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 교육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러시아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언급하기에 앞서, 우선 러시아의 교육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일반 교육 체계

러시아 교육 체계는 의무 교육 단계의 보통 교육, 중등 직업 기술 학교에 해당하는 전문 교육 그리고 대학 이상의 고등 교육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보통 교육은 우리나라 초 중등 교육에 해당하는 단계로 기본적으로 11학년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의 교육 개혁에 따라 모스크바 지역을 중심으로 12학년제를 채택하는 학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¹⁾

중등 직업 기술 학교는 2~3년 과정으로 각 분야의 전문 기술을 지도하는 학교로 일반 학교 9학년을 이수한 학생들이 진학한다.²⁾

고등 교육은 대학과 대학원으로 구분되며, 대학의 경우 국립과 사립이 있고 설립 시, 정부의 허가와 인증을 필요로 한다. 대학생은 일정 비율의 의무적 장학생 선발과 함께 납입금을 납부하는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최근 들어 대학의 재정 수입 확보를 위하여 학비의 인상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립 대학들은 국가의 부문별 인력 양성 배치 계획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어 왔으며, 종합 대학은 기초 인력 양성을 담당하고 단과 대학들은 단일 계열의 전문 분야별로 특성화가 비교적 잘 되어 운영되고 있다.

러시아의 모든 교육 기관은 9월부터 학기가 시작되어 다음 해 6월에 수업을 종료하며, 여름 방학 기간은 한국에 비하여 긴 편이나, 겨울 방학은 짧은 편이다.³⁾

II. 슈콜라의 교육과정

러시아 슈콜라는 연방 교육과학기술부⁴⁾(이하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과 지방 교육부의 지역별 교육과정 운영 지침을 바탕으로 학교별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연방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는 연방 교육과정 지침에 근거하여 개인별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 2) 연방 교육과정 지침에는 필수 교육 과목과 교과별 최소 수업 시수를 포함한다.
- 3) 지역별 교육과정 지침에는 지역의 역사나 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한다.
- 4)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는 학교별 특성화 및 발전 방침을 포함할 수 있다.

- 5) 각 학교는 연방 교육과정 지침을 기초로 하되, 학생 개인의 적성과 요구, 학교의 특성화 방침에 따라 일부 교과목의 시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연방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과목별 최소 수업 시수 및 주간 최대 수업 시수를 지켜야 한다.

연방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교과목별 교육과정 편성표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러시아 연방 교육과정 편성표

영역	교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언어	러시아어	5	5	5	5	6	6	4	3	2	2	1	1
	문학	4	4	3	3	2	2	2	2	3	3	3	3
	영어		2	2	2	3	3	3	3	3	3	3	3
수학	수학(셈)	4	4	4	4	5	5	5	5	5	5	4	4
	대수학												
	기하학												
자연과학	환경					2						1	1
	주변을 둘러싼 세상	2	2	2	2								
	물리							2	2	2	2	3	3
	화학							2	2	2	2	3	3
	생물						1	2	2	2	2	3	3
	지리학						1	2	2	2	2	3	3
교양 (일반 상식)	역사					2	2	2	2	2	2	2	2
	일반 사회						1	1	1	1	2		
	경제학											2	2
	안전 교육 (위험 없는 삶을 위하여)								1		1	2	2
체육	무용												
	체육	2	2	2	2	2	2	2	2	2	2	2	
실과	노동	1	1	2	2	2	2	2	1				
	컴퓨터								1	2	2		
예술	음악	1	1	1	1	1	1	1	1	1			
	미술	1	1	1	1	1	1	1			1		
최소 수업 시간*		20	22	22	22	26	27	29	30	29	31	32	32
지역 및 학교 재량 시간**		0	3	3	3	5	5	5	5	6	5	4	4
최대 수업 시간(1주 / 6일)***		20	25	25	25	31	32	34	35	35	36	36	36

* 1주일 동안 수업하여야 할 필수 수업 시간으로 교과별 최소 수업 시간을 모두 합산한 것이다.

** 지역별,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침에 따라 재량으로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간 총 수업 시간이다.

*** 최소 수업 시간과 지역 및 학교 재량 시간을 합산한 것으로, 1주일 동안 최대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 1학년 학생들은 주 5일 수업에 1교시가 35분이며, 나머지 학년은 주 6일 수업에 1교시는 45분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일부 교과목의 일부 시간을 지역 실정에 맞게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여 가르칠 수 있다.⁶⁾

러시아 슈콜라 교육의 특징은첫째, '논리성'을 강조한다.

수학이나 과학 시간뿐만 아니라학교생활전반에서 '논리성'을 강조한다.

둘째, '기초학문' 교육을 중요시한다. 수학, 물리, 화학 등 기초과학에 많은 시간을편성하도록 하여 이들 교과를 통한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르치고 모든학문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있다.

셋째, 모든학교와 교사들은 기본학습태도를 중요시한다.

바른자세로 글씨 쓰기,바르게 서서바르게말하기,학용품정해진 위치에바르게 놓기 등을 지도하여 몸에배도록 하고있다.

러시아 슈콜라의 평가 방법에 대한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별, 교과별 계획에 따라 절대 평가⁷⁾를 하며, 일제 교사 형식보다는 평소 형성 평가 및 과제물에 대한 평가 등을 위주로 평가하고 있다.
- 2) 전기 중등 단계 해당하는 9학년을 마친 후에, 그 동안의 교과별 평가를 바탕으로 10학년으로 진급하거나 중등 기술직업학교로 진학한다.
- 3) 11학년 2학기에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통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면 졸업장을 수여한다. (졸업 시험)⁸⁾
- 4)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슈콜라의 졸업 시험을 토대로 하여 학생을 선발한다.⁹⁾

Ⅲ. 슈콜라의 교과서

슈콜라의 교과서 채택 및 사용에 대한 러시아 연

방 교육부의 주요 지침은 다음과 같다.

- 1) 매년 연방 교육부는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검증된 교과서 목록을 발표한다.
- 2) 학교는 교사 회의를 통하여 연방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과서 목록 중에서 적당한 교과서를 선택한다.
- 3) 모든 학생은 교과서를 무료로 지급받는다.
- 4) 학생들이 사용한 교과서는 다시 학교 도서관에 반납하여 3년 동안 이어서 사용하고, 그 후에는 학교에서 새 교과서를 구입한다.
- 5) 교사는 학생들에게 연방 교육부 추천 교과서 목록 외에 필요한 보충 교재를 구입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음은 슈콜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연방 교육부 추천 교과서 목록 중에서 '수학' 과목에 대한 예시이다.

【표 2】 러시아 연방 교육부의 추천 교과서 목록(예시)

일련 번호	저자	교과서명	학년	출판사
161	알렉산드라	수학	1	위타 프레스

* 수학의 경우 학년별로 6~20종¹⁰⁾을 제시, 총 142종의 수학 교과서를 추천하고 있다.

Ⅳ. 글을 맺으며

러시아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제도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치면서 그동안 러시아 생활에서 느낀 러시아 슈콜라 교육의 특징에 대해 몇 가지를 언급함으로써, 우리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같이 생각하여 보

았으면 한다.

우선, ‘논리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 수학이나 과학 시간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서 ‘논리성’을 강조한다. 문제에 답하거나 자기의 의견을 주장할 때 반드시 근거 자료를 토대로 하고 답이나 주장하는 바의 타당성, 논리성을 검토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초 학문’ 교육을 중요시한다. 교육과정 편성 지침에서 알 수 있듯이 수학, 물리, 화학 등 기초 과학에 많은 시간을 편성하도록 하여 이들 교과를 통한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르치고 모든 학문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학교와 교사들은 기본 학습 태도를 매우 중요시한다. 단적인 예를 들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바른 자세로 글씨 쓰기, 바르게 서서 바르게 말하기, 책상 위에 놓는 학용품을 정해진 위치에 바르게 놓기, 의자에 앉을 때 손의 위치나 모양, 발표 시 거수 자세 등을 지도하여 몸에 배도록 하고 있다.

나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등교하고 있는 하바롭스크의 한 슈콜라를 보면서, 기본을 강조하면서도 학생들에게 오고 싶은 학교를 만들고 있는 러시아의 밝은 미래를 본다. **연**

참고 문헌

- 러시아 연방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규정), 2004, 러시아 연방 교육과학기술부.
- 러시아 하바롭스크 주 교육과정 운영 지침(규정), 2005, 러시아 하바롭스크 주 교육부.
- 러시아 하바롭스크 4번 슈콜라(동양어 전문 학교) 교육과정, 2009.
- 러시아 하바롭스크 8번 슈콜라 교육과정, 2009.
- 러시아 교육과학기술부 웹 사이트 <http://mon.gov.ru>

- 1) 우리나라의 초 중등학교에 해당하는 곳을 러시아에서는 ‘슈콜라’라고 부르며, 보통 11년제로 학생들은 1학년부터 11학년까지 한 학교에서 같이 다닌다. 보통 1~4학년을 초등 단계, 5~9학년을 전기 중등 단계(중학교), 10~11학년을 후기 중등 단계(고등학교)로 구분한다. 최근 초 중등 교육을 기존 11학년제에서 12학년제로, 고등 교육은 5-3년제에서 4-2-3년제로 개편하여 세계적인 학제 통일화 추세에 대응하고자 하는 교육 개혁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은 매우 부분적이다.
- 2) 이들 중등 직업 기술 학교의 경우 졸업 후 최소한 직장에서 2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보통 슈콜라의 경우 여름 방학은 6월~8월(3개월), 겨울 방학은 12월말~1월초(약 2주일 간)이다.
- 4) 2004년 3월 과학 기술을 중시하는 실용적인 인력 양성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러시아는 기존의 교육부와 산업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http://mon.gov.ru>)로 통합하였다.
- 5) 현재 교육과정은 2004년에 개정되어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 6) 예를 들어 생물학, 지리학, 실과, 역사 과목에서 1시간씩 줄여서 그 지역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과목을 가르칠 수 있다.
- 7) 평가 등급은 1~5등급이며 각각 우리나라의 가, 양, 미, 우, 수에 해당한다.
- 8) 러시아 어와 수학이 필수 평가 과목이다. 아울러, 학생들은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과목의 졸업 시험을 선택하여 치를 수 있다.
- 9) 대학은 전공에 따라 주로 발표 중심의 심층 면접 등 자체 선발 전형을 실시하기도 한다.
- 10) 1~4학년 12종, 5~6학년 6종, 7~9학년 14종, 10~11학년 20종

교과서적인 사람



양홍권 ((주)더텍스트 편집부(예체능팀) 부장)

국어사전에서 ‘표준어’ 항목을 찾아보면 ① 한 나라에서 공용어로 쓰는 규범으로서의 언어. ② 의사소통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쓴 공용어 자격을 부여받은 말. 이라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표준어는 이미 그 나라에서 쓰이는 말 중에 문화적 중심을 이루는 지역에서 비교적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언어, 또는 사람들이 친근하게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표준어 규정에서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한 것도 언어의 대표성을 배려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러나 표준어는 시대와 사회 상황에 따라 수정·보완되기도 한다. ‘근사하다.’라는 말만 하더라도 그렇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멋있거나 제법 그럴듯해 보이는 대상에 대해 “근사하다.”라고 말하면 비표준어를 사용한다고 지적받기 일쑤였다. ‘근사하다.’라는 말은 ‘비슷하다.’라는 뜻 이외에는 표준어로 인정받지 못해 왔기 때문이다. 지금은 멋있는 것을 보고 “근사하다.”라는 말을 써도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받게 되었지만…….

☐ ‘교과서적’에 담긴 부정적인 의미

그런데 필자가 종사하고 있는 교과서 편집 분야에서도

표준어 해설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고 싶은 단어가 있다. 바로 ‘교과서적’이라는 말이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바탕을 두고 편찬된 학생용 교재인 만큼 그 어느 책보다 가장 정확한 내용, 철저한 맞춤법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도서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 ‘교과서’라는 단어에 ‘적’이라는 접미사가 붙으면 사정이 달라진다.

“저 사람의 교과서적인 생활 태도를 본받아야 해!”

“저 사람의 사고방식은 너무 교과서적이야!”

위의 두 예문에서 사용된 ‘교과서적’이라는 말은 너무도 대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무엇인가 ‘모범적’인 것을 의미하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는 어쩐지 ‘구태의연하다.’라는 부정적인 생각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교과서적’이라는 말에는 하나의 단어에 서로 상충되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펴낸 표준국어대사전에도 ‘교과서적’이라는 단어에 대해 ① 해당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것. ② 판에 박혀서 현실적이지 않은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였을까?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검정 교과서의 발행

시스템을 살펴보아야 할 듯하다.

먼저, 교과서가 ‘해당 분야에서 모범이 된다.’는 점에는 누구나 쉽게 수긍하리라 생각한다. 교과서 검토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출판사는 해당 분야의 수준 높은 집필진과 전문 편집인들로 팀을 이루어 2~3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교과서 제작에 만전을 기울이기 마련이다. 이렇게 하고서도 교과서가 최종적으로 학생들에 의해 사용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검토 심사를 통과하여야만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내용 면에서는 당연히 그 분야(해당 교과목)의 모범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판에 박혀서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라는 해설에 있다. 왜 앞에서는 모범이 된다고 해 놓고선 뒤에서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규정하였을까?

그 이유는 아마도 교과서 검토 제도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교과서 검토 심사에 합격하면 최소 5년, 길게는 무려 9년 동안 거의 같은 내용의 교과서를 사용해 왔다. 그러다 보니 비록 내용 그 자체에는 큰 오류가 없다 하더라도, 21세기 이후 급변해 온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환경 하에서 기존의 교과서가 시대의 변화를 그때그때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왔음이 현실이다.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과서가 되고 보니 교과서와 현실 사이에 괴리감이 발생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감수성이 예민한 학창 시절에 그들만의 개성 있는 감각을 추구하는 틈에이저들에게 있어 이런 교과서는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들로서는 ‘교과서’라고 하면 재미없고 딱딱한 이미지부터 떠오르기 마련이었고, 학창 시절의 이런 기억은 그들이 어른이 되고 학부형이 되어서까지 고정 관념화되어 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국어사전의 표준어 사정(査定) 업무에 관여하시는 분 중에도 이런 기억을 지닌 분이 계실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아직도 ‘교과서적’이라는 단어 해설에 ‘판에 박혀서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 21세기와 제7차 교육과정의 고사

많은 교육 전문가가 참여하여 개발한 교육과정은 어쨌든 새 교과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런 만큼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 검토 교과서 작업에 참여한 수많은 저자, 출판사, 편집자는 비록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더라도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묵묵히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한다. 비록 한편으로는 ‘교과서적’이라는 일종의 오명(汚名)도 함께 지녀 오기는 했지만 말이다.

이미 10년 전 일이지만, 21세기의 첫 관문인 2000년을 즈음하여 전 세계는 각 분야에 걸쳐 ‘뉴 밀레니엄’이라는 흥분의 도가니에 휩싸인 적이 있었다. 새로운 세기를 맞아 과거와는 다른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었기 때문 이리라.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일찍이 21세기가 열리기 3년 전인 1997년에 획기적인 내용의 제7차 교육과정을 발표하였다.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이라는 기본 방향 아래 기존의 교육 내용 전반에 걸쳐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것이었다.

제7차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편집자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교과서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에서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 체제’를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곧 국어사전에서 정의한 ‘교과서적’이라는 용어의 제②항 ‘판에 박혀서 현실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교육 수요자인 학생 친화적인 교과서, 시대에 앞서가는 교과서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과서상인 ‘다양한 학습 자료 제시, 시대 상황 반영, 독창적이고 참신한 교과서’와 일맥상통하는 점이기도 하였다.

☐ 교과서에 개혁의 바람이 불다

이렇듯 21세기를 내다보며 교육 개혁을 시도한 제7차 교육과정이었지만, 막상 검정 교과서의 발행은 편찬상의 유의점 등에 의해 드러나지 않게 규제가 가해져, 적어도 교과서의 외형적인 면에서는 그리 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내용이나 구성 면에서는 새 교육과정의 성격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이지 않고 재미없는 교과서였다.

학생들은 교과서에 제시된 지식 체계를 배우면서 실제 세계를 간접적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관심 분야나 세상에 대한 지식을 축적해 나간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교과서를 싫어하고 멀리 한다면 이러한 과정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만다.

그러던 중 2006년, 드디어 교과서 자체에도 개혁의 바람이 불게 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이 국가적인 교육 개혁을 위한 나침반 역할을 하였다면, 2007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서 자체에 대해 개혁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새 교육과정에 따라 2009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현재의 교과서는 이전까지의 교과서와는 여러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우선 저자 구성 면에서 예전 교과서가 학자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현장 교사들이 저자로 대거 참여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과서로 변신하게 되었다. 내용 구성에 있어서도 다양한 정보 통신 기술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여 컴퓨터 세대의 요즘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또, 외형 체제 면에서는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하여 참신하고 다양한 편집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존 교과서와는 차별화된 독창적이고 수준 높은 교과서를 선보이게 되었다. 그 결과 교과서의 질이 예전에 비해 눈에 띄게 향상되었음을 느낄 수 있다.

더욱이 2009년에 발표된 미래형 교육과정에서는 검정 주기를 철폐함에 따라 앞으로의 교과서는 보다 빠르게 사

회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게 되었고, 편집 및 외형 체제 면에서도 출판사에 더욱 많은 자율성이 부여됨으로써 '판에 박힌 교과서'가 아니라 '시대를 선도하는 교과서'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제 교과서 편집자들은 교과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요즈음 학생들의 취향을 고려하여 한번쯤은 에듀 엔터테이너(edu-entertainer) 입장에서 교과서 편집을 고려해 보아야 할지도 모른다. 교과서를 통해 교육적 의도도 잘 구현해야 하겠지만, 편집 양식과 외형적인 면의 진보 없이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변하지 않는 한 여전히 '교과서적'이라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 교과서적인 의미를 긍정적인 것으로

현재도 교과서 편집 업무에 종사하시는 나의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은 지금에 비해 훨씬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도 교과서 편집을 통해 공교육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긍지 하나로 편집자의 신념을 지켜 왔다. 21세기의 교과서 편집자는 우리 선배님들의 이런 긍지를 지니고 시대에 앞서가는 교과서를 만드는 기수 역할을 하여야 하리라 생각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저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판에 박힌 교과서'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편집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지가 가시화되어 교육 당사자 그 누가 보더라도 '동 시대와 호흡하는 교과서'라고 인정하는 공감대가 확산되어 나간다면, 머지않아 사람들 사이에서 '교과서적'이라는 단어에 대한 생각도 점차 긍정적인 의미로 바뀌어 나갈 것이다. 아직은 교과서 편집자로서 나만의 선부른 희망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발간될 교과서는 내용 서술, 구성, 판형, 디자인, 체제 등 모든 면에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고도의 상품성을 지닌 도서



교과서를 통해 교육적 의도도 잘 구현해야 하겠지만,
 편집 양식과 외형적인 면의 진보 없이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변하지 않는 한 여전히 ‘교과서적’이라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로 꾸준히 진화해 나가리란 점이다.

그리하여 교육과정을 잘 반영하면서도 재미있는 교과서, 내용이 충실한 교과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교과서, 지식이나 문화의 변화를 선도하는 교과서, ICT를 넘나드는 첨단 교과서로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교육 문화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날을 기대해 본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교과서적’이라는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게 될 날이 오리라.

교과서적(教科書的) [교-] 「관형사 명사」

「1」 해당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또는 그런 것.

「2」 시대를 앞서가는, 또는 그런 것. 다양하면서도 흥미로움.

이처럼 ‘교과서적’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의 표준어로 자리 잡게 될 그날을 위해 교과서 편집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절을 바꾸어 가며 교과서 원고와 씨름하고, ‘세상을 바꾸는 교과서의 힘’을 보여 주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연**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

음악 교과서 감상곡 둘러보기



김대원 (경인고등학교 교감)¹⁾

음악 교과서에 실려 있는 음악 작품은 어떤 이유로 실리게 된 것일까? 학교 급별로 다를 수도 있고 저자(著者)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음의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악곡의 내용이나 수준이 학생의 수준에 적절한 곡인 경우를 들 수 있다. 즉, 악곡이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할 때 적합한 내용이거나 애초부터 어린아이를 위해 작곡된 곡을 교과서에 수록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 예컨대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나 프로코피에프의 ‘피터와 늑대’ 등을 들 수 있다. 더 나아가 교육적인 의도를 갖고 작곡되어 교과서에 실리게 된 악곡도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브리튼의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을 들 수 있다. 둘째, 음악적 개념이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로 변주곡, 소나타, 협주곡, 교향곡 등 음악적 형식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되는 악곡도 있고 특징적인 리듬이나 가락, 화성 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악곡도 있다. 셋째, 음악과 다른 예술과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해 실린 악곡도 있다. 시나 소설, 희곡 등의 문학 작품을 바탕으로 한 음악, 미술과 관련된 음악, 무용과 관련된 음악 등 다양한 예술 장르와 연관을 맺고 있는 음악 작품은 교과서의 중요한 제재가 된다. 넷째, 예술성이 높은 음악 작품 자체를 순수하게 감상하게 하기 위해 제시된 경우도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음악 교과서에 실려 있는 음악 작품 특히, 감상곡을 중심으로 위에서 열거한 이유로 실리게 된 몇 작품을 골라 그 악곡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악곡의 특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음악가 중에는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을 위해 작곡된 작품 중에도 뛰어난 작품성을 가지는 곡이 많다. 예컨대 슈만(Schumann)의 피아노곡집 ‘어린이를 위한 앨범’이나 ‘어린이의 정경’, 차이코프스키(Tchaikovsky)의 ‘어린이를 위한 앨범’, 드뷔시(Debussy)의 ‘장난감 상자’, 바르토크(Bartok)의 ‘어린이를 위하여’ 등의 작품을 들 수 있다. 특히, 러시아의 작곡가 프로코피에프(Prokofiev)는 어린이를 위한 곡을 많이 작곡했는데, 피아노를 배우는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를 위한 음악’이라는 악곡집, 소관현악을 위한 아동 모음곡 ‘여름의 하루’나 가곡 ‘미운 오리 새끼’ 등 다양한 곡이 있으나 그중에서 특히 유명한 것은 1936년 작곡한 음악 동화 ‘피터와 늑대’이다. 이 ‘피터와 늑대’는 모스크바의 중앙 아동 극장의 의뢰로 작곡한 것인데 러시아 민화로부터 그 소재를 취하고 있다.

‘피터와 늑대’의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하면 주인공 피터가 늑대를 조심하라는 할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집을 나와 연못에서 고양이, 오리와 새들과 함께 놀다가 늑대가 나타나 옥신각신 끝에 늑대를 잡는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곡은 1936년 5월 3일 모스크바에서 작곡자 자신의 지휘로 초연되어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 작품은 일반 음악 감상용이라기보다는 음악을 통해 동화 속의 세계로 안내하는 한편, 클래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든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어린아이들에게도 흥미 있는 즐거운 이야기와 음악을 결부시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동물을 특정한 악기로 담당케 하여 오케스트라 악기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시도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피터는 현악 5부 합주로, 작은 새는 플루트, 오리는 오보에, 고양이는 클라리넷, 할아버지는 바순, 늑대는 3개의 호른, 늑대를 잡는 사냥꾼의 총소리는 팀파니와 큰북으로 표현하는 등 악기 하나하나에 등장인물을 대입함으로써 해당 악기의 느낌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또, 내레이션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여 마치 구전 동화를 듣는 것 같은 기분으로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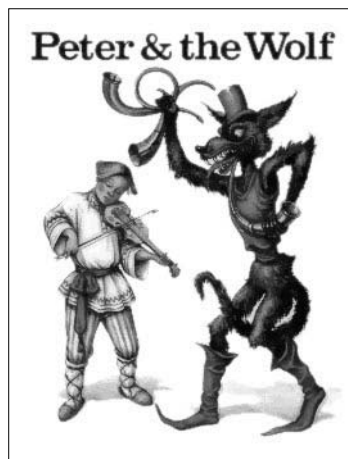
이처럼 아이들을 위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음악과 결부시켜 음악에 흥미를 갖도록 만들어진 작품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학생들을 위해 교육적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음악 작품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곡이 벤자민 브리튼(Edward Benjamin Britten)의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이라는 곡이다.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은 ‘퍼셀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푸가’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영국의 유명한 작곡가 헨리 퍼셀의 멜로디를 기반으로 구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케스트라라는 것을 청소년들에게 이해시키려는 목적으로 1945년에 영국 정부가 제작한 ‘관현악의 악기’라는 교육 영화를 위해서 작곡된 청소년 시청각 교육용으로 만든 작품이었다.

관현악의 각 악기군(群)인 목관 악기, 금관 악기, 현악기, 타악기가 각각 퍼셀의 주제를 연주한 뒤 이 주제에서 13개의 변주가 연주되며 끝으로 푸가가 나와 곡을 맺는다. 당시 누구나 알고 있었던 퍼셀의 선율과 자신의 선율을 교묘하게 사용해 이들 악기의 특색을 귀로 듣는 것만으로도 즉시 알 수 있게 하였고, 중간 중간에 지휘자가 해설을 하며 연주하도록 하여 더욱더 이해가 쉽도록 되어 있다.

이 곡은 현재까지도 세계의 오케스트라에 의해서 많이 연주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등에는 빠짐없이 연주되는 단골 레퍼토리(repertoire)이다.

음악과 문학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예술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시는 노래로 불리고, 소설이나 희곡은 오페라나 관현악곡의 주제가 되기도 한다. 교과서에 실린 곡을 살펴보면 괴테(Goethe)의



〈그림 출처〉 위키피디아 (1947 Peter and the wolf coloring book cover, artist uncredited.)



〈사진 출처〉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 CD(Decca 레코드사)



〈사진 출처〉 세헤라자데 CD
(Deutsche Grammophon 레코드사)

시 ‘마왕’은 슈베르트(Schubert)의 가곡으로, 실러(Schiller)의 송가(頌歌) ‘환희에 불임’은 베토벤(Beethoven)의 교향곡 9번 ‘합창’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리그(Grieg)의 모음곡 ‘페르귄트(Peer Gynt Suite)’는 노르웨이의 문호 입센(Ibsen)의 시극(詩劇)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비제(Bizet)의 모음곡 ‘아를의 여인(L’Arlesienne Suite)’은 알퐁스 도데(Alphonse Daudet)의 희곡을 바탕으로 한 극(劇)의 부수 음악으로 작곡되었다.

러시아의 작곡가 린스카-코르사코프(Rimskii Korsakov)가 작곡한 교향시 또는 교향 모음곡 ‘세헤라자데(Scheherazade)’는 ‘아라비안나이트’ 또는 더 적절하게는 ‘천일야화(千一夜話)’라는 이야기를 소재로 만든 관현 악곡으로 최근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의 배경 음악으로 사용하여 더 잘 알려진 곡이기도 하다.

‘천일야화’의 줄거리는 대략 다음과 같다. 옛날 사산 왕조에 샤리아르라는 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왕비의 부정을 목격하고 왕비를 죽인 후로 여자를 믿지 못하게 된 왕은 여자를 모두 죽여 버릴 것을 다짐하고 매일 밤 처녀를 데려다 동침한 후 다음날 아침 죽이기를 반복하게 된다. 이에 한 대신의 딸 세헤라자데가 왕의 신부가 되길 자청하게 되고, 그녀는 죽음을 면하기 위해 첫날밤부터 밤마다 왕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여 왕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1001일을 함께 보내게 되면서 여자에 대한 증오를 거두고 세헤라자데와 사랑하며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작품은 1888년 여름 린스카-코르사코프가 한 호반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던 중에 작곡한 것이다. 이 곡은 아라비안나이트 중에서 4개의 장면을 뽑아 음악으로 그리고 있는데 제1곡 ‘바다와 신밧드의 배’, 제2곡 ‘칼렌다 왕자의 이야기’, 제3곡 ‘젊은 왕자와 젊은 공주’, 제4곡 ‘바그다드의 축제-바다난파-종결’ 등 모두 4곡의 모음곡으로 되어 있다.

첫 곡에서 왕의 주제는 매우 권위적인 관현악 합주로 연주되며 세헤라자데의 주제는 하프와 함께 슬프고도 애잔한 바이올린 솔로(solo)로 묘사된다. 세헤라자데의 주제는 전곡에 걸쳐 고루 나타나게 되는데, 마치 왕에게 매일 밤 이야기를 시작하는 세헤라자데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다. 신밧드의 주제는 플루트와 관현악으로 나타나는데 신밧드가 배를 타고 항해하면서 벌어지는 갖가지 모험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파도를 타고 유유히 항해하는 모습과 배에 부딪치는 파도의 모습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작곡자인 린스카-코르사코프는 젊은 시절 해군 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바다를 항해한 경험이 있어 그런 경험이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이 곡을 듣고 있으면 정말 푸른 물결을 헤치고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신밧드의 배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제2곡과 제3곡은 제목은 있으나 천일야화 중 어떤 이야기를 지목해 음악화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따라서, 이곡을 감상할 때에는 굳이 제목에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작곡자 자신도 악보를 재판(再版)할 때 본래의 제목을 모두 지워버렸다는 사실은 이에 대한 방증이 아닐까 생각된다. 제



〈그림 출처〉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

3곡에서는 이 곡에서 가장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선율을 들을 수 있는데, 현악 합주의 아름다운 선율과 아라비아의 피리 소리를 연상시키는 독주 관악기의 이국적 선율이 관능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귀엽고 익살스런 느낌을 주기도 한다.

제4곡은 지금까지 나왔던 곡들의 종합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곡에서는 아라비아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관능적인 춤과 음악, 화려한 색채의 카펫, 갖가지 향료 등이 어우러진 바그다드의 축제와 신밧드의 항해와 파선 그리고 세헤라자데의 주제와 왕의 주제의 조화를 다양한 관현악기의 음색의 조화로 처리하고 있다.


림스카코르사코프는 그가 저술한 관현악법 교재가 지금도 유명한 음악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관현악법의 대가로 알려져 있다. 세헤라자데는 관현악기의 다양한 색채감을 느낄 수 있는 곡이다. 마치 화가가 팔레트에서 여러 가지 색을 조합해서 필요한 색을 만들어내듯 다양한 음색의 관현악기들을 조합해 상황에 맞는 음색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음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색채의 향연을 감상하기에 적합한 곡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초현실주의 화가 파울 클레(Paul Klee)는 “예술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 음악과 예술이 공통된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인지 음악과 미술은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 예술이지만 두 분야의 예술가들은 서로의 작품들에서 영감을 주고받아왔다. 그림에서 영감을 얻은 음악 작품 중에 대표작을 꼽으라면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을 들 수 있다.

무소르그스키(Mussorgsky)는 러시아 국민악파를 대표하는 작곡가였지만 생전에 그의 작품은 대부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 불행한 시간을 보냈다. 이런 무소르그스키에게 따뜻한 원조의 손길을 뻗어

주었던 친구인 건축가이며 화가인 하르트만(Hartmann)의 죽음을 애도하며 작곡한 것이 ‘전람회의 그림’이다. 이 곡은 1873년 여름 하르트만이 돌연 세상을 떠나고 그 후 친구들에 의해 유작 전람회가 개최되어 이 전람회를 보러갔던 무소르그스키는 그때의 감동을 바탕으로 피아노 모음곡 ‘전람회의 그림’을 작곡하게 되었다.

이 모음곡에는 10장의 그림을 음악으로 그리고 있는데 모두 러시아풍의 음악으로 그 특징을 잘 살리고 있다. 즉, ‘난쟁이’, ‘옛 성’, ‘휘일리 궁전의 공원’, ‘우차(Bydlo)’, ‘달걀 껍데기가 붙은 병아리 춤’, ‘사무에 콜텐베르크와 슈메일레’, ‘리모주의 시장’, ‘카타콤’, ‘바바야가의 오두막집’, ‘키에프의 대문’ 등 10곡으로 구성된다. 특히, 처음과 각 곡의 사이에는 프롬나드(Promenade)라는 제목의 간주곡으로 시작되는데, 특색 있는 러시아풍의 멜로디로 산책이라는 표제가 붙어있으며, 그림을 보러 다니는 작곡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전람회장을 걸어 다니며 생각하고 있는 각 그림들에 대한 느낌을 암시한다.

유감스럽게도 이 피아노 모음곡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공개석상에서 한 번도 연주될 기회는 없었지만 이 곡이 가진 참신한 감각과 독창성은 훗날 드뷔시를 비롯한 많은 작곡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현재는 원곡인 피아노곡보다는 라벨에 의해 편곡되어 오케스트라용 악곡으로 널리 연주되고 있다. 

🌐 참고 문헌

- 김경수(2000). 『우리가 듣는 클래식은 다르다』. 한국문학사.
- 세광음악출판사(1982). 『최신 명곡해설전집』.
- 아구타가와 야스시(2004). 『클래식 명곡 101 비하인드 스토리』. Dream time.
- 아름출판사(1992). 『클래식 명곡 이야기』.
- 진희숙(2002). 『클래식 오딧세이』. 청아출판사.

1) 전 교육과학기술부 음악과 편수 담당 연구관

오늘의

교과서

출판인

송영석

-해냄에듀 CEO-

① 해냄에듀는 출판 역사가 길지 않아 독자들이 해냄에듀에 대해 궁금해 할 것 같은데요. 해냄에듀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해냄에듀는 2005년 5월에 설립된 교육 전문 출판사로, 27년의 역사를 가진 중견 단행본 출판사인 해냄출판사의 자매 회사입니다. 현재 해냄에듀가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분야는 중 고등학교 국어 문학 교과서, 언어 영역과 외국어 영역의 수능 참고서, 논술 학습 참고서 출판입니다.

올해로 창립 5주년을 맞이하는 해냄에듀는 그리 길지 않은 출판 역사에도 불구하고 교육 출판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해냄에듀의 대표 참고서 브랜드인 해냄 수능 시리즈가 창립 3년 만에 한국경제신문사 주최 대한민국 교육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고, 외국어 영역의 홀릭 시리즈, 언어 영역의 노피현 시리즈, 더블 체크 시리즈 등이 선생님들과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를 개발하여 검정 심사에 합격하였습니다.

현재 해냄에듀는 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검정 출원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와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교과서와 관련해서는 ‘국어 교과서 전문 출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단행본 출판사인 해냄출판사를 경영하시다가, 교육 사업을 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해냄출판사는 1983년에 설립된 출판사로, 우리 민족의 역사 교과서로 평가받고 있는 조정래 선생님의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세계적 작가인 주제 사라마구의 작품 등을 출판하여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오고 있는 곳입니다. 그동안 해냄출판사를 통해 문학, 인문학, 철학 분야에서 많은 양서를 출판해 오면서, 우리나라 말과 글에 대한 근본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국어 및 문학과 관련된 교육 출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해냄출판사가 그동안 문학 분야의 단행본을 많이 출판해 왔기 때문에, 그 출판 정신을 이어서 교육 분야의 출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저는 해냄출판사의 출판 경험이 해냄에듀에서도 탄탄한 토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국어 및 문학 교과서를 꼭 개발하고 싶은 꿈을 지녀 왔습니다. 그리하여 제7차 교육과정 때 교과

서를 개발하여 합격시킨 사람들을 중심으로 편집진을 구성하였고, 필진 역시 국어 및 문학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였습니다.

③ 다른 출판사와는 다른, 해냄에듀만의 출판 정신이 있는지요?

저는 지금까지 출판이라는 한 길만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출판을 하면서 늘 가슴에 담아 두고 있는 것은, 책을 통해 그것을 읽는 사람들의 가슴과 정신을 고양시키고 지식과 문화를 풍부하게 하고 지혜를 갖추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의 그것이 쌓이고 확장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보다 풍요롭고 성숙하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해냄출판사의 정신이죠. 이것이 상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출판을 함에 있어서 기본이 되면서도 매우 중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권 한 권의 책을 개발할 때마다 이러한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해냄에듀의 출판 정신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해냄에듀에서 발간하는 교과서와 여러 종류의 문제집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를 보다 활기차고 자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정서적인 감동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드린 말씀 중에 특히 '정서적인 감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칫 교과서나 문제집에 대해 단순한 지식 전달의 수단으로 한정하여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안 된다고 봅니다. 교과서와 문제집에는 수많은 글이 실리고 그림이 들어가는데, 그것들은 지식의 전달은 당연한 것이고, 이 외에 정서적인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해냄에듀에서 발간한 책들에는 이러한 출판 정신이 녹아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국어 교과서의 경우 무엇보다 학생들의 가슴을 울릴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제재들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교과서의 삽화 역시 국내 최고의 삽화가에게 의뢰하여, 단순한 삽화가 아니라 작품 수준의 그림을 신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교과서를 가르치시는 선생님과 그 교과서를 배우는 학생들이 가슴으로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④ 단행본 출판사들의 분위기와 교육 출판사들의 분위기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단행본 출판사와 교육 출판사는 출판이라는 관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분위기는 사뭇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단행본 출판사들은 대표 이사들끼리는 물론이고 편집자들끼리도 유대 관계가 매우 강합니다. 서로 잘 어울리고 협력하고 존경하는 분위기이죠.

그러나 교육 출판은 단행본 출판사들에 비해 경쟁적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교육 출판을 하게 되면서 이런 점 때문에 많이 당황했죠. 또, 다른 출판사를 '경쟁사'라고 표현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적도 있습니다. 단행본 출판사들은 '경쟁사'라는 말을 쓰지 않거든요. 단행본들은 각각의 책이 저마다의 시장을 창출하고 독자층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경쟁 관계가 아니죠. 이에 비해 교과서나 학습 참고서들은 정해진 독자(학생 등)를 대상으로 한쪽이 독자를 확보하면 다른 한쪽이 독자를 잃게 되는 제로섬 게임 양상을 띠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육 출판사들은 경쟁 관계가 심화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⑤ 교과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해냄출판사가 해냄에듀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해냄출판사는 수많

은 문학, 인문학, 철학 분야의 단행본을 출판해 왔습니다. 이러한 해냄출판사가 지닌 토양이 국어 교과서 개발의 바탕이 되었지요. 해냄출판사의 편집진들 역시 문학, 인문학, 철학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냄에듀의 편집진들과 토의를 자주 합니다.

교과서에 실린 제재들의 대부분은 이와 같이 해냄출판사의 편집진들과 해냄에듀의 편집진들이 필자 선생님들과 함께 토의를 해 가면서 선정했습니다. 비근한 예로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린 판소리꾼 임방울에 대한 일대기는 해냄출판사에서 발간한 책에서 제재를 선정한 것입니다. 필자 선생님들과 해냄출판사 및 해냄에듀의 편집자들이 토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잊혀져 가는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깨우쳐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결론 끝에 이 제재를 선정한 것이죠.

㉠ 해냄에듀의 국어 교과서가 다른 출판사의 국어 교과서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냄에듀의 국어 교과서가 지닌 장점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학생들이 국어를 보고 듣고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기존의 국어 교과서가 읽기, 문학 중심인데 비해, 해냄에듀의 국어 교과서는 읽기, 문학은 물론, 학생들이 직접 국어를 듣고, 쓰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지요.

둘째, 교과서에 실린 내용들은 학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과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문학과 읽기 영역에서 특히 중점을 두었고, '실생활 소재'는 듣기 말하기 쓰기 문법 영역에서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과서를 통해 성취 기준을 달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학생들이 실생활 소재를 접할 수 있고 글을 통해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 것이지요.

셋째, 학교에서의 적합성 검증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해냄에듀의 국어 교과서는 개발 과정에서 끊임없는 수업 시뮬레이션을 통해 만들어 갔습니다. 이를 통해 완성된 교과서는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과서 개발 기간이 다른 출판사에 비해 매우 길었습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이러한 국어 교과서를 통해 생생한 현실의 국어와 감동적인 글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이번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출간 하시면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개선해야 할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제가 문제점을 파악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1학년 교과서가 올해에 처음으로 학교에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점을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굳이 문제점을 생각해 보자면, 개인적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는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출판사들이 문어발식으로 교과서를 개발하는 문제와 한 출판사에서 같은 교과서를 두 종 이상 중복하여 출판하는 문제는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한 출판사에서 같은 교과서를 중복하여 출판하는 문제는 올해 개발할 교과서부터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사실상 같은 출판사이면서도 법인만 다른 이름으로 출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출판사의 역량을 교과서에 집중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과목별로 전문화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 해냄에듀가 국어 교과서만을 개발하는 이유도 전문화를 위해서입니다.

둘째, 교과서의 합격 중수가 너무 많은 것 아

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경우 23종이 합격되었는데, 한 학년이 각각 네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92권의 책을 놓고 교과서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선생님들께서 책을 꼼꼼히 살펴보기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셋째, 학교에서의 교과서 선정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위의 두 번째 문제와 마찬가지로, 선생님들께서 교과서를 세밀하게 비교하여 선정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과서를 선생님들께서 꼼꼼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선정 기간이 좀 더 길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㉔ 해냄에듀에서는 교과서 뿐만 아니라 수능참고서에서도 선생님들과 학생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냄에듀의 개발 본부는 교육 출판계에서 우수한 성과들을 거둔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곳입니다. 따라서, 출판 기획력도 타 회사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콘텐츠라도 최상의 기획과 만나지 못하면 그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냄에듀의 제품들에 대한 반응이 좋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좋은 기획력이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수능 참고서의 특성상 집필자가 얼마나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가도 제품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해냄에듀의 모든 참고서는 평가원과 교육청, EBS 출제 위원 등 대한민국 최고의 집필진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들 수 있는 것은 제품의 철저한 검증입니다. 해냄에듀 참고서는 개발 과정에서 현장 교사와 학생들의 객관적이면서 엄정한 검증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

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과감하게 걸러냅니다.

지금까지 해냄에듀에서 좋은 제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㉕ 끝으로, 해냄에듀의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해냄에듀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최고의 교과서와 문제집을 개발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며, 뛰어난 필자들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육 환경과 매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교과서와 관련해서는 국어 과목을 전문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해냄출판사와 해냄에듀의 역량을 집중하여, 국어 과목에 관련한 최고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겠습니다. 물론 교과서를 뒷받침하는 교수 학습 자료들도 최상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교과서 전문 연구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직 국어 교과서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팀이죠.

학교 도서관 지원 사업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항목입니다. 이는 해냄에듀가 해냄출판사와 자매 회사 관계라는 점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육 출판사에서는 학교 도서관을 지원하기 힘들지만, 저희의 경우 수많은 단행본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학교 도서관 저널' 발간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㉖

■ 대담 / 김종일(한국교과서연구재단 사무국장)

2010년도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의거하여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적용 기간: 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2. 보상 대상: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687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
3. 보상 기준
 - 1)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
 - 2) 원 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분배비율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분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 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 3)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 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 (1만 부 기준)

저작물별		보상 기준	보상 금액	비고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796원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8,026원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 이상 1/2편 이하	4,003원	
		1/4편 미만	2,410원	
음악 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5,172원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이상 1/2편 미만	2,580원	
		1/4편 미만	1,529원	
미술 사진 저작물		1/2쪽 이상 1쪽 이하	7,890원	
		1/4쪽 이상 1/2쪽 미만	3,929원	
		1/4편 미만	2,347원	

※ 최저 1만 부 이하는 1만 부로 하고, 1만 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부수에 비례함.

※ 교과용 도서 보상금은 사단 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한 지정 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초등학교 국·검·인정 도서 구분 고시

교과(군)	국정 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바른 생활	○ 교과서 바른 생활 1-1/ 1-2/ 2-1/ 2-2 생활의 길잡이 1-1/ 1-2/ 2-1/ 2-2 ○ 지도서 바른 생활 1-1/ 1-2/ 2-1/ 2-2 【12종】		
슬기로운 생활	○ 교과서 슬기로운 생활 1-1/ 1-2/ 2-1/ 2-2 ○ 지도서 슬기로운 생활 1-1/ 1-2/ 2-1/ 2-2 【8종】		
즐거운 생활	○ 교과서 즐거운 생활 1-1/ 1-2/ 2-1/ 2-2 ○ 지도서(CD 포함) 즐거운 생활 1-1/ 1-2/ 2-1/ 2-2 【8종】		
국어	○ 교과서(CD 포함) 듣기 말하기 1-1/ 1-2/ 2-1/ 2-2 읽기 1-1/ 1-2/ 2-1/ 2-2/ 3-1/ 3-2/ 4-1/ 4-2/ 5-1/ 5-2/ 6-1/ 6-2 쓰기 1-1/ 1-2/ 2-1/ 2-2 듣기 말하기 쓰기 3-1/ 3-2/ 4-1/ 4-2/ 5-1/ 5-2/ 6-1/ 6-2 ○ 지도서(CD 포함) 국어 1-1/ 1-2/ 2-1/ 2-2/ 3-1/ 3-2/ 4-1/ 4-2/ 5-1/ 5-2/ 6-1/ 6-2 【40종】		
사회/도덕	○ 교과서 사회 3-1/ 3-2/ 4-1/ 4-2/ 5-1/ 5-2/ 6-1/ 6-2 사회과 탐구 4-2/ 5-1/ 5-2/ 6-1/ 6-2 사회과 부도 4~6(합본) ○ 지도서 사회 3-1/ 3-2/ 4-1/ 4-2/ 5-1/ 5-2/ 6-1/ 6-2 【22종】		
	○ 교과서 도덕 3-1/ 3-2/ 4-1/ 4-2/ 5/ 6 생활의 길잡이 3-1/ 3-2/ 4-1/ 4-2/ 5/ 6 ○ 지도서 도덕 3-1/ 3-2/ 4-1/ 4-2/ 5/ 6 【18종】		
수학	○ 교과서(CD 포함) 수학 1-1/ 1-2/ 2-1/ 2-2/ 3-1/ 3-2/ 4-1/ 4-2/ 5-1/ 5-2/ 6-1/ 6-2 수학 익힘책 1-1/ 1-2/ 2-1/ 2-2/ 3-1/ 3-2/ 4-1/ 4-2/ 5-1/ 5-2/ 6-1/ 6-2 ○ 지도서 수학 1-1/ 1-2/ 2-1/ 2-2/ 3-1/ 3-2/ 4-1/ 4-2/ 5-1/ 5-2/ 6-1/ 6-2 【36종】		

교과(군)	국정 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과학/실과	○ 교과서 과학 3-1/ 3-2/ 4-1/ 4-2/ 5-1/ 5-2/ 6-1/ 6-2 실험 관찰 3-1/ 3-2/ 4-1/ 4-2/ 5-1/ 5-2/ 6-1/ 6-2 ○ 지도서(CD 포함) 과학 3-1/ 3-2/ 4-1/ 4-2/ 5-1/ 5-2/ 6-1/ 6-2 【24종】		
		○ 교과서 실과 5/ 6 ○ 지도서 실과 5/ 6 【4종】	
체육	○ 교과서 체육 3/ 4 ○ 지도서 체육 3/ 4 【4종】	○ 교과서 체육 5/ 6 ○ 지도서 체육 5/ 6 【4종】	
예술 (음악/미술)	○ 교과서 음악 3/ 4 ○ 지도서(CD 포함) 음악 3/ 4 【4종】	○ 교과서 음악 5/ 6 ○ 지도서(CD 포함) 음악 5/6 【4종】	
	○ 교과서 미술 3~4(합본) ○ 지도서 미술 3~4(합본) 【2종】	○ 교과서 미술 5~6 (합본) ○ 지도서 미술 5~6 (합본) 【2종】	
영어		○ 교과서(CD 포함) 영어 3/ 4/ 5/ 6 ○ 지도서 영어 3/ 4/ 5/ 6 【8종】	○ 학생용 전자 저작물 3/ 4/ 5/ 6 【2종】 ○ 교사용 전자 저작물 3/ 4/ 5/ 6 【4종】
총계	교과서 115종, 지도서 63종	교과서 11종 지도서 11종	전자 저작물 8종

범례 1) 동 고시문에 표기된 인정 도서 중, “*” 표기가 없는 도서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3항 및 제16조 제1항에 의거 시
도 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교과용 도서임.

2) 동 고시문에 표기된 인정 도서 중, “*” 표기가 있는 도서 또는 동 고시문에 표기되지 않은 도서는 규정 제14조 제1항 및 제16조
제2항에 의거 시 도 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단, 교육청 주관으로 개발한 도서는 시 도 교육청별 인정 도서
관련 규정에 의거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국정은 1종 1책이며, 검 인정은 1종 다책임.

중학교 국·검·인정 도서 구분 고시

교과(군)	국정 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국어		○ 교과서(CD 포함) 국어 1-1/ 1-2/ 2-1/ 2-2/ 3-1/ 3-2 생활 국어 1-1/ 1-2/ 2-1/ 2-2/ 3-1/ 3-2 【12종】	○ 지도서 국어* 1/ 2/ 3 【3종】
사회(역사 포함) /도덕		○ 교과서 도덕 1/ 2/ 3 【3종】	○ 지도서 도덕* 1/ 2/ 3 【3종】
		○ 교과서 사회 1/ 3, 사회과 부도 역사(상), (하) 역사 부도 【6종】	○ 지도서 사회* 1/ 3, 역사* 【3종】
수학		○ 교과서(CD 포함) 수학 1/ 2/ 3 수학 익힘책 1/ 2/ 3 【6종】	○ 지도서 수학 1/ 2/ 3 【3종】
과학/ 기술 가정		○ 교과서 과학 1/ 2/ 3 【3종】	○ 지도서 과학 1/ 2/ 3 【3종】
		○ 교과서 기술 가정 1/ 2/ 3 【3종】	○ 지도서 기술 가정 1/ 2/ 3 【3종】
체육		○ 교과서 체육 1/ 2/ 3 【3종】	○ 지도서 체육 1/ 2/ 3 【3종】
예술 (음악/미술)		○ 교과서 음악 1/ 2/ 3 【3종】	○ 지도서(CD 포함) 음악 1/ 2/ 3 【3종】
		○ 교과서 미술 【1종】	○ 지도서 미술 【1종】
영어		○ 교과서(CD 포함) 영어 1/ 2/ 3 영어 학습 활동책 1/ 2/ 3 【6종】	○ 지도서 영어 1/ 2/ 3 【3종】
선택		○ 교과서 한문 1/ 2/ 3 【3종】	○ 지도서 한문 1/ 2/ 3 【3종】
		○ 교과서 정보 1/ 2/ 3 【3종】	○ 지도서 정보 1/ 2/ 3 【3종】
		○ 교과서 환경 【1종】	○ 지도서 환경 【1종】
	○ 교과서(CD 포함) 생활 독일어/ 생활 프랑스 어/ 생활 스 페인 어/생활 러시 아 어/ 생활 아랍 어 【5종】	○ 교과서(CD 포함) 생활 중국어/ 생활 일본어 【2종】	○ 지도서 생활 중국어/ 생활 일본어 【2종】
		○ 교과서 보건 【1종】	
			○ 교과서 진로와 직업* 【1종】
총계	교과서 5종	교과서 56종	교과서 1종, 지도서 37종

고등학교 국·검·인정 도서 구분 고시

【 보통 교과 】

교과(군)	국정 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국어		○ 교과서 국어/ 화법과 작문 I / 화법과 작문 II / 독서와 문법 I / 독서와 문법 II / 문학 I / 문학 II 【7종】	○ 지도서 국어 / 화법과 작문 I / 화법과 작문 II / 독서와 문법 I / 독서와 문법 II / 문학 I / 문학 II 【7종】
수학		○ 교과서 수학/ 수학 익힘책/ 수학의 활용/ 수학 의 활용 익힘책/ 수학 I / 수학 I 익힘 책/ 미적분과 통계 기본/ 미적분과 통 계 기본 익힘책/ 수학 II / 수학 II 익힘 책/ 적분과 통계/ 적분과 통계 익힘책/ 기하와 벡터/ 기하와 벡터 익힘책 【14종】	○ 지도서 수학/ 수학의 활용/ 수학 I / 미적분과 통계 기본/ 수학 II / 적분과 통계/ 기하 와 벡터 【7종】
영어		○ 교과서(CD 포함) 영어/ 영어 학습 활동책/ 영어 I / 영어 II / 실용 영어 회화/ 심화 영어 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8종】	○ 지도서 영어/ 영어 학습 활동책/ 영어 I / 영어 II / 실용 영어 회화/ 심화 영어 회화/ 영 어 독해와 작문/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8종】
사회(역사/ 도덕 포함)		○ 교과서 사회/ 한국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동아시아사/ 세계사/ 한국 지리/ 세계 지리/ 도덕/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12종】	○ 지도서 사회* / 한국사* / 법과 정치/ 경제/ 사 회 문화/ 동아시아사/ 세계사/ 한국 지 리/ 세계 지리/ 도덕* / 윤리와 사상/ 생 활과 윤리 【12종】
과학			○ 교과서 과학* / 물리 I * / 물리 II * / 화학 I * / 화 학 II * / 생명 과학 I * / 생명 과학 II * / 지구 과학 I * / 지구 과학 II * ○ 지도서 과학 【10종】
체육		○ 교과서 체육 【1종】	○ 교과서 운동과 건강 생활* / 스포츠 문화* / 스 포츠 과학* ○ 지도서 체육 【4종】

교과(군)	국정 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예술 (음악/미술)		○ 교과서 음악 【1종】	○ 교과서 음악과 사회* / 음악의 이해* ○ 지도서(CD 포함) 음악 【3종】
		○ 교과서 미술 【1종】	○ 교과서 미술과 삶* / 미술 감상* / 미술 창작* ○ 지도서 미술 【4종】
기술 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 교과서 기술 가정 【1종】	○ 교과서 농업 생명 과학* / 공학 기술* / 가정 과학* / 창업과 경영* / 해양 과학* / 정보* ○ 지도서 기술 가정 【7종】
	○ 교과서(CD 포함) 러시아 어 I / 아 랍 어 I 【2종】	○ 교과서(CD 포함) 독일어 I / 프랑스 어 I / 스페인 어 I / 중 국어 I / 일본어 I 【5종】	○ 교과서(CD 포함) 독일어 II* / 프랑스 어 II* / 스페인 어 II* / 중국어 II* / 일본어 II* / 러시아 어 II* / 아랍 어 II* 【7종】
		○ 교과서 한문 I 【1종】	○ 교과서 한문 II* 【1종】
	○ 교과서 안전과 건강 【1종】	○ 교과서 보건 【1종】	○ 교과서 생활과 철학/ 생활과 논리/ 생활과 심 리/ 생활과 교육/ 생활과 종교/ 생활 경 제/ 진로와 직업/ 환경과 녹색성장* 【8종】
총계	교과서 3종	교과서 52종	교과서 39종, 지도서 39종

【 전문 교과 】

교과(군)	국정 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농생명 산업	○ 교과서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농업 정보 관 리/ 생물 공학 기초/ 재배 및 작물 생산 기술/ 숲과 인간/ 원예 및 생활 원예/ 동 물 자원/ 조경/ 농업과 물/ 식품 과학/ 농 산물 유통/ 환경 보전/ 농업과 관광 【14종】		○ 교과서 농업 경영/ 산림 자원 기술/ 생산 자재/ 원예 기술 I II / 사육 기술 I / 사육 기술 II / 누에와 비단/ 조경 기술 I II / 농촌과 농지 개발/ 농업 토목 기술 I / 농업 토목 기술 II / 농업 기계 및 농업 기계 기술 I / 농업 기계 기술 II / 농업 기계 공작/ 식품 위생/ 식품 가공 기술 I II / 농산물 유통 관리 I / 농산물 유통 관리 II / 환경 관리 I / 환경 관리 II 【20종】

교과(군)	국정 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농생명 산업	<p>○ 교과서</p> <p>기계 제도/ 토목 제도 및 설계/ 건축 설계 제도/ 디자인 제도/ 선박 제도/ 기계 일반/ 전기 일반/ 공업 영어/ 기계 설계/ 기계 공작법/ 기계 기초 공작/ 공작 기계 I II/ 전자 기계 이론/ 전자 기계 회로/ 금속 제조/ 재료 가공/ 주조/ 전기 회로/ 전기 기기/ 전력 설비 I/ 전자 회로/ 통신 일반 및 시스템/ 디지털 논리 회로/ 측량/ 역학/ 토목 재료 시공/ 건축 구조/ 건축 계획 일반/ 디자인 일반/ 색채 관리/ 조형/ 공예/ 공업 화학/ 기능성 세라믹/ 구조 세라믹/ 세라믹 디자인/ 발효 공업/ 섬유 재료/ 방적 방사/ 인쇄 일반/ 인쇄 사진 재료/ 평판 인쇄/ 사진 전자 제판/ 자동차 건설 기계/ 자동차 기관/ 자동차 배기/ 선박 이론/ 항공기 일반/ 항공기 기체/ 항공기 전자 장치/ 환경 공업 일반/ 수질 관리/ 로봇 기초/ 컴퓨터 게임 기획/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 컴퓨터 게임 그래픽/ 만화 애니메이션 기초/ 만화 창작/ 영화 방송 제작/ 촬영 조명/ 방송 시스템 【61종】</p>	<p>○ 교과서</p> <p>공업 입문/ 기초 제도/ 정보 기술 기초 【3종】</p>	<p>○ 교과서</p> <p>컴퓨터 구조/ 시스템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 정보 통신/ 특수 인쇄/ 사진/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제작/ 원동기/ 유체 기기/ 공기 조화 설비/ 산업 설비/ 금형 제작/ 전자 기계 공작/ 전자 기계 제어/ 금속 처리(상)/ 금속 처리(하)/ 전기 응용/ 전력 설비 II/ 전기 전자 측정/ 자동화 설비/ 전자 기기/ 전자 전산 응용/ 계측 제어/ 토목 일반/ 수리 토질/ 지적 전산 및 실무/ 건축 시공 I II/ 제품 디자인/ 단위 조작 공정 제어/ 제조 화학/ 분석 화학/ 세라믹 원리 공정/ 식품 제조 기계/ 식품 분석/ 식품 공업 기술/ 제포 봉제/ 염색 가공/ 자동차 전기 전자 제어/ 건설 기계 구조 정비/ 자동차 차체 수리/ 선박 구조/ 선박 건조/ 항공기 기관/ 항공기 장비/ 대기 소음 방지/ 폐기물 처리/ 로봇 제작/ 재료 일반/ 건축 목공/ 시각 디자인 【51종】</p>
상업 정보	<p>○ 교과서</p> <p>금융과 생활/ 경영과 법 및 국제화와 기업 경영 【2종】</p>	<p>○ 교과서</p> <p>상업 경제/ 회계 원리/ 컴퓨터 일반 【3종】</p>	<p>○ 교과서</p> <p>원가 회계/ 세무 회계/ 무역 영어/ 기업과 경영/ 기업 자원 관리/ 전자 상거래 일반/ 창업 일반/ 멀티미디어 일반/ 전산 회계/ 자료 처리/ 프로그래밍 실무/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 관리 실무/ 멀티미디어 기획/ 멀티미디어 실무/ 웹 프로그래밍/ 인터넷 쇼핑몰 관리/ 전자 상거래 실무/ 인터넷 마케팅/ 기업 회계/ 마케팅과 광고/ 경영 정보 시스템/ 커뮤니케이션 실무/ 전자 무역과 국제 상무/ 유통 정보 및 물류 관리 【25종】</p>
수산 해운	<p>○ 교과서</p> <p>수산 일반/ 해사 일반/ 해양 일반/ 수산 해운 정보 처리/ 수산 생물/ 수산물 유통/ 해양 환경 및 해양 오염/ 열기관/ 잠수 기술/해양 레저 관광/ 항만 물류 일반/ 해양 정보 관리 【12종】</p>		<p>○ 교과서</p> <p>생선회 실무/ 수산 경영 일반/ 해양 생산 기술(상)/ 해양 생산 기술(하)/ 수산 양식(상)/ 수산 양식(하)/ 양식 생물 질병/ 수산 가공(상)/ 수산 가공(하)/ 냉동 일반/ 냉동 기계/ 냉동 공조 실무/ 선박 보조 기계/ 선박 전기 전자/ 기계 설계 공작/ 항해/ 선박 운용/ 해사 법규/ 해사 영어/ 선화 운송/ 전자 통신 공학/ 전자 통신 기기/ 전자 통신 운용 【23종】</p>

교과(군)	국정 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가사 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CD 포함) 관광 영어 ○ 교과서 인간 발달/ 식품과 영양/ 급식 관리/ 한국 조리/ 의복 재료 관리/ 패션 디자인/ 자수와 편물/ 주거/ 영 유아 교육 원리/ 관광 일반/ 간호의 기초 및 보건 간호/ 기초 복지 서비스/공중 보건 【14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CD 포함) 관광 일본어/ 관광 중국어 ○ 교과서 제과 제빵/ 관광 경영 실무/ 헤어 미용/ 피부 관리/ 메이크업/ 동 서양 조리/ 한국 서양 의복 구성/ 실내 디자인/ 가구 디자인/ 디스플레이/ 영 유아 교육 프로그램/ 영 유아 놀이 교육/ 영 유아 생활 지도/ 관광 서비스 실무/ 관광 외식 조리/ 기초 간호 임상 실무/ 노인 생활 지원 【19종】
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 물리 실험/ 화학 실험/ 생명 과학 실험/ 지구 과학 실험/ 과학사/ 전자 과학/ 정보 과학 I / 정보 과학 II / 고급 수학/ 고급 물리/ 고급 화학/ 고급 생명 과학/ 고급 지구 과학/ 환경 과학/ 현대 과학과 기술 【15종】
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 스포츠 개론/ 스포츠 경기 과학/ 체육과 진로 탐구/ 육상 운동/ 체조 운동 【5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 수상 운동/ 개인 대인 운동/ 단체 운동/ 투기 운동/ 빙상 설상 운동/ 표현 창작 운동/ 체력 운동/ 전문 스포츠 경기 체력/ 전문 스포츠 경기 초급/ 전문 스포츠 경기 중급/ 전문 스포츠 경기 고급/ 전문 스포츠 경기 실습/ 스포츠 교육/ 코칭론/ 건강 관리/ 스포츠 경영 행정 전공 실기 【16종】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 시창 청음/ 합창/ 합주/ 컴퓨터와 음악/ 소묘/ 기초 회화/ 기초 디자인 공예/ 영상 매체와 미술/ 미술 감상과 비평/무용 감상과 비평/ 문장론/ 고전 문학의 감상과 비평/ 현대 문학의 감상과 비평/ 시 창작/ 소설 창작/ 희곡 창작/ 매체와 문학/ 연극 감상과 비평/ 영화 기술/ 영화 창작과 표현/ 영화 감상과 비평/ 기초 촬영/ 중급 촬영/ 디지털 사진 촬영/ 디지털 사진 표현 기법/ 사진 감상과 비평/ 음악 이론/ 음악사 감상/ 미술 이론/ 미술사/ 무용의 이해/ 문학의 이해/ 연극의 이해/ 영화의 이해/ 사진의 이해 【35종】

교과(군)	국정 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외국어	<p>○ 교과서(CD 포함)</p> <p>심화 영어/ 영어 청해/ 기초 독일어/ 독일어 청해/ 기초 프랑스어/ 프랑스어 청해/ 기초 스페인어/ 스페인어 청해/ 기초 중국어/ 중국어 청해/ 기초 일본어/ 일본어 청해/ 기초 러시아어/ 러시아어 청해/ 기초 아랍어/ 아랍어 청해/ 영어 회화 I/ 영어 독해/ 영어권 문화 I/ 독일어 회화 I/ 독일어 독해/ 독일어권 문화 I/ 프랑스어 회화 I/ 프랑스어 독해/ 프랑스어권 문화 I/ 스페인어 회화 I/ 스페인어 독해/ 스페인어권 문화 I/ 중국어 회화/ 중국어 독해/ 중국 문화 I/ 일본어 회화 I/ 일본어 독해/ 일본 문화 I/ 러시아어 회화 I/ 러시아어 독해/ 러시아 문화 I/ 아랍어 회화 I/ 아랍어 독해/ 아랍 문화 I</p> <p style="text-align: right;">【40종】</p>		<p>○ 교과서</p> <p>영어 회화 II/ 영어 작문/ 영어권 문화 II/ 영어 문법/ 독일어 회화 II/ 독일어 작문/ 독일어권 문화 II/ 독일어 문법/ 프랑스어 회화 II/ 프랑스어 작문/ 프랑스어권 문화 II/ 프랑스어 문법/ 스페인어 회화 II/ 스페인어 작문/ 스페인어권 문화 II/ 스페인어 문법/ 중국어 회화 II/ 중국어 작문/ 중국 문화 II/ 중국어 문법/ 일본어 회화 II/ 일본어 작문/ 일본 문화 II/ 일본어 문법/ 러시아어 회화 II/ 러시아어 작문/ 러시아 문화 II/ 러시아어 문법/ 아랍어 회화 II/ 아랍어 작문/ 아랍 문화 II/ 아랍어 문법</p> <p style="text-align: right;">【32종】</p>
국제			<p>○ 교과서</p> <p>영어 강독/ 독일어 강독/ 프랑스어 강독/ 스페인어 강독/ 중국어 강독/ 일본어 강독/ 러시아어 강독/ 아랍어 강독/ 국제 정치 I/ 국제 정치 II/ 국제 경제 I/ 국제 경제 II/ 세계 문제/ 비교 문화 I/ 비교 문화 II/ 정보 과학/ 국제법/ 지역 이해/ 인류의 미래 사회/ 한국의 전통 문화/ 한국의 현대 사회/ 한국어</p> <p style="text-align: right;">【22종】</p>
총계	교과서 148종	교과서 6종	교과서 258종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 교과서별 구입처

교과서			발행사	전화 번호
국정 교과서	초등학교	○ 국어(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특수학교	미래엔컬처그룹	(02)3475-3800
		○ 영어(CD, TAPE 포함)	천재교육	(02)3282-2851
		○ 수학, 사회, 실과(1, 2학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생활의 길잡이, 즐거운 생활 포함)	두산동아	(02)3670-5109
		○ 도덕(생활의 길잡이 3~6학년 포함)	지학사	(02)330-5302
		○ 과학(실험 관찰 포함)	금성출판사	(02)2077-8145
		○ 예 체능(음악, 미술, 체육)	교학사	(02)701-5120
	중학교	○ 국어 2, 3학년(생활 국어 포함), 국사, 특별활동 지도 자료	두산동아	(02)3670-5109 (02)3475-3800
		○ 생활 외국어	천재교육	(02)3282-2851
		○ 도덕	지학사	(02)330-5302
	고등학교	○ 국어, 문법, 국사, 공업계, 수산계, 상업계 가사 실업계(이산 수학, 확률과 통계 포함)	두산동아	(02)3670-5109
		○ 도덕, 윤리 계열, 농업계	지학사	(02)330-5302
		○ 외국어계(아랍 어 1, 아랍어 2 포함)	천재교육	(02)3282-2851
		○ 과학계(생활과 과학, 고급 수학 포함)	금성출판사	(02)2077-8145
		○ 체육계(체육 개론, 스포츠 과학)	교학사	(02)701-5120
검정 교과서		위 교과서 이외의 교과서(인정 교과서 미포함)	한국검정교과서	(02)2657-3540~4

| 서울 지역 직매장

- (주)미래엔컬처그룹 직매장 - 모든 국정 교과서를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41-10 (주)미래엔컬처그룹 빌딩 1층(☎ 02-3475-4097)
- 지하철: 7호선 노현역 5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소요
- 두산동아(주) 직매장 - 모든 국정(검정 일부) 교과서를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270번지 연강빌딩 2층(☎ 02-3670-5106, 9)
-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소요
- 한국검정교과서 직매장 - 모든 검정 교과서를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377-2 선일빌딩 2층 (☎ 02-3663-5409~12)
- 지하철: 6호선 망원역 2번 출구에서 마포구청 방향 30m 지점(인디안모드 2층)

「교과서연구」지의 발간에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여 분야 <현장 교육>, <논단>, <단상>, <나의 제언>, <교과서 편집자의 변>

교육과정과 교과서 관련 연구 활동, 교과 운영과 교과서 활용 사례 연구 활동,
교과서와 관련된 제언 또는 단상, 기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등

- | | |
|---------|---------------------------------|
| · 원고 매수 | 200자 원고지 30매 기준(A4, 10포인트 3.5매) |
| · 원고 제출 | 수시 접수 |
| · 원 고 료 |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 지급 |
| · 보내실 곳 | E-mail 접수(editor@ktrf.re.kr) |
| · 기타 문의 | 전화 (02) 2651-1953 연구지 담당자 앞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파일(F) 편집(E) 보기(V) 즐겨찾기(A) 도구(T) 도움말(H)

주소(D) http://www.ktrf.re.kr/ 이동

HOME CONTACT US SITEMAP

한국교과서연구재단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재단소개 교과서연구 교과서정보관 출판교실 알림마당 참여마당

0 2 . 2 6 5 1 . 1 9 5 0

교과서정보관 이용안내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이 분야의 전문가와 교과용 도서 개발의 기획·집필·편집·제작을 담당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전철_전철 7호선 논현역 3번 출구
● 버스_3412, 462, 4312, 642, 9408번

| 운영 개요

- 우리나라 교과서의 수집 및 보존
- 외국의 교과서 수집 및 보존
- 교육과정 편수 자료의 수집 및 보존
- 교육과정 교과서 제도 관련 자료 수집 및 보존
- 교과서 관련 자료의 DB 및 정보 인프라 구축
- 교과서 관련 연구 단체 협력 체제 구축
- 교과서 및 교육과정 정보 제공
- 교과서 비교 전시회 개최 등

| 보유 자료

구 분	국 내	국 외	계
교과용 도서	32,274	6,587	38,861
일반 자료	2,928	-	2,928
계	35,202	6,587	41,789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집트, 중국, 대만, 베트남,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태국, 이란, 호주,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의 교과서 보유

| 열람 시간

구 분	시 간
평 일	09:00 ~ 17:00
토요일	휴관
공휴일	휴관